

제422회 국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2월18일(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5)
2.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4)
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6)
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7)
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29)
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5)
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7)
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3)
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8)
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9)
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3)
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3)
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1)
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1)
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0)
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7)
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4)
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6)
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7)
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6)
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1)
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0)
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2)
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3)
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3)
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5)
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73)

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86)
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5)
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6)
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09)
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33)
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5)
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7)
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0)
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9)
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91)
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97)
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21)
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7)
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3)
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53)
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9)
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7)
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0)
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9)
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0)
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25)
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4)
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3)
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4)
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83)
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01)
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69)
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8)
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30)
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9)
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5)
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5)
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56)
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0)
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95)
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3)
6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8)

6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7)
6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9)
7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2)
7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7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8)
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0)
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1)
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20)
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0)
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6)
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6)
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3)
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9)
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3)
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1)
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7)
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1)
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2)
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1)
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72)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6)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9)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7)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6)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0)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1)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4)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7)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7)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9)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5)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52)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8)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5)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3)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9)

10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4)
10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8)
1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1)
1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9)
1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4)
1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80)
1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0)
112. 현안 질의
 - 가. 기획재정부
 - 나. 한국은행

상정된 안건

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5) 8
2.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4) 8
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6) 8
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7) 8
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29) 8
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5) 8
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7) 8
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3) 8
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8) 8
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9) 8
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3) 8
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3) 8
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1) 8
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1) 8
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0) 8
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7) 8
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4) 8
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6) 9
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7) 9
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6) 9
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1) 9
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0) 9
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2) 9
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3) 9
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3) 9
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5) 9

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73)	9
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86)	9
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5)	9
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6)	9
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09)	9
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33)	9
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5)	9
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7)	9
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0)	9
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9)	9
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91)	9
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97)	9
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21)	9
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7)	9
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3)	9
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53)	9
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9)	9
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7)	9
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0)	9
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9)	9
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0)	9
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25)	9
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4)	9
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3)	9
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4)	9
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83)	9
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01)	9
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69)	9
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8)	9
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30)	9
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9)	10
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5)	10
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5)	10
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56)	10
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0)	10
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95)	10
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6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3)	10

6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8)	10
6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6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7)	10
6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9)	10
7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2)	10
7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7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10
7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8)	10
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0)	10
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1)	10
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20)	10
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0)	10
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6)	10
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6)	10
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3)	10
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9)	10
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3)	10
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1)	10
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7)	10
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1)	10
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2)	10
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1)	10
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72)	10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6)	10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9)	10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7)	10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6)	10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0)	10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1)	10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4)	10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7)	10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7)	11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9)	11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5)	11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52)	11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8)	11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5)	11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3)	11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9)	11
10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4)	11
10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8)	11
1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1)	11
1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9)	11
1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4)	11
1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80)	11
1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0)	11
112. 현안 질의	19
가. 기획재정부	
나. 한국은행	

(10시47분 개의)

○**위원장 송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부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경제재정소위원회와 조세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여 의결하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 사보임 및 소위 위원 개선이 있어 알려 드리겠습니다.

2월 14일 자로 우리 위원회의 박수민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신동욱 위원님이 보임되었으며, 신동욱 위원님께서서는 조세소위 위원으로 보임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신동욱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장님 그리고 기재위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안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제가 갑자기 끼어들어 와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많이 공부하면서, 특히 야당 위원님들께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위원장 송언석** 우리 전체회의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훈훈한 풍경입니다.

그리고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 및 외교·안보 등의 사유로 참석이 어렵다는 요청이 있었으며 김윤상 기획재정부2차관은 국무회의 참석을 사유로 오전 11시 30분경 참석할 수 있다는 요청이 있어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전보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병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정지은 전문위원입니다.

주규준 행정실장입니다.

한지은 재정정책조사관입니다.

심영민 조세정책조사관입니다.

(인사)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담배사업법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였지만 아쉽게도 일부 이견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점이 있어서 오늘 소위원회를 통과시키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 간사님께서 조속히 정부하고 협의해서 대안을 다시 한번 조속히 심사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를 못 했던 세법들 중 일부가 오늘 전체 회의에 상정이 되는데 아직도 일부 세법안이 소위를 통과시키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있는데 일괄공제라든지 배우자공제, 자녀공제와 같은 공제액을 확대하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세율 조정과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 폐지 문제 그리고 기회발전특구를 비롯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 확대 이런 법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논의가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두 분 간사님께서 조속히 논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세소위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오늘 처리되지 못한 담배사업법을 비롯해서 다음에 전체회의를 할 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분 간사님께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5)
2.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4)
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6)
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7)
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29)
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5)
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7)
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3)
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8)
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9)
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3)
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3)
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1)
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1)
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0)
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7)
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4)

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6)
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7)
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6)
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1)
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0)
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2)
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3)
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3)
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5)
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73)
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86)
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5)
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6)
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09)
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33)
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5)
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7)
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0)
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9)
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91)
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97)
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21)
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7)
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3)
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53)
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9)
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7)
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0)
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9)
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0)
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25)
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4)
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3)
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4)
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83)
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01)
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69)
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8)
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30)

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9)
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5)
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5)
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56)
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0)
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95)
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3)
6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8)
6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7)
6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9)
7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2)
7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7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8)
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0)
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1)
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20)
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0)
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6)
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6)
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3)
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9)
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3)
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1)
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7)
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1)
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2)
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1)
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72)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6)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9)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7)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6)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0)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1)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4)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7)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7)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9)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5)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52)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8)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5)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3)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9)
10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4)
10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8)
1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1)
1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9)
1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4)
1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80)
1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0)

(10시51분)

○위원장 송언석 의사일정 제1항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11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11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조세소위원회의 박수영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조세소위원회 소위원장 박수영입니다.

우리 조세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이 많아서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먼저 작년 12월 10일 본회의에서 수정 통과된 법률안에 이미 그 내용이 반영되어서 입법취지가 달성된 법안들은 소위원회에 상정해서 폐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정안 반영 폐기 대상 안건은 소득세법 5건, 부가가치세법 1건, 중부세법 2건, 조세특례제한법 31건 등 총 39건입니다.

또한 69건의 세법 개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법인세법 중부세법 이상 2건의 법률 개정안은 수정안으로,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국세기본법 이상 4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안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박대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추가 취득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의 종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2023년 말에서 2026년 말로 3년 연장하였습니다.

참고로 해당 개정사항에 대하여 반대하는 소수의견이 있어서 심사보고서에 기재하기로 했습니다.

현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제도로 출자비용에 따른 비례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기재부는 과세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피출자법인 출자 비율에 따른 구간별

적정 익금불산입률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한 분의 소수의견이 있어서 기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임광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분 중부세액의 납부유예 적용 대상에 공동명의 1주택자를 추가했습니다. 다만 납부유예 신청을 위한 소득요건 중에 총급여액 기준을 현행 7000만 원으로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부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거래명세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고 반도체 설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반도체 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5%p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에 대해서는 7년 연장하였습니다.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였고 임투자세액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 적용기한을 2년 연장했습니다. 또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장기가입자가 경영 악화를 사유로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그 환급금을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출판업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수도권 소재 출판업 중기업도 추가를 했습니다.

또한 2024년 12월 31일 현재 10년 이상 된 노후자동차를 폐기하고 2025년 6월 30일까지 신차를 구입하여 신규등록하는 경우 100만 원 한도로 개소세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의 출자전환 손실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과 피출자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출자법인의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에 대하여는 한 분의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서 심사보고서에 기재하기로 했습니다.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세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 등 제출의무 미이행 납세자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근거를 신설했습니다.

다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거래 범위에 불균등 감자 등 자본거래를 추가하였고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축소하였으며 투자조합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민간항공기 협정대상 물품 등 항공기 부분품·원재료의 관세 감면과 관련해서 100%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만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세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자료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소위원회에서 합의 의결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재정소위원회의 정태호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경제재정소위원회 정태호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각 법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및 장기사용허가 특례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근거 법률의 제명 및 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 등 일반고객과 금융기관 간의 외환거래 중개인 대고객외국환중개업을 새로이 도입하고 원화표시 외평채의 발행 및 전자등록 등에 대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이 아닌 한국은행에서 수행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소위 심사 결과 대고객외국환중개업의 핵심사항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을 ‘그 밖의 자’에서 ‘전문금융기관 등에 속하지 아니한 외국환거래 상대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원화표시 외평채의 발행 및 전자등록 관련 동일한 취지의 정부위원회 소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에서 동 내용을 삭제한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회에서 법안심사에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 심사 결과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분? 세 분?

오기형 위원님 먼저……

○오기형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의견만 개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세소위에서 논의했던 것들 중에서 아까 소위원장께서 소수의견 언급하면서 1명의 소수의견 이야기하셔서 1명이 아니고 저도 같은 의견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2건 다. 이에 대한 의견들이 있다는 말씀을 일부러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제가 조세소위 하는 과정에서, 이후에도 논의할 때 기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법안, 조세소위에서 나오는 세법이 통과될 시점에서 과거로 소급하는 입법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논의된 것이니까 소위 의견을 존중하고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후에 논의할 때, 정부가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대가 생겨서 그걸 바꾸면 안 된다 내지는 적용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이후에 22대 국회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논거를 가지고 소급입법하는 것은 그만두면 좋겠다, 절제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차규근 위원님.

○차규근 위원 제가 조세소위에 참여하지 못하다 보니까 조세소위 통과한 법 관련해서 반대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소위를 통과한 법안 중에 국가전략기술 중에서도 반도체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이 있습니다. 반도체 지원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이 실효성과 효과가 입증된 것인지 의문입니다.

반도체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2021년 7월 3%에서 6%로 두 배 늘렸습니다. 그리고 1년 후인 2022년 12월에는 6%에서 또 8%로 높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듬해, 한 달 후인 이듬해 1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로 되겠냐는 식으로 한마디 하자 8%에서 또 15%로 올려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15%를 5% 올려 가지고 20%로 늘리면 불과 3년 만에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3%에서 20%로 일곱 배 늘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반도체 세액공제율은 2022년에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고 기재부 스스로 밝힌 바 있다는 것입니다.

기재부차관님, 그렇게 밝힌 바 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차규근 위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2월 30일에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월 3일 갑자기 세액공제를 8%에서 15%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비판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이번에…… 또 15% 올리는 데 합의한 것도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에 우리나라 반도체 세제지원이 주요국에 비해 높다고 설명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작년 11월입니다.

차관님, 맞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제가 정확한 건 기억나지 않고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차규근 위원 설명자료 보면 ‘우리나라의 첨단산업 연구개발 및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수준은 주요국보다 높습니다’라고 딱하니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세액공제 5%를 높인다? 이미 높은 수준의 세액공제를 이렇게 계속 높이면 반도체산업이 좋아지는 것입니까?

다음에 또 반도체산업 어렵다고 하면 또 늘리고 힘들다면 또 늘려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100% 할 때까지 늘릴 생각입니까? 어차피 지금 공제, 감면이 많아서 세액공제 늘려 봐야 최저한세율에 걸리게 되니까 사실상 큰 효과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반도체 신경 씁니다’ 과시하는 것 외에 대체 무슨 효과가 있다고 계속 공제율을 올리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이후 세액공제율이 3%에서 15%까지 늘어난 결과 투자 얼마나 늘었습니까? 여기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차관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관련해서 아마 투자는 늘어난 걸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차규근 위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삼성전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작년에 삼성전자 DS 부문 시설투자 46.3조 원입니다. 그런데 2023년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 차관님? 48.4조 원이었습니다. 오히려 2.1조 원 줄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글로벌 전체에 대한 투자 규모라는 것입니다.

차관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위원장님, 한 2~3분만 더 주십시오. 제가 조세소위에 못 들어가다 보니까……

○위원장 송언석 앞에 조작을 잘못해 가지고 벌써 1분 더 쓰셨어요.

○차규근 위원 조금만, 오랜만에 열렸는데 한번 봐 주시지요.

○위원장 송언석 예.

○차규근 위원 차관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당연히 국내 투자분에 대한 세액공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차규근 위원 그러면 지난해 삼성전자 DS 부문 시설투자 46.3조 원 중에 국내 투자가 그중에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제가 삼성전자만 가지고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요. 저희 전체적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을 보면……

○차규근 위원 좋습니다, 차관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개별 기업 실적이라고 하기에는 삼성전자의 규모가 얼마나 큼니까. 이번 법안도 삼성전자 염두에 두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삼성전자만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닙니다.

○차규근 위원 이걸 그냥 여러 기업 중의 하나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삼성전자가 지난해 국내 시설투자 얼마나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미국 투자가 늘어났으니까 국내 투자는 오히려 줄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깎아 줬는데 투자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또 5% 더 늘려 주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세수 부족이 30조 원 넘었는데……

1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위원장 송언석 마무리하시지요.

○차규근 위원 예.

지난해 세수 부족이 30조 원 넘었는데 이렇게 또 세금 깎는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이 참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2023년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실적을 보면 19개 기업에 세금 7432억 원을 깎아 줬습니다. 그런데 상호출자제한기업 포괄한 대기업 여덟 곳에 7432억 원, 전체 세액공제액의 99.7%가 몰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력 집중 완화될 수 있겠습니까? 산업구조 다변화되겠습니까? 불평등 해결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가야 할 길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높이는 것은 실효성도 없고 효과가 검증된 바 없으며 오히려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나라 재정을 갉아먹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고 위원장님께서서는 제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남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일에 부대의견 남기기 어렵다고 하신다면 표결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걸 위원 저는 오늘 석유화학 업종 등 지금 위기에 빠진 제조업체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문제에 대해서 약간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금 석유화학 업종 등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국의 덤핑 공세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경영 애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급감한 것은 물론이고 협력업체의 도산 그리고 또 거기 종사자, 근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의 해고 등등의 문제가 굉장히 크고 또 지역경제의 침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코 좌시할 수 없고, 아마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고 또 이 지역에 대해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는 검토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업체들은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지요. 그래서 특히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정을 개선하고 또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올라가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개발 투자 또 시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 정부에서 뒷받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된다면 투자액의 1%에서 3% 그거지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40%까지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러한 우리 산업의 뿌리를 지키고 있는 근간이 되는 어떤 주력 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어떠한 투자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뒷받침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세소위에서 논의도 되었습시다라는 아직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못 한 상태입니다. 추후에 정부에서도 아마 위기산업 업종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때 이 내용도 반드시 포함을 해서 검토해 주시고 여기 계신 기재위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앞부분의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정책은 신뢰와 예측가

능성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나 조세정책이야말로 정책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조세소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소급적용에 대한 오기형 위원님의 말씀이 앞부분에서 있으셨는데 저는 우리의 조세정책을 신뢰하고 믿었던 많은 분들이 정부의 또는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바뀐 입장으로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결국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반도체 세액공제 규모가 과다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 세계가 지금 반도체 패권 경쟁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각 국가가 사활을 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설비투자과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제도책이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밖에 없습니다. 반면 미국이나 일본은 세액공제에 더해서 국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국가별로 반도체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규모를 비교해 봤습니다. 반도체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데 20조 원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받을 수 있는 투자 인센티브는 약 1조 2000억입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에 보조금과 세액공제 규모를 합친 규모는 약 5조 5000억이고요 일본의 경우는 8조 원까지 늘어납니다. 제가 볼 때 전 세계가 사활을 걸고 있는 이 치열한 칩스 전쟁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세액공제 규모가 결단코 작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 다 함께 현명하게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잠깐만. 쟁점이 되는 지적이라서……

○위원장 송언석 오기형 위원님.

○오기형 위원 제가 가급적이면 위원님들 말씀하는 데 다른 반론 제기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조심스러운데 이 말씀은 좀 드러야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그것의 기대이익을 보장해야 된다고 정부가 결정하면 국회는 통법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그 주장을 국회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동의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곳인데 국회가 법을 만들지 않고 정부에서 지침 만들면 지침을 그냥 기계적으로 추진해 주는 그런 기구로 국회가, 특히 기재위가 작동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대이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은 국회가 절대 수용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국회가 굴러가려면 국회가 왜 있습니까? 삼권분립 할 필요가 없지요. 내란 일으키듯이 정부가 지시하면 다 따르고 그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지점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송언석 다른 질문 사항 없으시면 질의는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안건들은 국회법 제58조제5항과 제66조제3항 및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규근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아까 부대의견을 좀 남겨 달라

고 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위원장 송언석 차규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심사보고서에 아까 박수영 간사님이 보고하실 때 나왔듯이 동일한 차원에서 첨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항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63항까지 이상 56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4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5항 및 제6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7항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8항부터 제70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1항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은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3항부터 제111항까지 이상 39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수정안에 이미 그 내용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폐기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률안들에 대한 의결을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의 체계와 자구를 정리하는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안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12. 현안 질의

가. 기획재정부

나. 한국은행

(11시16분)

○위원장 송언석 의사일정 제112항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 대상 현안 질의를 상정합니다.

오늘 질의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순서표에 따라 실시하고 주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세 가지 카테고리인데, 첫 번째는 오늘 현안 질의입니다.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렵고 특히 민생경제가 거의 파탄 상태로 너무나 어렵고 국민들 걱정이 많으신데요. 2025년 첫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를 하는데 우리나라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하고 한국은행 총재 이렇게 다 오셨는데 최소한의 업무보고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궁금해하시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기획재정부하고 한국은행이 국민들한테 우리가 지금 경제정책을 이렇게 하고 있다, 국민들 안심하십시오. 그런데 업무보고가 빠져 있는, 현안 질의만 하는 이 상태가 저는 매우 유감스럽고요. 서면으로라도 추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그리고 산하기관들 업무보고 질의가 안 잡혀 있는 걸로 아는데 예를 들어서 국세청 관련해서 세수결손, 극우

유통비들의 과세, 세무조사 문제. 관세청,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 조달청, 중소기업 문제. 지금 현안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4개의 청, 산하기관 상대로 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보고를 받고 현안질의 할 수 있는 날짜를 꼭 좀 잡아 주십시오. 통상적으로 연초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없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자료 요구입니다. 기재부에 자료 요청을 합니다. 예비비 관련 사항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예비비 지출 내역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금년 예비비 심의할 때도, 예비비 2조 4000억 삭감할 때 제가 많은 자료 요구도 했고 주도적으로 했습니다만 심의에 필요한 예비비 자료 정말 기재부 안 내고 있습니다. 꼭 제출해 주십시오.

특히 지난 한 해, 12월 달에 예비비 지출, 사용한 것 중에 국정원에서 예비비 사용한 그 내용, 지금 의혹들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짚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2024년 한 해 동안의 예비비 지출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예비비 사용할 때 기획재정부에서 국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에 상정한 2024년 예비비 사용 안건 일체 내용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통상적으로 5월 달에 승인을 위해서 제출하니까 지금은 제출 못 하겠다, 요구에 응하지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데 그건 다릅니다. 5월 달은 심의 의결을 받기 위한 거고 상임위에서는 본 위원 질의에 필요한 거고, 국민들이 궁금해합니다.

위원장님께 꼭 자료 제출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언석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 필요한 자료는 잘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의사일정에 대해서, 다음 회의 일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두 분 간사님께 다시 한번 축구를 합니다.

지금 4개 청에 대한 업무보고도 중요하지만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께서도 상속세 관련해서 처리하기를 희망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상속세법 개정을 위한 조세소위를 조속히 개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전에 경제재정소위에서 담배사업법도 일부 문제점이 드러나서 지금 처리를 못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처리를 하는 것이 우리 입법부, 국회에 주어진 중요한 책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 간사님께서 조속히 조세소위하고 경제재정소위 개최하는 날짜를 정해 주시고 거기서 합의가 되면 또 전체회의를 해야 되니까 그 일정을 잘 좀 맞춰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상 위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사구시라는 표현을 아실 거고요. 또 우문현답이라는 오래된 사자성어가 있는데 정치영역에서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취지로도 사용됩니다. 지금 행정부와

국회가 모두 새겨야 할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주에 저희 금천구 소상공인들을 의원실에서 직접 만나 뵈었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떠신지요? 장사가 잘 되시는가요?’ 이런 질문을 했는데 ‘IMF 같다. 코로나 때가 더 장사가 잘됐다. 그때는 정부지원금이 나왔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창업하는 분보다 폐업하는 분들이 많다. 광고업도 힘들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계엄 영향이 어떠냐?’라고 질문드렸더니 ‘계엄 때문에 더 힘들다’는 말씀 계속하시고요. ‘매출도 20~30% 떨어졌다.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하십니다.

지표로도, 중기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시장 BSI를 봤더니 체감경기나 경기전망지수 등이 모두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하네요. 현장에서 이런 상황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고 국회는 무엇을 했는가라고 저도 질문을 받으면 답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차관님,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소상공인 체감경기는 워낙 그동안에 고물가·고금리에 따라서 안 좋았던 상황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엄 이후 지금 상황이 더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정부가 뭘 하셨는지 여쭙봤는데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정부는 소상공인 3종 세트, 금융 부담 완화라지 배달료 지원, 작년도에는 전기료 부담 완화 등 매출 증대 등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일들을 잘하셔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추후로 다시 말씀드리고요.

총재님께, 현장을 다녀 보니까 소위 실효물가요, 실제 체감하는 물가가 많이 오른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받았고요.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상인분들도 가격이 너무 올라서 힘들다는 말씀이 많았습니다. 총재님, 계속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계시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최기상 위원** 지난해 12월에 한국은행에서 칩플레이션 관련 보고서를 내셨더라고요. 그 내용을 봤더니 물가 급등기에는 저가 상품의 가격 상승률이 고가 상품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칩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고 취약계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커진다, 결국 인플레이션 불평등 심화로 이어진다는 이런 내용이던데요. 그래서 보고서에서도 물가안정 기조 유지와 중저가 상품의 가격 안정이 중요하다고 마무리를 했더라고요.

총재님, 이 보고서 작년 12월 달에 나왔는데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떤지 조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작년 이후로 지금 물가상승률은 안정돼 가고 있습니다. 다만 물가상승률이 안정되고 있더라도 양수기 때문에 물가 수준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고물가라고 얘기할 때 상승률이 아니라 물가 수준이 높아서 지금 고통받는 것은 그 정도가 약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계속 주장하는 얘기는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통해서 조절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물가 수준, 특히 저물가 상품의 수준이 높은 것은 금리 정책에 더해서 저희가 구조를 바꾸는, 예를 들어서 수입을 더 확대한다든지 여러 가지 구조에 관계된 개

혁 없이는 단기간에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기상 위원 앞으로도 계속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통령 탄핵 사건의 국회 소추단의 간사 겸 대변인이라 매번 변론에 다 참석해서 보고 있습니다.

차관님,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 담화문 전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아이돌봄 지원 수당,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등 삭감했다. 심지어 군 관련한 처우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다’. 이게 계엄 선포 사유 중의 하나로 나오는데 이것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박준섭 경제수석이 나와서 증언한 것 혹시 들으셨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자세한 내용은 못 들었는데 대략 봤습니다.

○최기상 위원 대략 보셨지요?

그리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받았다는 예비비가 표시된 문건, 이게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 알고 계시지요, 탄핵심판에서 중요한 것인지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제가 자세한 법률적인 사항은 잘 몰라서……

○최기상 위원 그래서 기재부가 이번에 계엄 선포 관련해서 계속 의혹의 중심에 있을 거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직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이십……

○최기상 위원 직전에 경제수석이였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최기상 위원 지금 차관님도 직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금융비서관 하셨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최기상 위원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도 직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선임행정관으로 일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최기상 위원 박준섭 경제수석은 직전에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이었습니다. 총재님 맞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맞습니다.

○최기상 위원 이 진용이 갖춰지게 됐고 그들이 했던 이 수많은 과정에 의문이 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고요.

첫 번째로 총재님께 여쭙습니다.

금융통화위원이 7개월 만에 경제수석으로 간 예가 있습니까? 적절합니까, 어떠세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 이전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기상 위원 그런 인사 총재님 계실 때 승낙하신 것 아닙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금통위원회 인사는 대통령께서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최기상 위원 대통령이 계엄 담화문에서 사유로 들었던 이 사유에 대해서 박준섭 경제수석이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들어 보면 제가 듣기에는 이 사유가 전체적으로 잘못됐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차관님, 이 증언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아마 제 기억이 맞다라고 하면 박근혜 수석은 아마 계엄의 원인이 되었던 것 같다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이 나고요. 거기에 대해서 부총리나 저희 기재부 입장은 아무리 그래도 계엄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게 저희 기재부의 입장입니다.

○**최기상 위원** 제가 여쭙보는 거는 대통령이 이렇게 표현한 이 부분이 좀 사실과 달라요, 진행 과정을 쫓 봤더니. 그런 얘기가 쫓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보고를, 대통령께 잘못된 보고를 누군가 했을 텐데 박근혜 실장은 전체적인 취지가 본인은 한 게 아니라는 취지예요. 그러면 기재부에서 했을 것 같거든요. 경제부총리나 차관, 예산총괄심의관이 다 직전 용산 대통령실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저희는 별도로 이 건과 관련해서 보고드린 적이 없습니다.

○**최기상 위원** 그러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듣고 쓰셨을까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그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결위에서 감액된 예산안 내용이랄지 그런 내용은 보고드린 적이 있지만 이 담화문에 대해서, 담화문 작성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기초 자료는 어떻게 보면 보고를 드렸을지 모르겠지만 이 자세한 하나하나의 워딩에 대해서는 저희는 전혀 보고드린 적이 없습니다.

○**최기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중에 가장 충격적인 말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말이 저는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비상계엄을 했고 비상계엄을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황인가에 대한 서로 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망상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이 우리 경제에 어떻게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가계, 기업, 정부 그리고 세계가 다 인식하고 공유하는 바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일부 여당의 분들만 그런 얘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어서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PPT를 한번 봐 주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계엄의 충격이 2024년 우리 경제와 올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를 보면 실제로 한국은행 경제성장률 11월 전망치와 잠정 실현 수치를 비교해 보면 실제로 한국은행에서 11월 전망치, 그러니까 12월에 마지막 종결되니까 11월 전망치에서 전망한 거는 대략 다 맞았습니다. 코로나 시기의 0.1%를 제외하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예측한 대로 결과를 냈는데 2024년 11월에 2.2% 성장을 전망했는데 결국은 2.0%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즉 12월에 특별한 경제적인 외적 변수가 없는 상황에서 0.2%의 경제성장률의 저하는, 결론은 비상계엄, 불법 계엄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우리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2025년에도 한국은행이 당초 전년도 전망에서 1.9%를 예측했는데 벌써 1월에 1.6~1.7%로 하향 전망을 했습니다.

2024년만 보더라도 우리 전체 GDP 2400조의 0.2%면 대략 4.8조, 5조 원, 올해 5조 원 해서 계엄의 충격으로 증발해 버린 국부가 대략 10조입니다. 10조면 5000만 명에 각 20만 원씩 세금이 부과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총재께서 보시기에 2024년 11월에 예측한 경제 전망치가 0.2% 하향한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저희가 이미 보고서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24년 말 4분기 숫자를 볼 때, 저희가 4분기 성장률을 0.5 정도 예측했는데 0.1로 0.4%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중에 반 정도가 계엄 및 정치적 불확실성에 의한 소비심리 하락 등 투자 지출 저하로 판단해서 이미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총재께서 말씀하셨듯이 결론은 12월 3일 불법 계엄에 의해 소비, 투자, 제반의 경제적 여건이 악화돼 나가면서 경제성장률 2.0으로 하향 조정이 됐고 결론은 올해도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된 겁니다.

실제로 2023년 7월의 예측이 정부 2.6%, 한국은행 2.2%, KDI 2.2%로 2024년 전망치를 7월에 대충 예측을 했는데 결론은 저렇게 하향이 됐습니다.

내년의 경제성장률도, 2025년 경제성장률도 2024년 7월 발표로 올해 예측을 정부는 2.2% 그런데 1.8%, 한국은행은 1.9% 예측했는데 말씀드렸듯이 1.6, KDI도 2.0에서 1.6으로 돼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결론은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충격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년간 실질경제성장률을 보면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금융위기 이후, 코로나 이후로 2023년에 1.4% 그리고 내년엔 1.6% 해서 최저 성장이 현재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1.4%는 지난 30년간 우리가 단 한 번도 일본에게 경제성장률이 뒤처지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역전된 해였습니다. 저성장 늪의 입구에 있는 것 같은 이 상황에서 한국은행 총재조차도 추경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총재님?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올해 성장률 1.6% 정도 저희들이 지금 다시 보고 있는데 이것은 정치적 불확실성 외에 미국의 여러 가지 경제정책이라든지 미 연준의 금리정책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1.9로 예측했는데 지금 1.6~1.7로 예측하는 것은 더 우하향의 우려가 상당히 크다. 즉 미국의 관세정책이라든지 미국의 대외경제 정책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영향력이 상당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 예측도 올해 1월의 예측이지 올 7월, 올 11월에 가면 더 우하향의 우려가 상당히 클 거라고 보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지금 현재 이번 25일에 저희가 금통위를 하면서 새로운 경제 예측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보다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저는 그런 우려가 크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기재부도 글로벌 신용사 관련한 신용등급에 대해서 대단히 유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피치가 낸 이 설명서를 보면 크게…… 전체 요약은 시간이 걸리니까, 세 가지를 보면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장기화할 경우 한국 경제에 리스크,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헌법 절차에 따라 해결될 것을 믿기에 한국에 대한 평가를 바

꾸지 않는다.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피치사 신용등급 유지 결정은 2025년 2/4분기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함, 이렇게 명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즉 현재 경제 불확실성의 핵심적 요소는 불법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대통령 파면이 민주적 회복 절차에 의해 진행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신용평가,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은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국제 신용평가사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비상계엄 해제, 대통령 탄핵, 대통령 파면이라고 하는 입장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소 유지하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 정도가 저는 최소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과 시장경제를 유지해 나가고 5200만 명 국민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기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 저는 대단히 우려스럽고 ‘불법 계엄 해제에 찬성하지 않는다’라는 여당 대표의 발언은 대단히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발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재부에서도 이 불확실성의 문제에 대해서 부총리가 얘기했듯이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1차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신용등급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김영진 위원 말씀해 주셨다시피 피치사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에 대해서 헌법 절차에 따라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 신용등급을 유지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말씀하셨던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 건 제가 이해하기로는 피치사의 의견이라기보다는 피치사가 투자자들로부터 듣는 일반적인 의견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뒤쪽에 보면 우리나라 신용등급 하향과 상방 요인으로 제시한 부분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정책결정, 재정관리의 효과적 관리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 신용등급이 하향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재정 투입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잘 모아 주시면 우리나라 신용등급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1차관님, 금방 앞선 위원님 답변 과정에서 야당의 예산 삭감이 기재부가 판단하기로는 비상계엄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그러니까 원인이 될 수 없다라고 아마 부총리께서 말씀을 이미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계엄을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이종욱 위원** 일단 예산 삭감 조치는 사실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엄의 원인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은 사실은 국정 최고통치자 입장에서 보는 것하고 지금 기재부 입장에서 보는 것하고 저는 다르다 생각을 하고 기재부가 ‘원인이 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내는 건 저는 좀 맞지 않다. 오히려 ‘비정상적인 상황이기’는 하지만 비상계엄의 원인을 제공했냐, 안 했느냐의 판단은 국정 최고통치자가 하는 거고 저희들 입장을 내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오히려 저는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경제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민생 회복이라든지 내수 침체 극복을 위해서 추경 논의가 작년 말부터 있더니 최근에는 굉장히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저는 이처럼 당연시되고 있는 추경 논의에 대해서 현재의 재정 상황을 감안하면 추경 논의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럴 여력이 있는지, 다른 부작용이 없는지 오늘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먼저 추경 사유에 해당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추경 사유는 국가재정법 89조에 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결국은 저기 사유 중에 될 수 있는 게 경기침체에 해당되느냐 하는 해석 문제라고 볼수만 경기침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해서 2차관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통상적으로 경기침체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그동안 저희 재정 당국에서는 2분기 또는 3분기 연속해서 GDP가 감소할 때를 경기침체로 봤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 기준에 보면 사실은 경제가 힘들기는 하지만 숫자는 그렇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KDI도 1.6% 성장률은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도 내고 있고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경제가 잠재성장률 2%를 하회하는 1%대로 추락했기 때문에 잠재성장률 갭을 메꾸기 위해서 추경을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PPT 화면 보시지요.

제가 잠재성장률하고 실질성장률을 한번 그래프로 그려 봤습니다. 추경 여부도 확인했고요.

사실 추경은 거의 매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00년대 이후에 25년 동안 추경을 안 한 경우가 딱 일곱 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경우에도 추경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상회하는 경우에도 추경을 한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존 정부에서 여러 가지 핑계라 그럴까요? 명분으로 추경을 해 왔습니다. 김대중 정부에 다섯 번, 노무현 정부 네 번, 이명박 정부 두 번, 박근혜 정부 세 번, 문재인 정부는 무려 열 번 했지요. 또 윤석열 정부는 취임할 때 한 번 했고 그 뒤로는 안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요건으로 보면 추경 사유는 안 됩니다만 지금까지 기존에 했던 것처럼 꼭 못 할 건 아닙니다. 문제가, 중요한 것은 재원 여력이겠지요.

추경 재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봤더니 한은에서 추가잉여금으로 생길 수 있는 게 한 3000억 정도 있는 것 같고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작년에 세수 부족 때문에 거의 없었지요. 추경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게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결국 4000억 정도만 실제 가용 재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추가국채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추경을 하게 되면 또 세입정정 문제도 대두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하면 엄청난 국채 추가 발행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우리나라 재정 상황입니다.

2차관님, 우리나라 재정 상황이 지금 민주당이 엇그제 제안한 것처럼 35조 원 추경을 할 여유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지금 저희 재정 당국에서 민주당에서 발표한 추경 규모나 추경 재원에 대해서 저희가 코멘트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구체적인 어떤 추경의 규모나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 주 목요일 날 개최되는 국정협의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추경을 해서 돈을 풀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국민들한테 재정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부채 비율은 OECD 평균보다는 낮습니다. 하지만 비기축통화 중에서는 굉장히 최상위권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400조 원 국가채무가 늘었고요, 2020년 기점으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재정수지 적자가 500조 원인데 이거는 지난 10년간의 두 배를 넘는 규모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걸 OECD 자료입니다.

OECD 평균 국가 부채는 최근 10년간 1.2% 늘었지만 우리나라는 15.8%, 무려 부채 증가 속도가 열세 배 빠릅니다.

문제는 장기 전망인데요.

그다음 표를 보시지요.

작년 말에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앞으로 복지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정확한 자료는 찾기 힘들었습니다만 대부분은 컨트리 리포트(country report) 중심으로 제가 한번 집계를 해 봤습니다.

현재의 수준에서 한국은 GDP 기준으로 56.6%입니다, GDP. 중간 정도에 있는데 한 2060년경으로 가시면 다른 나라들은 60, 70, 80% 정도 수준에 머물지만 우리나라는 154%입니다. 거의 미국하고 유사해지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재정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추경을 하게 되면 국가채무가 1300조가 넘고 적자재정이 100조입니다. 100조 원대로 늘어납니다. 물론 힘들기는 합니다만 이 정도 위기에 1년에 100조 빚을 늘리는 거는 저는 전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저희가 지금 추경을 할지, 안 할지 여부와 추경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종욱 위원** 오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한 세 분 정도 더 질의하시고 정회를 할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위원** 경기 구리 출신 윤호중 위원입니다.

1차관님, 지난 12월 3일 대한민국이 정치적 재난을 당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우리 경제가 위기로 빠져들어 가고 있었고 특히 내수 소비가 빈사 상태로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더 심각했던 것이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아우성이 그 이전서부터 있었습시다만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마치 삼각파도를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 이후에 12월 15일 피치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유지하면서 또 지금까지 지난달에도, 1월 달에도 유지를 하고 나름대로 재정 당국 그리고 한은의 거시 관리는 어느 정도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잘 관리해 오고 있는데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용등급이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차관님?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기본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신뢰였었고요. 나름대로 기재부나 한은 입장에서는 해외 투자자들과 열심히 소통해서 한국의 펀더멘털을 알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위원** 우선 155분 만에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신속하게 했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국회가 더 이상 예산심의를 제대로 못 하고 올해, 그러니까 25년도 예산을 통과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라고 전망했는데 12월 10일…… 이거는 기재부에서도 그 당시에만 평가를 하고 그 뒤로 여론, 언론 심지어 여당에서조차도 평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삭감 통과된 것은 맞지만 그 삭감 수준은 영 점 몇 %에 불과한 것이고 670조 규모의 국가예산을 법정시한에 맞춰서 국회가 의결했다, 통과시켰다, 그야말로 재정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원인. 그다음에 세 번째는 12월 14일 탄핵 의결함으로써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했다고 하는 게 지금 우리 경제가 현재와 같이 유지되고 있는 그 기반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 안 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윤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시 예산 통과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했던 부분은 있지만 여전히 당시에 합의 처리가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윤호중 위원** 여야 합의라고 하는 게 아름다운 것이지요. 그렇지요?

합의라고 하는 게 헌법에 있습니까? 헌법에 없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윤호중 위원** 국회법에 있습니까? 저는 못 찾아봤는데. 국회법에도 합의가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국회법의 의결 기준은 다수결입니다. 다수결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기본이에요. 다수결이 전제돼야지 소수의 의견을 감안하고 타협할 수 있습니다. 다수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타협이 가능하겠어요?

지금 1차관 국회에 와서 국회의 의결 방식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까? 잘못된 태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우리 경제가 불확실성에 빠져든 것은, 그러니까 12월 14일 이후에 불확실성에 빠져든 것은 탄핵과 관련한 바로 차관의 그런 태도, 한덕수 대행서부터 지금의 최상

목 대행에 이르기까지 국회의 의결을 부정하는 듯한 이런 발언.

그다음에 또 여당이 국회가 이미 의결한 탄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다수당의 단독 의결은 일방적 처리이고 인정할 수 없다, 그다음에 다수당 독주야말로 비상계엄의 원인이다, 그리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이 이것이 비상상황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판단을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정부의 주요 인사가 국회의 의결사항을 부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 여당의 주요 당직자들이 탄핵 인용이 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소위 말해서 탄핵 반대 집회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것이고 현재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제가 뭐,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제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피치에서 언급하신 부분을 제가 굳이 다시 쿼트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윤호중 위원** 아까 답변을 하셨으니까 답변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요.

한은 총재님!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윤호중 위원** 1월 달에 우리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약 20조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윤호중 위원** 그런데 기재부는 추경을 아직도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야 정, 그러니까 국정협의체를 통해서 논의하겠다는데 하면서 여전히 국회에 그 공을 떠넘기고 있어요.

그리고 20조의 추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지금 이와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 감안된 것이 아니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감안했습니다.

○**윤호중 위원** 했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윤호중 위원** 다음 두 번째,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이 부분도 감안한 것입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일부 반영돼 있습니다.

○**윤호중 위원** 일부 반영됐다고 하지만 지금의 속도라든가 그 정도는 1월 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존경하는 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새로운 데이터 때문에 추경 규모가 커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

리면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추경에 관해서는 시기, 규모, 내용 모두가 중요합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희 한국은행에서 15조~20조를 얘기할 때는 저희들이 장기 재정건전성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할 때 추경만으로 이 문제를 다, 자영업자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면 경기에도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장기 재정성에도 부담을 덜 주는 그런 규모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도 저희는 추경 규모가 15조~20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기재부2차관이 예산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촉구하기 전에 또 한국은행이 지적하기 전에 기재부는 예산 당국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호중 위원** 예.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그리고 두 정책 간의 폴리시 믹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673조라는 예산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1월 초부터 상반기 신속 집행과 그리고 저희가 가용한 재원으로 공공 부문 재정 보강을 통해서 일단 집행하는 데 현재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걸 위원** 광주 동·남을 안도걸 위원입니다.

2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안도걸 위원** 지금 최상목 대행께서 추경 관련해 가지고 추경의 필요성을 말씀하셨고 추경의 규모나 내용 이런 것에 관한 기준을 ‘국회에서 좀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아마 기재부 내부에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추경 규모에 대해서 총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5조 내지 20조. 아마 그 기준은 저걸 겁니다, 우리가 추경을 하겠다는 것은 지금 꺼져 가고 있는 경제를 좀 살리겠다. 그러면 살리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느냐, 잠재성장률 정도는 가야 되겠다. 그러면 잠재성장률과 실제 성장률 전망치 격차, GDP 갭은 메워 줘야 되겠다, 그 정도 갭을 메울 수 있는 유효수요를 정부 부분에서 좀 만들어 줘야 되겠다. 아마 그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인 논리는 그거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거기에 하나 더한다면 추경을 하게 되면 이번 한 해의 GDP 갭을 메꾸는 것만 보지 않고 그걸 다 메웠을 경우에 내년도에는 또 어떻게 될지 이런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고 있습니다.

○**안도걸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GDP 갭을 얼마로 볼 거냐 또 재정승수는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 가지고 아마 추경 소요가 결정이 될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마 단순 계산하면 IB 평균이 현재, 국제 IB 있지요, 우리나라 성장률을 1.6% 보더라고요. 그러면 GDP 갭을 0.4로 보면 추정 소요가 한 30조~40조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번에 민주당에서 35조 이야기했지요? 이렇게 되면, 우리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경제분석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돌려 봤어요. 그랬더니 GDP 성장률이 한 0.47% 정도 발생할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0.47%면 한은이 생각하는 규모보다 좀 더 크고 합나다라는 지출 내용에 있어서 훨씬 소비나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 사업을 아마 구성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보십시오.

민주당에서 이번에 제시한 35조 원의 추정 대상 사업안 보면 민생소비, 산업경쟁력 강화, 지역경쟁력 강화, 이걸 죄다 직접적으로 소비와 투자를 겨냥한 겁니다. 예를 들자면 상생소비촉진금이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소비자들이 카드를 평소에 비해서 많이, 일정 부분 초과했을 경우 10% 정도를 예를 들어 캐시백으로 돌려주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배 있지 않습니까, 재정투자의 10배 정도의 효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다 이 말씀을 조금 드리겠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지출의 성격들 좀 분석해 보니 그 모델을 적용해 봤을 때 한 0.47%p 정도의 성장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2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안도걸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당 안에서 제시한 사업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게 내수를 살리는 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그러니까 35조 원 추경을 발표하시면서 그중의 24조 원은 민생 관련된 부분, 11조 원은 산업경쟁력·지역경쟁력 강화를 말씀 주셨는데 개별사업에 대해서 2차관이 하나하나 다 코멘트하고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안도걸 위원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된다면 세입정정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아마 생길 것 같아요.

1차관님이 말씀 한번 주실래요?

작년도 세수결손이 확정이 됐지요? 30.8조 원, 예상보다 좀 많아요. 그리고 금년 세수 추계할 때 작년에 여러 전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전제의 변화가 크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안도걸 위원 작년에 우리 경제성장률을 2.2% 봤어요. 그런데 지금 1.6~1.8로 가라앉았지요? 법인세, 양도소득세, 유류세 각각 보면 이게 상당히 낙관적이에요. 법인세 같은 경우에도 작년 하반기에 수출기업의 수출이 많이 줄었어요, 영업이익도 예상보다 줄었고. 양도소득세도 보면 지금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또 유류세, 지금 정부가 유가 인하를 계속 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류세 연장을 하고 있지요, 등등등. 여기에 포함해서 내란 사태에 따른 경기 하강 충격 그리고 트럼프 리스크 이것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지금 상당히 세수결손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25년도 국세 증가율을 작년도 실적치 베이스로 하면 이게 13.6% 증가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것을 다 채워 넣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세수결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만약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된다면 세입경정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성장률이랄지 여러 가지 하방 위험이 커진 것 자체는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아직 1월 세수도, 1월 세수가 2월 말에 나오는데……

○안도걸 위원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그 숫자도 안 보고 현 단계에서 제가 어떤 방향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시기는 상조지만 이러한 세입·세수의 리스크가 크다는 점은 분명히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경은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추경을 하겠다는 건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지금 저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눈사람을 만들려고 그러면 눈몽치를 빨리 만들어서 한 번이라도 더 빨리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큰 눈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이왕에 추경을 하겠다고 하면 빨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것을 늦추십니까? 그렇지요?

지금 한국은행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경을 2분기에 하면 0.2%p GDP 갭을 메우기 위해서 20조면 된다. 그런데 3분기, 한 분기 늦춰진다면 30조까지 간다, 지금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왕에 추경을 하려고 하면 빨리하세요. 그래야만 우리가 기대하는 성장효과…… 그리고 지금 내수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왕에 혜택을 드리려면 빨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정부가 가지고 있지요? 이걸 국회한테 미룰 일이 아니지요. 그리고 최상목 대행께서도 하겠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규모와 내용에 대해서 정부가 빨리 소신 있는 입장을 밝히고 그에 대해서 여야 간에 협의를 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여야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규모와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해 주세요’ 그게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이것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좀 재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세수결손 관련해 가지고 말씀 좀 드릴게요.

국세 30.8조인데 2차관님, 이것 지금 어떻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메우실 겁니까? 30.8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것 메우실 거예요? 지금 이미 다 상환은 끝났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것에 대해서 대강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집행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작년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수결손 30.8조 원은 이미 저희가 작년 10월 28일 날 국회 기재위원회에 보고드렸던 가용재원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교부금 배정 유보 그리고 통상적인 불용 내에서 다 대응을 했습니다. 크게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별도로 또 질문드릴게요.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출 위원** 한은 총재님!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박대출 위원**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지금 대단히 민감한 정치 현안이라는 건 알고 계시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렇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에 대해서,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의 임명 문제와 관련해서 직접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거에 관해……

○**박대출 위원** 저는 이것을 말이지요 대단히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은? 혹시 잘못됐다라는 부분을 인정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제가 언급한 것은 국회에서, 국무위원들이 회의할 때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국무총리께서 탄핵을 받은 이후기 때문에, 그 뒤에도 계속해서 탄핵에 대한 우려가 신평사를 중심으로 또 국제사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려를 하시면서 국무위원들이 발언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대출 위원**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한 걸로 돼 있었는데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있습니다.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것은……

○**박대출 위원**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옹호를 한 것이지요. 의견을 개진하신 거예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박대출 위원** 지금 총재는 말이지요 사회 지도층 인사로서 또 경제전문가로서, 고위공직자로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의견도 제시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하고…… 정치에 관여한 것으로 비쳐지거나 오해를 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단히 거리를 뒀야 됴에도 불구하고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대외신인도, 경제안정 이런 사안을 들어서 그런 불가피성을 얘기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렇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러나 대외신인도나 경제안정 문제가, 정치의 주요 현안들이 여기에 무

관한 것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있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박대출 위원** 그래서 그 이유로 이런 정치적인 발언을, 언행을 한다면 대단히 잘못된 결과를 끼치고 그 파장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경제는 심리입니다.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박대출 위원** 다양한 외적 요인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즉 언행에 특별히 신중해야 된다는 걸 하는데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헌법 7조에는 말이지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규정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법으로 또 공무원의 중립성을 하는 그런 법은 많지는 않아요. 한국은행법은 별도로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 외에도, 자체 법으로도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법 제3조(한국은행의 중립성), 제19조(정치활동의 금지) 이렇게 다 조항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걸 왜 뒀겠습니까? 그만큼 한국은행 총재, 한은의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렇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 의미를 새겨야 되는 겁니다. 제 의견에 혹시 이의가 있으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지금 박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이런 우려를 박 위원님뿐만 아니라 과거 한은의 저희 선배님들, 여러 분에게서 말씀 듣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한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고.

다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제가 한은 총재를 하는 이 기간 중에, 아마 지난번 계엄 사태 이후의 한 달 정도를 빼고는 지금 말씀하신 그 건과 그다음에 재정에 관해서도, 제가 추경뿐만 아니라 재정에 대해서 코멘트한 것이 없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분명히 제 발언 하기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사이에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시다. 다만……

○**박대출 위원** 그러니까 그 발언 이후에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제가 이 말만 끝내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예.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다만 계엄 사태가 끝나고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변화가 있을 때는 누군가 경제를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 이후에는 좀 자중하고 계시다라는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자체가, 앞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대단히 부적절한 영역에 들어가셨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박대출 위원**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한 번 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 당시에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여부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말이지요, 민주당 지도부는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들을 다 했습니다. 추미애 당시 대표, ‘황교안 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한다고, 황당·어불성설’. 우상호 당시 원내대표,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국회 비준 안 할 것’. 당시 기동민 대변인, ‘과도기적 체제에서 분란과 논란을 일으키는 인사는 자제되어야 한다’. 민주, ‘황교안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때는 인준 거부’. 그리고 당시에 박범계 의원, ‘황교안 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대행도 안 되는데 대행의 대행이 임명, 불가피하니 뭐니 이런 의견을 제시한 건 대단히 부적절하신 거예요. 민주당도 그 당시에는 안 된다고 그러다가 지금 자기부정을 하는 주장을 하고 계신다는 것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데서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는 확인이 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더욱이나 여야 합의가 안 된 후보는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대행도 안 되는데 대행의 대행이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난센스, 이견 있어서도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한국은행 총재로서, 중앙은행의 총재로서 그 직분에 맞는, 그 소임에 맞는 언행을 해주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단히 오해를 빚을 수 있는, 정치적인 오해를 빚을 수 있는 행위를 하시면 곤란해진다,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시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고견을 잘 참고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때 현재 재판관의 임명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총리가 탄핵된 이후에 그나마 우리나라에 제일 커맨더 인 치프(commander-in-chief)로 있는 사람이 흔들려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체제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대행의 대행이든, 대행이든 그 나라를 맡고 갈 치프를 흔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대출 위원** 대행의 대행이 부적절한 인사를 한 겁니다, 월권적 행위를. 그에 대해서 옹호하고 편드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건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해석될 수 있지만 제가 주장한 것은 그 결정 자체에 대해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최고 톱에 있는 사람을 흔들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대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한은 총재님께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때가 아니면 또 말씀드릴 기회도 별로 없을 것이고.

여전히 총재님은 소신을 끝까지 유지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도 과거에 재무부에서 근무를 했었고 이재국에도 있었습니다. 그때를 포함해서 그 전부터 수십 년간 한국은행의 독립성, 한국은행의 중립성 지키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왔고 정치권에서도 한국은행의 금리와 관련된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가급적 언급을 하지 않고 피해 왔습니다. 그것 다 한은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그만큼 중요한 가치다라고 하는 것을 정부나 정치권이나 기업을 포함해서 경제권 모두 인식을 같이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한국은행 총재로서, 앞에 많은

선배들이 계셨지만 유독 지금 현 총재께서 정치적으로 오해할 수 있는 또는 한국은행 고유의 어떤 업무영역이 아닌 부분까지 좀 과다하게 발언을 이어 나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한국은행의 어떤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시킬 그런 화를 부르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많은 분들이 하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총재님이 직접 선배님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전화를 받았다 하셨으니까 아마 같은 생각이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때 한 달 정도 기간 동안 외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하니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은행의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또 독립성을 앞으로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언행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신중을 기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인 것 같습니다. 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위원** 이창용 총재님, 앞선 질의에서 중립성 훼손 또는 정치활동에 대한 질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걸 나중에 들으면서 좀 납득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한국은행법은 거의 다 꿰고 계실 텐데 한국은행법에서 얘기하는 중립성은 무엇을 위한 중립성입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통화정책에 대한 독립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렇지요? 통화신용정책에서의 중립성 또 자율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치활동의 금지는 정당 가입할 수 없고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는 내용인 것이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렇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동안에 총재께서 이 계엄 시기에 또는 그전에 우리 상임위 활동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번 소신 발언을 했고 거기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저만 해도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관 다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 소속으로서는 납득이 안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여야가 공히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또 거기에 대한 소신 발언도 하셨잖아요. 저는 그건 결국은 이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수장으로서의 진심 어린 조언이고 의견 표명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오늘 오전에 그 말씀을 좀 듣고 나서 여러 가지, 진짜 국회와 정치권이 나라가 어려울 때 우선적으로 나서서 중심을 더 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소신 발언을 한 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오늘 동료 위원이 올려 가지고…… 오히려 총재가 적극적 참견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견해와 정책 제안이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조선일보 1월 20일 자 칼럼으로 실려 있더라고요, 그걸 보내와서 제가 봤는데.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소신 있게 입장을 취하시는 게 옳다, 이걸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누가 더 진정 나라와 경제를 그런 당파적 이익이 아닌 나라와 국민의 시각에서 보느냐의 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존경하는 박 위원님께서 격려의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지금은 어느 누가 봐도 민감한 시기기 때문에 저도 이해를 하는 것은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조심을 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저는 정치를 생각해서 발언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우리 경제가 당한 상황 그리고 해외 신뢰도 이런 것이 급격히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인 함의를 생각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볼 때 가장 바람직한 솔루션이 뭔지에 대해서 한은 총재로서 얘기를 했고요.

저는 지금 시기가 이런 만큼 어떤 문제도 정치화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정치와 경제 문제는 분리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나 아니면 하시는 모든 경제정책이 정치와 좀 분리돼서, 그렇게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가급적이면 정치와 분리돼서 움직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 국가가 침탈을 당했을 때 물론 시민들과 우리 야당 의원들 주축으로 잘 대응한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정말 양심과 소신에 따른 젊은 군 장교들과 군인들이 저는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당시 최상목 대행과 한은 총재가 계엄 선포되고 나서 바로 F4 회의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도 이 계엄을 수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것이 무슨 정치활동입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기재부가 1급 회의를 하면서도 지금 계엄은 수용할 수 없다라고 내부 의견을 모았다는 것 아니에요. 남들이 보면 그건 항명이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그런 거야말로 진짜 나라와 경제 상황을 우선시하는 그리고 군의 정치중립성이라든지 통화정책의 중립성이라든지 경제 우선이라고 하는 것에 맞는 태도인 것이지요. 소신껏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볼게요.

오늘 앞서 계엄으로 인한 GDP 감소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산들이 있습니다. 6조 3000억이나, 뭐 7조 3000억이나, 10조까지 얘기하는 분들이 있기는 하는데 한국은행은 이것을 수치로 환산하지는 않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12월 달에 4/4분기 성장률이 떨어질 때는 계엄이라는 큰 뉴스가, 예상치 못한 큰일이 벌어졌고 다른 변수는 고정이었기 때문에 계엄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들이 0.5에서 0.1로 떨어진 것의 반 정도가 계엄의 효과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는 미국의 통상정책도 변화하고 미국 연준의 금리정책도 변화하고 최근에 여러 가지 다른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석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효과는 부정적으로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 당연하지요. 그런데 한국은행이 조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GDP 감소 부분뿐만 아니라 총재께서, 예를 들어서 12월 달에 환율이 치솟으면서 70원 중에서 30원이 비상계엄의 영향이다 이렇게 언급한 적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정책 최고결정자의 잘못된 판단이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국민들께 직접적으로 수치화시켜서 보여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행에서 향후에 어떤 식으로든 여기에 대한 사후적인 그런 연구조사 활동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것이고.

지금 현재 수입물가, 소비자물가가 고환율로 인해서 오르면서 내수 위축의 부작용이 계속 커져 있는데 이 금리 인하하고 환율 대응 간에 한국은행의 딜레마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원칙을?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금리와 환율 간의 관계는 1 대 1로 그렇게 명확한 관계는 아닙니다만 전반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면 환율에 상승 압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통화정책을 할 때 한 변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물가와 금융안정, 환율 또 경기, 모든 걸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통위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결정할지 금주에 논의할 것 같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래서 25년도 보고서에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 것이다 그 방향은 제시를 했잖아요. 그 방향이야 당연히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 다만 금리인하를 이 보고서에서도 언급했던 것은 경기부양도 시급하다 이런 판단을 가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렇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런데 지난주 KDI가 성장률 전망치를 내리면서 금리가 적어도 두세 차례 내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5일 날 금통위에서, 1월 달에 안 했기 때문에 저는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고려해야 될 변수라면 어떤 게 있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우선 존경하는 박 위원님, 지금 다음 주에 금통위가 있어서 제가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고요.

첫 번째 말씀하신 것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금 금리인하 사이클에 있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될 방향으로 가는 것은 다 공감대가 있고요.

다만 금리를 인하하는 게 어느 달에 언제 할지 이 시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를 보고서 판단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홍근 위원** 그래서 이번 금통위에서 현재는 3개월 조건부 금리 전망을 하는 것을 6개월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한다는 기사를 제가 봤어요. 실제 검토가 진지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래서 조만간에 이게 도입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내부 금통위원들과 상의를 해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사실 지금 두 가지 큰 변화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개월 단위로 하고 있는 금리 예측을 좀 더 길게 할 것이냐 하는 게 하나가 되고 다른 하나는 반기별로 하던 경제예측을 지금 분기별로 해서 두 번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공개롭게도 그 두 번의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어서 분기 예측이 아직 자리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과의 소통, 또 분기 예측은 연간 예측하고 달리 변동성이 굉장히 큼니다. 그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 시장이 적응할 시간을 주고 그래서 분기예측제도로 바꾼 게 자리를 잡으면 그다음에 예측을 3개월 단위로 하든 더 길게 할 건지 그것을 논의하고 순차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차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규근 위원 총재님, 지난 12월 18일에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간담회 때 총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경이 늦어지면 경제기관들이 낮은 성장률을 전망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또 경제심리에 주는 영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차규근 위원 순수하게 우리 한국 경제, 비상계엄 이후에 어려워진 우리 한국 경제를 걱정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고 또 이때 추경이 가급적 빠른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렇습니다.

○차규근 위원 이때 말씀하신 입장은 지금 딱 두 달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시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때 당시에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12월 말, 1월 초에 자료를 보니까 경기가 생각보다 빨리 냉각되고 있어서 통화정책만으로는 경기 하락하는 것을 막기 충분하지 않아서 재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차규근 위원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추경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그때의 입장이 지금 현재도 유효하신 거지요? 달라지지 않으셨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 당시에 얘기할 때는 경제 예측하기 전에 저희가 추경 액수를 알았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반기에 조기 집행을 하고 하반기 재정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결의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규근 위원 추경 액수야 여야 협이나 그 과정에서 좀 조정이 되겠지요. 하지만 추경의 필요성 그리고 한다면 가급적 빨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입장에는 동의하시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지금 경제 상황이 그렇습니다.

○차규근 위원 동의하시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차규근 위원 성장률이 계속 하향 조정되고 폐업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생이 최대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차관님, 예산편성권이 있는 기재부가 추경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당부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말씀드렸지만 국정협의회에서 저희는 건설적인 논의가 있

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규근 위원 기재부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은 한 달 전에 30조 원가량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그런데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들 세출만 이야기하시는데 본 위원은 세입경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법인세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차관님,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아직 저희가 1월 실적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하방 위험이 커진 건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만.

○차규근 위원 좋습니다.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법인세수가 지난해보다 25.3조 원이나 늘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세입경정을 하지 않고 세출만 늘려서 편성하게 되면 또다시 세수 부족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따라서 성장률 하락과 법인 실적 부진을 반영해서 10조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번 세입경정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하방 위험 부분과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도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도대체 어느 수준이면 저희가 세입 추경을 해야 되느냐라는 판단 부분이 있을 텐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5조, 10조 비었다라고 하면 올해처럼 저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차규근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규모의 부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향후 추경 논의 과정에서 세입경정의 부분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데이터가 워낙 없는 게 지금 저희 고민입니다.

○차규근 위원 그러면 상속세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정부의 상속세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하지 못하면서 상속세 논의가 한동안 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상속세 공제기준 완화를 중심으로 또다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참 당혹스럽습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 벌어졌고 올해도 세수 부족이 반복될 것 같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28년 동안 공제금액이 제자리였다고 하니 논의를 해 보자고 하는 것은 백번 양보해서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속세 공제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중산층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는 주장에는 정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걸 보면 상속세 일괄공제하고 배우자공제 합해 가지고 18억 원까지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10억에서 18억. 18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지 한번, 국민들께서 이걸 납득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관님,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6억 9000만 원입니다, 6억 9000만 원. 지금 상속세 기준으로 다 공제가 됩니다.

서울 강북의 경우는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그것보다는……

○차규근 위원 강북도 10억 원 넘겠습니까, 안 넘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안 넘을 걸로……

○차규근 위원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18억 원까지 되느냐? 강남 중에서도 강남·서초·송파 이렇게 세 군데만 18억 원이 넘습니다. 강남 3구에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차관님, 이분들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18억 이상 되는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중산층 기준이 보통 소득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산기준까지 포함되어 있는 중산층 기준은……

○차규근 위원 좋습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위소득 계층의 평균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한 6000에서 7000 사이로 기억합니다.

○차규근 위원 아닙니다. 연 한 5억 정도, 한 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마이너스 약간 감안을 하면 중위소득, 국제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중위소득 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한 3억 5000에서 한 6, 7억 정도 됩니다.

차관님, 그리고 자산 같은 경우에 작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하면 실물자산 보유 가구 중에 거주주택 자산의 중간값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잘 모르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5억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안 넘을 걸로 봅니다.

○차규근 위원 맞습니다. 2억 7000만 원입니다.

자산이 가장 많은 순자산 5분위 해당하는 계층을 보면 그분들의—자산이 가장 높은 5분위인데요—평균 거주주택 가격 5억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안 넘을 걸로 봅니다.

○차규근 위원 5억은 넘습니다. 6억 3000만 원입니다.

통계가 틀린 게 아니라면 18억 원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중산층이 아닙니다. 고액 자산가입니다.

따라서 지금 국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상속세 논의를 하는 게 저는 고액 자산가들 마음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집 없는 우리 국민 절반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집 없는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저가의 주택을 가진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 차관님, 비록 대통령께서 직무정지 상태에 있지만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가장 큰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건전재정 원칙이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았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같은 말씀이기는 한데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한은 총재님, 나오셨으니까 여쭙보겠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재정지출의 승수효과가 떨어지고 있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항목이 어떤 항목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박성훈 위원** 기본적으로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과거에 비해서 재정지출의 승수효과가 많이 못 미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의 인구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에 따라서 재정지출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그런 증가 효과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얼마 전에 한은에서 발표한 보고자료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 비중이 1%p 높아질 경우에 재정지출의 경제성장률 증가 효과는 5.9% 감소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기존의 구축효과에 더해서 정부가 과거에 비해서 한국 GDP의 규모가 커지고 또 경제 규모가 선진국형으로 바뀌면서 승수효과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그 뒤에는 과거에 비해서 저희가 얘기하는 이전지출이라는, 이전지출의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승수효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조 원의 정부 지출이 있다고 할 경우에, 재정지출을 1조 원 늘릴 경우에 정부 소비와 정부 투자는 1년 차에 얼마 정도로 효과가 나타나는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승수를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는데 투자가 승수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정부 소비는 0.85, 정부 투자는 0.64의 승수효과를 가집니다. 3년 후를 보게 될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0.91입니다. 결국 정부가 쏟아부은 예산만큼 효과가 없다는 그런 분석이라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지금 1보다 작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전반적으로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지금 말씀하신 승수는 그 정도 숫자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제 포인트는 직접적으로 소비에다가, 민간 소비에 줄 때에 비해서는 아직도 정부 지출이나 정부 투자의 승수가 저는 큰 걸로 알고 있고 이전지출이 커지면 갈수록 승수효과는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민주당께서 전 국민 현금 살포에 대한 병적인 집착을 지금 보이고 계시는데 그 효과가 기대 이하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속세에 대해서 좀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께서 우클릭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마 시장에서는 이런 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산층을 위한, 서민을 위한 행태가 아니라 정치적인 위장 우클릭 쇼 또는 위장 실용주의를 벌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중산층이, 특히 수도권에 중산층이 살고 있는 집 한 채를 두고 상속세를 없게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도체 분야 주 52시간 적용 예외 또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포기과 같이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보이고 있는 행태를 보면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는 프로 거짓말러라는 말을 하고요. 또 최근에는 이재명 대표의 모국어가 거짓말이라는 말까지 합니다.

그러나 정작 시급한 기업들이 정말 그렇게 원하고 있는 가업승계 부담 완화라든지 상속세의 최고세율 인하는 부자감세라면서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이재명 대표의 갈라치기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산층은 표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는 깎아 주고 기업은 표가 없으니까 외면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재부차관님, OECD 38개국 중에서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가 몇 개국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스웨덴 포함해서 꽤 많은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15개국이 상속세를 폐지했습니다. 또 나머지 23개국 중에서 4개국은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에 대한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세율이 0입니다. 실질적으로 19개 국가가 상속세를 운용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지요. 왜 이들 나라는 특권 또는 부자감세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를 폐지하고 있을까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자본 유출이랄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리고 최종적으로 자본이득세로 걷는 게 더 조세 정의에 맞다라고 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맞습니다. 이중과세의 논란도 있고요.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자본의 해외 유출, 국내 유망기업들이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서 해외 자본에 기업을 팔고 또는 해외에 본사를 이전하는 이런 국부 유출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일자리는 누가 만듭니까? 기업이 만드는 것이지요. 기업인으로 하여금 더 나은 경제활성화와 경제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경제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러한 기업인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오로지 부자감세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공격을 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차관님,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제도가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성훈 위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여기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도 일정 부분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동의를 하시는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여러 가지 조세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최근에 여러 가지, 전체 세수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이랄지 자본의 해외 유출 같은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차규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년이 넘는 세제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지 머리를 모아서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지난번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중산층에 대한 감세 이런 부분을 막고 있다는 취지로 글을 올렸는데 분명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중산층에 대한 감세는 저희가 먼저 나서서 주장을 했었고요. 일괄공제하고 심지어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자녀공제까지 요청을 했었습니다.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없으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중소·중견기업들이 상속세 때문에 기업 승계를 포기하는 일 그리고 대주주들이 오히려 주가 상승을 꺼려서 증시의 저평가를 부추기는 고질적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속세 개편안을 준비했는데 이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민주당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지속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과 앞으로의 각오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어쨌든 상속세 논의가 다시 시작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년이 넘는 세제를 보완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박성훈 위원님 말씀하신 논의까지 같이 논의하기를 희망하는데 다만 합의에 접근하기 그나마 쉬운 부분, 가업상속 기업에 대한,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공제랄지 하는 부분들은 좀 우선적으로 논의가 됐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부자감세가 아니라 실질적인 세부담 귀착효과가 중산층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대 위원** 김윤상 2차관님, 요즘 OTT에서, 넷플릭스에 ‘중증외상센터’라고 인기 많은 것 보셨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봤습니다.

○**신영대 위원** 저도 다 봤는데요. 요즘 그것 때문에 또 중증에 관련된 빠른 치료를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예산을 국회가 100% 삭감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게 맞는 말입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중증외상센터와 관련된 전반적인 25년도 예산은 24년 대비해서 15%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언론에서 조금 문제가 됐던 구로병원 같은 경우는……

○**신영대 위원** 구로병원, 말씀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구로병원이요. 전문인력과 관련되어 있는 일부 예산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정부 예산안에 반영이 안 된 상태였고……

○**신영대 위원** 짧게…… 제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신영대 위원** 오세훈 시장 얘기입니다.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예산을 국회가 전액 100% 삭감했다’ 이게 맞는 말이냐고요. 아니잖아요. 정부 예산안에 편성돼 있지 않았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전문인력 양성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신영대 위원**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전문인력 예산을 깎아서, 국회가 100% 삭감해서 서울시가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예비비 얘기를 한번 드려 볼게요.

2023년 예산안에서 예비비가 얼마였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23년도,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3.3조 원 정도 불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대 위원** 4조 6000억에서 정부 동의하에 그때…… 4조 6000억이 실제 국회 통과됐고요. 여야 합의와 정부 동의하에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4조 2000억.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신영대 위원** 그런데 2023년도 예비비 집행률이 몇 퍼센트였던 것 기억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4.6조 원 중에 1.3조 원 집행되고 3.3조 원이 불용됐습니다.

○**신영대 위원** 1조 3000억 집행됐고 29% 집행률이었습니다. 2024년도 집행률도 방금 말씀하셨듯 14.3% 집행됐고요. 그런데 올해 예산, 2025년 예산안 관련해서 정부의 예비비 편성액을 저희가 깎았는데,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이 과도한 예산 삭감이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비비라는 거는 사실은 당해 연도에 재해·재난이나 특별한 위기 상황이 없어서 사실은 전액 대부분 다 불용이 되는 게 국가 차원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년도나 전전년도 집행실적이 없다고 예비비 규모를 줄이는 거는 예비비의 성격하고는 조금 안 맞고요.

○**신영대 위원** 차관님, 그런데 재난·재해 대책을 급작…… 재난·재해라는 것은 어느 순간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취지에서 예비비를 세워 놓고 사용하는 건데 실제 기재부만 예비비를 확보하는 게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에도 있고 행안부에도 예비비가 준비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재난이, 어떤 재난이 올지 모르겠지만 전쟁이 아닌 재난일 바에야 이 정도의, 29%, 14%로 활용하는 이런 예비비를 그 배 이상을 유지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삭감함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신 차관님의 이런 생각들을 반영하려면 실제 상반기에 집행해 보고 이 예비비 갖고 후반기를 대응 못 한다면 또 추경도 준비할 수 있고 이런 건데요.

저는 예비비 얘기를 자꾸 꺼낸 이유는 뭐냐 하면 이번에 내란 사태에서 보면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기재부장관 자격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하셔서 가지고, 여러 차례 여쭙았는데 본인이 못 봤다고 하셨어요, 그 문서를.

그런데 요즘 완전히 권한대행이 회화된 것 아시지요? 못 봤는데 그걸 꼬깃꼬깃 접어서 넣었다고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또 흘깃 봤다고 표현하시고 이게 참 웃긴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기획재정부장관하고, 최상목 문건을 보면 이 항목이 뭐냐 하면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이거였습니다. 결국은 윤석열 내란을 준비하면서 예비비를 확보해서, 결국 예비비를 과도하게 많이 세우려고 했던 목적 자체가 결국은 내란을 도모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있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난 예산안 심사 과정, 국회 의결 과정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민주당이 민생 예산을 깎았다 이런 표현 하시는데 결코 맞지 않는 지적을 하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국비 지원 예산 미반영돼 있고요. 군장병 급식 및 부사관 처우개선 예산 미반영돼 있고 초중고 예술강사 인건비 지원 전액 감액돼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부 예산안에 포함됐던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지적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만 결국은 국회 증액 없이도, 정부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증액 못 하기 때문에, 결국은 2025년도 현재 여러 가지 경제지표가 어려운데, 제가 지표를 많이 가져왔는데 아까 먼저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안 드리고 있습니다. 경제지표가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에 결국은 계엄이 터졌고 관련해서 민생을 돌봐야 되는데 정부 예산안 자체도 제대로 짜여 있지 않았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현재 윤석열의 내란 사태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책임 있게, 윤석열은 감옥 보내는 거고 우리는 책임 있게 민생을 되살려야 될 텐데 이런 과정에 당연히 정부가 나서서 추경을 하자고 매달리고 이런 일 좀 하자 그러고, 민주당이 이런 것 넣자고 하면 이거는 어렵다고 하든지 수용을 하든지 국민이 넣자 그러면 수용을 하든지 거부를 하든지 이런 노력들을 기재부가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없어 추경 못 한다? 언제는 돈 남아돌아서 대한민국이 추경 했습니까?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끝나고 윤석열 출범하자마자 기재부가 숨겨 놓은 예산 넘겨주면서 추경한 것 빼놓고 없지요? 돈 남아서 추경한 적은 대한민국 역사에 없습니다, 기재부에서. 결국은 민생이 어렵고 국가경제가 어려우니까 위기 돌파를 위해서 추경 세웠던 것이지.

그래서 차관님, 추경에 대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의힘 의원님들 악처럼 판단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견 주시고 앞으로 계획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먼저 말씀하셨던, 의구심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11월 말 그리고 12월 10일 날 삭감됐던 예비비를 복구하려고 했던 게 비상계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는 위원님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추경과 관련해서는 제가 여기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목요일 날 국정협의회에서 추경의 규모나 내용 그리고 추경의 기본원칙 같은 것들이 논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더 진전된 논의가 있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차관님, 진전된 논의라는 게 뭘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저희는 계속해서 여야 합의가 되면 정부에서도 추경과 관련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송언석** 그거 왜 해야 되는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국정협의회에서의 어떤 안전이나 의제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논의가 되는지를 저희는 지켜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송언석**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위원** 내 앞에서 끊어 가지고 김을 새게 해.

○**위원장 송언석** 하필이면 다음 순서가 김태년 위원님이었습니다.

○**김태년 위원** 2차관께서 답변하시지요.

2차관이 오늘 덜 답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1차관보다?

요새 점심 저녁 주로 어디서 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도시락을 먹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도시락 드실 때도 있고 구내식당에서 드실 때도 있고?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김태년 위원** 바깥에 있는 골목 식당이나 이런 데서도 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설날 때 저희 간부들 모여서 재래시장에서 식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김태년 위원** 회식도 하시고, 자주 가는 식당도 있을 거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식당을 정해 놓고……

○**김태년 위원** 단골 식당 있을 것 아니에요. 어때요? 식당 주인들이 가면 뭐라고 그래요? 요즘 장사 잘된다고 합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뭐 그렇게 식당 주인분들하고 이야기할 기회는……

○**김태년 위원** 그런 걸 물어봐야지. 기획재정부차관이 지금 시중의 경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밥 먹으러 갔을 때 식당 주인들하고 대화 나누면서 물어도 보고 확인도 해 보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감수성,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걸 어려워하는지 힘들어하는지 이런 걸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앞으로 그런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글썄요, 차관께서는 어떻게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정부 관계자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또 여당 의원님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만나 보는 많은 자영업자들은 죽겠다 그래요. 자영업자뿐만이 아니고 모든 경제 주체들이 요즘 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죽겠다고.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자주 가는 식당들의 사장님들하고 대화를 나눠 보면 실제로 매출이 정말로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보다 어려운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코로나 때도 버텼던 식당 주인들이 지금 못 버티겠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국민들 가처분소득이 줄어 가지고 소비 여력이 약화됐고 그래서 내수가 엄청나게 부진한 상태였는데 연말 특수, 이른바 연말 특수라는 게 있잖아요, 연말연시 특수라는 게. 이걸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12월 3일 날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있어서는 안 되는 내란 사태가 벌어지는 바람에 그렇지 않아도 죽겠는데 위축되어 있는데 확 쪼그라들어 버렸다고요. 회식 다 취소했지, 외식 취소하지. 마음들이 불안하니까 회식하고 외식하고 이런 것 하고 싶겠어요? 안 하지, 우리 국민들이.

이거는 정치가 만들어 낸,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 낸 민생 재난이에요, 우리가 체감하기로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복구하고 보완할 것인가 대책을 세우는 것이 당연히 정부가 책임 있게 해야 될 일이에요. 앞친 데다가 뒷친 격이었는데 그렇게 지금 한가한 때가 아니에요, 민생이.

추경과 관련해서 지난번 대정부질의 때 추경호 대행이 이야기하는 것도, 대답하는 것도 들어봤고. 아니, 최상목 대행이 대답하는 것도 들어봤고 또 오늘 두 차관께서 답변하

는 것도 들어보는데 지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여야 합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정부의 입장이 뭐예요? 도대체 추경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추경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차관, 차관이 생각하기에, 정부가 생각하기에 지금이 추경이 필요한 시기예요, 필요 없는 시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저희가 연초부터 공공 부문과 재정 쪽에서 조기 집행을 하면서 전년 상반기보다 10조 원 이상 더 지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상목 권한대행 주재로 민생현안 점검회의를 통해서 매주 한 가지씩 민생과 관련된 대책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저희가 민생 관련된 부분에 대응을 하고 있고요. 국정협의회에서 추경 관련된 논의가 여야 간에 합의가 된다고 그러면 정부에서도 그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김태년 위원** 무슨 정부가 지금 정치합니까? 조기 집행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하반기는 어떻게 할 건데, 하반기 우리 경제 아주 좋아요? 하반기에 쓸 돈 상반기에 당겨다가 지금 쓰겠다 이런 것 아니예요? 그게 무슨 만병통치약이에요?

그리고 해마다 조기 집행을 했었어요. 안 한 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기 집행을 하더라도 조금 더하는 수준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정부가 발표한 그린북, 그린북 발표했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김태년 위원**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여기 종합평가 보면 내수 회복 지연, 취약 부문 중심으로 고용 애로 지속,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 경기 하방 압력 증가, 이것 정부가 평가한 거예요.

재작년, 2023년 경제성장률 1.4였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김태년 위원** 작년이 2.0이었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보세요. 우리가 역대로 놓고 보면 한 해의 성장률이 어떤 쇼크가 와 가지고 툭 떨어지면 그다음 해에는 기저효과 때문에 수직 상승을 해요. 그렇지요? 지금까지 내내 그래 왔었지요? IMF 때도 그랬고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코로나 때도 그랬고, 그랬었지요. 그런데 재작년에 1.4, 이게 쇼크 때 빼고는 없었던 현상이었어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수직 상승을 못 해요. 겨우 2.0 턱걸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전 1%대 성장률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기저효과까지 놓고 보면.

그러면 올해 1.6?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정부는 현재 1.8 아직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정부는 1.8.

한은은?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한은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하신 건 아닌데요, 1.6~1.7……

○**김태년 위원** 대략 한 1.6~1.7. 제가 보기에는 한 1.6 정도.

민간은 지금 1.3까지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비상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언제 세우려고 그래요? 아예 이런 저성장 기조를 지속할 겁니까? 지속돼도 괜찮다고 보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지난 위기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인 요인이나 아니면 코로나 같은 상황이 해소가 되면서 그다음 연도에 반등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 정부 들어오기 전에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과도한 부채 증가 등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반등이 좀 늦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정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민생과 그런 부분에 걱정을 하고 있고 그런 취지에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국정협의회에 참여해서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자꾸 여야 합의, 합의…… 정부는 입장이 없는 거냐고.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선 위원** 질의하기 전에 1차관님, 오전에 야당 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 다수 의결과 합의에 의해서 예산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다수 의결이라는, 다수 의결에 대해서 헌법이나 국회법에는 없고 법에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나중에 국회법을 들어가서 다시 보시면 국회법은 실제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토록 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 안에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부결이나 의안 자동 상정, 패스트트랙 체계·자구 심사 등등 이런 것들은 국회 절차에 교섭단체 간의 합의를 거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꼭 원칙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계적인 역사 속에서도 보면 다수결의 횡포라는 게 여러 사례가 많잖아요. 그래서 다수결로 국민이 투표했다고 무조건 결과적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유대인 학살도 있었고 세계 전쟁도 있었고 이렇게 국민 투표에 의해서 다수결이라는 걸로 무조건 가면 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백인이 대다수지만 인종차별법을 두는 것도 결국은 다수결의 원칙을 포기하고 합의나 타협을 이루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합의의 정신을 지금까지 지켜 온 게 오랜 국회의 전통이고 이 전통이 잘 지켜 나가기를 바라면서, 꼭 국회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알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이재명 대표님께서 우회전 감빡이를 넣고 좌회전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의 발언 중에서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께서는 상속세를 두고 국민의힘이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서 적반하장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만을 완강하게 고집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표를 보면 국민의힘이 주장한 것, 더불어민주당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이렇게 가다 마지막에 최고세율 공제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견 기업에 관련된 건데, 조금 전에도 질문을 했었습니다마는 기업이 최고세율을 이렇게 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 현재는 OECD 전체 38개 국가 중에서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2위로 해당되면서 가장 높습니다. 기본 50에 최대주주 할증 20%를 적용하면 60%가 되고 2대째 상속하게 되면 16%밖에 남지 않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있고 또 일자리가 있어야지 선순환이 되기 때문에 기업들을 위해서 이런 걸 하자는 것은 저희들이 같이 주장한 것이지 이것만 고집하지는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송언석 위원장, 박수영 간사와 사회교대)

○이인선 위원 그래서 제가 우선 생각하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꼭 꼬집어 가지고 이런 최고세율 인하만을 가지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어쨌든 190석의……… 줄탄핵으로 행정 기능도 마비시킬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협의할 때 최고세율은 빼고 나머지 3개를 같이 해 줄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전체적으로 동의를 해 주지 않아서 본회의에 갔을 때 이 안이, 상속세 개정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속세 논의는 못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만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에 와서는 국민의힘이 중산층 완화를 위한 상속세를 외면하고 최고세율만 고집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그걸 믿을 국민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프레임을 씌우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참에, 이렇게 왔을 때 빨리 최고세율은 두고 앞엿것을 빨리 우리가 통과를 시키면 좋겠고요.

물론 차규근 위원님은 '18억이 그러면 중산층이냐?'고 질문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당이 이런 제안을 해 왔기 때문에 빨리했으면 좋겠고. 나선 김에, 이참에 상속세율 인하도, 결국은 조금 지나서는 또다시 기업이 살아야 되니까 최고세율도 하겠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통과하는 김에 전체적으로 최고세율까지 다 통과해 주셔도, 이게 결국은 기업이 사는 일이고 중도를 끌어올 수 있고 선순환을 시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해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차관님도 아시겠지만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이제 아는 것이지요. 아는데, 그래서 결국은 당론보다는 국민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합의해서 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18억이라는 자산을 중산층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저는 환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52시간 예외 문제인데 사실 52시간 문제는 반도체법에서 우리가 R&D 인력 내지는 집중 인력에 대해서는 그 예외 조항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막상 이재명 대표는 언급을

했지만 민주당 강성 노조에 의해서 퇴짜를 맞고 52시간 예외 조항으로 지금 아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곧 이게 같이 통과를 해서 AI 내지는 반도체가 이런 위기에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2시간 예외 문제는 협의를 하고 계시지요? 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고 오늘 부총리께서 아침에 회의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소통할 여지가 있다, 소통하면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인선 위원** 그렇지요. 아마 민주당 측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룰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주시던데 전 국민 25만 원에 대해서 애기들이 참 많습시다마는 여기 안에, 전체적으로 35조에 대한 슈퍼 추경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의 문제인데 이 문제는 제가 오후에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영** 이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먼저 간단한 말씀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오후 계속 이야기되는 것들 중에 요즘 상황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어서 그것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란하고 민주공화국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 국민들, 고위공직자들 여기 다 계시는데 내란을 옹호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공직자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은 서로 우리 헌정질서 속에서 입법부가 구성되고 또 행정부도 구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의 존재 근거를 부정하는 집단하고 어떻게 정치를 같이하고 국가의 미래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벌어진 것 중에 12·3 내란에 군 난입했던 것 그다음에 서부지원 폭동했던 것 그리고 어제인가 오늘인가 방송 나오던데 문형배 헌법재판관 집에까지 가 가지고 하는 정치 홀리건 같은 난동 행위들, 그런 행위를 지지하거나 옹호하거나 또는 사실상 그런 걸 충동하거나 이런 발언을 하거나 이런 행태를 하는 것 정말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란을 수습하는 것과 그다음에 내란을 벌이는 것과 이 사이 속에서 기계적 중립이 있는가 가끔씩 묻습니다. 저는 그런 기계적 중립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자체가 유지가 되는 게 우선인 것이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내란을 극복하려고 하는 분들이 다 민주당 지지자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까 총재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법원행정처장이나 또는 류혁 감찰관—법무부에서 바로 사표 내셨던 분—이나 많은 공직자들 또는 군인들 스스로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지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각자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연대해 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내란의 행태들, 그런 것을 동조했던 행태들을 극복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동네에서 이곳저곳 다니다 보면 계속 말씀을 듣습니다. 정말 우려된다, 왜 우리나라

라가 갑자기 아프리카처럼 후진국이 됐다. 저는 이 지점에 대해서는 서로가 이걸 가지고 정치적 중립 이야기하는 것 다 자격 없다고 봅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해야 된다 또 함께 입장을 견지해야 된다. 그래야 이 국면을 돌파하면서 우리가 선진국 사회에서 더 이상 후퇴되지 않고 더 나은 사회로 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하도 이상한 말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무슨 방탄이니 내지는 이상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하여간 저는 많은 분들이, 여당 위원님들도 속으로는 곤혹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 지점에서 기재부 또는 한국은행이나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도 함께 지키고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수결손 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최상목 장관에게 세수결손 우려되지 않느냐, 세수 자신 있냐 계속 물어봤었습니다. 저는 계속 물어보고 여러 가지, 또 다른 자리에서 물어보기도 했고 또 최상목 장관이 답변한 것도 있었습니다. 1월 초에는 괜찮을 것이다. 5월 달까지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7월 달부터 약간 우려하는 말들이 오고 갔고 9월 달 돼서 이게 무슨 탓이나, 책임 회피적인 발언들이 있었고. 그리고 작년 국감 때 계속 논쟁했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최악의 세수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세수결손이 발생했다면, 올해 2월 초에 발표할 때 이걸 보면서 기재부에서 반성과 사과가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민들 앞에서? 제1차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작년에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 결과적으로 대규모 세수결손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기형 위원 지금 저는 여야 상관없이, 기재부도 마찬가지로, 2021년도에 대한민국 세수 절대치가 344조였어요. 그런데 작년이 336.5조였어요. 3년 사이에 절대치가 감소한 겁니다, 경상성장률은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상황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야 되고 문제의식이 있어야 되고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감세정책 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난 2~3년 동안의 감세정책의 후과다. 앞으로도 감세정책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논의할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저희 감세…… 테크니컬한 부분이기는 한데 저희 이미……

○오기형 위원 이 원인의 진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절대치가 감소한 것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이미 세제는 세수감 효과가 반영이 돼 있고요, 세입에는. 그런 부분은 아마 위원님이 잘 아실 거라서 굳이 더 설명은 안 드리겠고요.

○오기형 위원 예상 추계가 줄었다는 게 아니라 결과치가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원인 분석을 하고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설명하고 국회에 보고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될 때 아닙니까, 지금?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인 실적이랄지 그런 건 과도하게 줄어든 부분도 있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2021년, 22년, 특히 22년도에 저희가 오버슈팅된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오기형 위원 22년도에 오버슈팅됐는데 문제는 21년도보다 더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지점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기형 위원 그리고 그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그 입장이 뭐냐 이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25년도 현재 상황에서는 1월 실적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방 요인이 많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미 많은 기관들이 성장률을 낮췄고 더 나아가서 이제 트럼프 관세정책이 실제 발효가 되면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기형 위원 그게 아니라 지난 2~3년 동안 뭐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분석과 그 원인 분석이 돼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국감 때부터 감세정책 기조 바뀌어야 된다, 그거 실패했다. 경제성장률도 실패했고 그다음에 감세정책도 실패했고 나라 곳간이 무너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처벌하게 반성하면서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된다. 지금 현재 다음에 누가 집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대한민국이 잘 굴러가야 되는데 그에 대한 재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다음 여쭙보겠습니다.

일시대출금인데요.

2022년도 4분기입니다. 각 해 4분기인데 22년도에는 4분기 일시대출 없었습니다, 즉 기채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대출한 것. 23년도에는 약간 있었습니다. 24년도에 왜 이리 많아요? 23년과 24년 되게 차이가 많이 나고 24년도 10월 달에 보면 열 차례 차입을 했는데—약 15조—그다음에 12월 달에 보니까 12월 30일, 31일에도 약 5조 차입했어요.

왜 했습니까, 이것? 차관님, 왜 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2차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무슨 필요가 있어서?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12월……

○오기형 위원 이상해요. 지금 갑자기, 작년에 이 일시차입의 흐름들을 보면 뭔가 이상해요, 경제의 흐름이, 특히 정부의 재정 흐름이.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그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시차입이라는 게 어차피 세입세출 간의 일시적인 격차를 바로 보완하고 어차피 해당 연도 말에 저희가……

○오기형 위원 2022년도는 없었어요. 4분기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4분기만. 1·2·3·4분기 중에 4분기만. 23년도에 약간 있었어요. 24년도에는 되게 독특해요. 그리고 특히 작년 내란 이후 전후로 해서 이걸 막 여러 가지…… 내부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돌려막기 하나 그런 의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21년하고 22년에는 어차피 초과세수가 많이 났기 때문에 일시차입할 이유 전체가 없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기형 위원 23년 초과세수 아니었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21년과 22년 말씀드린 겁니다.

24년 10월 달하고 그다음에 30일, 31일 날 일시차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그러면 따로 정리해서 한번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이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영 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한국은행 총재님, 1차관님, 2차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차관님, 합의 얘기하셔서…… 오전에도 합의한 건 아니지요? 저 조특법 일부 반대했잖아요, 3건에 대해서. 제가 왜…… 합의라고 하면 저한테까지 합의해 주셔야지요.

왜 전체회의 통과됐습니까? 다수결에 의해서 존중된 것이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전체회의에서 합의하면 저까지 합의해 주셔야지요. 합의를 그렇게 함부로 쓰지 마세요. 국회법에는 아주 예외적인 조문에 있어요. 국회의 표현은 표결이 끝나거나 그러면 의지가 표현된 겁니다. 그걸 존중해 주는 것이지요, 제가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위원님, 아까 소수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소수의견으로 제기해 주셔서……

○김영환 위원 반대의견이었어요, 반대의견.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반대의견을 제기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 동의해 주셔서 처리가 잘 된 건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협의해서 존중돼서 통과된 것이지요, 민주적 절차 방식에 의해서. 그렇지요? 다수 의견을 제가 존중한 것이고. 합의했으면 그렇게 안 됩니다.

예비비 관련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작년에 예비비 총 몇 차례 국정원에 썼어요? 아세요, 2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국정원의 안보 예비비는 횡수, 규모, 내용과 관련해서는 2급 비밀이라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끝나고 난 다음에 따로 저희가 구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산…… 지출 결정을 몇 번 하셨냐 물어보신 것이지요?

○김영환 위원 그러면 규모도 따로 말씀해 주실 거예요? 몇 차례, 규모 그다음에 국무회의 통과했으니까 그 비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위원님 아시다시피 국정원의 안보 예비비는 그 전해에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세부적인 내용과 규모가 다 결정됩니다.

○**김영환 위원** 그래서 당일 날 국무회의 통과해서 예비비 12월 3일 날 가져간 거는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2차관님, 우리 예결위 같이하셨잖아요. 혹시 용산하고 예비비 관련해서 소통한 적 있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제 기억으로는 따로 없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면 밑에서……

잠깐만 기조실장님, 자리에 계세요?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 김진명** 예.

○**김영환 위원** 혹시 용산하고 예비비 관련해서 소통한 적 있습니까? 수석, 비서관, 선임행정관, 행정관 소통한 적 있습니까?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 김진명** 예산은 제 소관 업무가 아니……

○**김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지요?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 김진명** 예.

○**김영환 위원** 예산실장님, 예산실 안 나오셨어요?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조용범** 사회예산심의관 나와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예비비 관련해서 용산하고 소통한 적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조용범** 저는 잘…… 예비비 소관이 저희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

○**김영환 위원** 예.

그러면 1차관님, 없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없습니다.

○**김영환 위원** 혹시 비화폰 사용하는 것 없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없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면 기재부는 용산하고 단 한 번도 예비비 관련해서 소통하신 분이 없다고……

재정관리관 혹시 있어요? 혹시 용산하고 예비비 관련해서 소통한 적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안상열** 없습니다.

○**김영환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기재부는 없어요, 지금.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김영환 위원** 공식적인 답이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했습니다. 나중에 또 다른 것 나오면 이제 기재부 몽땅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뭐 제가……

○**김영환 위원** 2차관님, 마지막까지 예비비…… 검찰 특활비하고 특경비 얘기도 안 하시고 진성준 의장님하고 나중에 협의할 때도 기재부는 예비비 올려 달라 그랬어요, 복원시켜 달라고. 그다음에 12월 2일도 그렇고요, 마지막 협상할 때.

예비비에 그렇게 목매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마지막 협상은 12월……

○**김영환 위원** 허영 간사하고 협상할 때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아, 12월 2일 날요?

○김영환 위원 예, 그때까지도 최종적인 안은 예비비였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12월 2일이 아니고 12월 9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는 정부안으로 4.8조 원 예비비를 올렸고 그다음에 예결위 11월 29일 날 2.4조 원 반 토막이 났기 때문에……

○김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저희는 재해·재난 대응을 위해서 목적예비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김영환 위원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비비 2.4조 복원시켜 달라 그게 마지막 주장이었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그거와 또 다른 예산 복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예비비는 저희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목적 외 일반예비비도, 2.4조는 일반예비비도 포함된 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 목적예비비만 말씀하지 마시고. 2.4조 전부 복원시켜 달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예비비 관련해서 기재부는 용산하고 소통한 게 단 1건도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1차관님, 2차관님 다 책임질 수 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김영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재님, 제가 신년사를 꼼꼼히 좀 읽어 봤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려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 첫 번째, 하방 리스크 커졌고요. 그다음에는 환율 변동성 확대라는 대한민국의 좀 다른 위기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걸 극복, 저는 극복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걸 또 우리 국민들이 소기의 결과들을 또 만들어 주실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통화정책에 있어서 지금 한계가 있지요? 미국하고 금리차가 지금 얼마 나지요? 1.5?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1.5로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최대 1.5 나지요? 그리고 이제까지 사실은…… 몇 년이에요? 2.0 나던 때부터 지금 금리차, 이 시기를 겪었던 게 한 2년 되나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김영환 위원 2년 반 정도,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운 길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거를 그래도 물가안정까지 잘 이루셨는데 문제는 이제 환율이 또 있잖아요.

가장 걱정하시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기재부 성장 쪽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으로 그쪽까지 걱정해야 되지만 물가, 환율 그다음에 가계부채 그것 때문에 대학 문제까지도 언급하셨잖아요. 가장 걱정되시는 게 어떤 거예요? 통화정책의 한계, 지금 느끼시는 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통화정책으로만 한정해서……

○**김영환 위원** 예.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통화정책으로만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물가가 안정된 반면에 대외 부분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 대외 부분이 환율뿐만 아니라 통상 관계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게 가장 단기적으로는 지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영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영**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경북 구미갑의 구자근 위원입니다.

저도 저희 당 입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 질의 중에 오늘 ‘윤석열’이니 ‘윤석열 내란’이니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표현을 써 주시면서 질의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킵니다. 저희들도 ‘예산 삭감 수괴’, 예를 들어서 ‘이재명 피의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실질적으로 확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헌법재판소에 대한 편향성과 공정성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끊이지 않고 나오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란 사태’나 아니면 ‘윤석열’, ‘윤석열이’ 이런 표현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것은 혹시 자칫 혐의를 기정사실화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직을 잃은 것처럼 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닌지 그런 유감스러움을 전하면서 저도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2차관님, 중증외상 수련센터 예산 관련해서 좀 전에 민주당 동료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짚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차관님, 정부 예산편성할 당시에 삭감했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그때 제가 보고받기로는 저희 재정 당국과 복지부 간의 협의 과정에서 그 부분이 정부예산안에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안 됐는데 실질적으로 민주당 의원들께서 예산 삭감 가장 1순위 명분으로 삼는 게 실집행률 저조입니다. 그 실집행률 저조 부분에 있어서 지난 9월 말, 한 10월 초경에 그게 한 30% 정도 될 겁니다, 물론 인원 문제지만. 그래서 이런 사실 확인 관계에 있고 기재부에서 이걸, 사업을 폐지하자는 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처에서, 상임위에서 여야 공히 그렇게 증액해서 그런 예산으로 저희들 예결위로 올라왔던 부분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증액해서 9억 정도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렇지요? 증액해서 8억 8800만 원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마지막 단계에서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진행이 못 됐다 하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차관님도 지금 민주당에서 35조 추경하자는 추경안 내놓은 것 보셨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구자근 위원 알고 계시고 보셨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구자근 위원 아니,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4조 1000억 삭감한 지가 언제인데 5일 만에, 단독으로 예산 일방 날치기 처리하고 단 5일 만에 30조 추경하자고 그랬습니다, 최고 위에서. 그리고 나서 지금 35조 원 더 추경을 하자고 합니다.

민주당에서 지난해에 예결위 할 때 실질적으로 4조 1000억을 깎았습니다. 그러면 25년도 살림은, 그래도 윤석열 정부의 2025년 살림은 4조 1000억을 깎아도 그 정도 규모 같으면 25년도 나라 살림 충분히 살지 않겠나라는 입장에서 전부 다 동의하고 전체 찬성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했지 않습니까? 그런 의도 아닙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살림살이 속에서도 국가가, 정부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게 게 조기 집행해서 일단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보자라는 취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 그리고 보훈 관련이나 군 처우 문제 그리고 우리 지금 국가 경쟁력,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AI나 원전이나 이런 경쟁력 있는 부분들 증액하기 위해서 많은 심사하고 토론하고 논의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다 아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구자근 위원 그리고 이 헌정사 초유의, 그렇게 단독으로 예산 날치기 처리해 놓고 바로 그렇게 30조 추경하자라는 것은 그 날치기 처리한 단독 예산, 감액 처리한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자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 한 달 뒤에 일어날 일, 단 5일 뒤에 일어날 일을 왜 모릅니까? 민주당 그거 모릅니까? 그것도 모르고 예산 삭감했습니까? 그렇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정부에 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구자근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실질적으로, 지난해 12월 10일 날 예산 단독 처리한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에서 분명히 입장 표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역할 충분히 필요하지요. 추경 필요하면 해야 되지요. 그런데 깎을 때는 멋대로 4조 원 깎았다가 무슨 기준으로 또 그렇게 많이 증액해서 합니까? 그런 신중함이 없으니까 주머니 찜짓돈 쓰듯이 쓴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한국은행 총재님, 많은 위원님들께서 추경 말씀하시고 추경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총재님께 입장을 물어보고 하시던데 총재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존경하는 구자근 위원님,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자세한 내용보다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경제예측치에 봤을 때는 15조~20조 정도를 하는 것이 경제를 한 0.2% 올리는 효과를 가져서 경기 대응에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단, 조건이 달릴 것 아닙니까? 총재님 생각하기에 조건이 달리는 게 그런 금액이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먼저 30조, 35조 금액부터 정해 놔 놓고 우리가 들어가서 하는 추경이 바른 추경입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20조 이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는, 한국은행 나름대로는 컨선(concern)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건전성 문제도 있고 또 올해 추경을 많이 하게 되면 내년도에 그 이상으로 하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년도에 걸쳐서 보게 되면 적절한 규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추경 내역도 저희가 계속 얘기하다시피 타깃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렇지요. 저도 언론 보도나 여러 가지 사항들 속에서 총재님께서 일단은 타기팅을 정하고 거기에 맞는 여야 간의 합의를 가지고 추경 액수에 들어가서 그리고 또 적절한 금액 속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들 맞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수영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임광현 위원 1차관님,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주장에 입장 변화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저희가 정부안으로 제출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도 논의해 주시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임광현 위원 PPT 화면을 하나 좀 볼까요?

사망자 대비 상속세 대상자가 2010년에는 1.4%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는 6.8%로 약 5배 증가했고 서울의 경우 같은 기간에 2.9%에서 15%로 5배가 넘게 급증을 했습니다.

자료가 없어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1997년에는 30.9%에서 2025년에는 89.4%로 약 3배 가까이 증가했고요, 서울은 1997~2025년 사이에 약 4배나 급증을 했습니다. 반면에 동일 기간에 배우자공제나 일괄공제는 30년 가까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간에 정부는 대재산가 중심의 상속세 완화 정책만 해 왔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급한 것은 초부자를 위한 상속세 감세가 아니라 중산층을 위한 상속세 미세조정 및 공제 현실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격 세법 심사가 진행됐던 작년 11월 21일 조세 회의록을 보면 최고세율 인화와 자녀공제 상향 등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서 중산층 세부담 완화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안에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안을 내지 못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기재부는 부의 공정한 재분배라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집 한 채 있는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상속세 개편방안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현재 예산은 작년 경제 상황을 반영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계엄이나 트럼프 관세정책 등 현재 경제 상황을 반영한 우리나라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민생 추경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2차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재부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 지침을 3월 말까지 통보하고 각 부처는 그것을 받아서 예산요구서를 5월 말까지 제출을 하면 기재부는 이를 종합해서 예산안을 9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임광현 위원 즉 현재 집행 중인 예산은 작년 상반기에 전망한 2025년도 경제 상황을

전제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데이터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계엄 사태나 트럼프 관세정책 등 대외경제 여건이 급변하면서 작년 편성한 2025년 예산은 올해 경제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상태입니다. 경제지표를 죽 보시면, 예를 들면 2024년 9월 기준으로 경제성장률이 2.2%였는데 지금은 1.6%까지 보고 있고 환율도 그 당시에는 1300원이었는데 지금 1400원대고요 소비자심리지수도 100에서 91로 줄었고 수출액 규모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경제 상황의 판이 바뀌었기 때문에 급변한 대내외 경제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민생 추경을 조속히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웃 오브 데이트(out of date)의 작년 예산을 아무리 상반기에 신속 집행해 봤자 정교한 현재의 경제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된 새로운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 예산 신속하게 집행을 해 봤자 어차피 하반기에 쓸 재원이 없기 때문에 하반기 성장의 하방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경 편성을 위한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급변한 경제 상황의 판이 추경 편성 요건에 충분히 부합하다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추경 편성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심각한 경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펼쳐 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경의 규모나 내용 그리고 추경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이번 주 목요일 날 개최되는 국정협의회에서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임광현 위원 다음은 지금 계속 부진한 내수 침체 관련해서 정책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계를 하나 볼까요?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것은 계속 얘기를 했고, 지금 여기 폐업자 통계를 봐도 폐업자 수라든지 폐업자 비율이 2020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골목상권과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정책으로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상품권 같은 내수 진작책이 있습니다. 이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정부 지원이 한 10% 정도 들어가고 사실상 나머지 40%는 가게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임광현 위원 결국 가게의 소비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가게의 여력이 없다고 한다면 실효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고 지금 현재 민간소비지출 규모나 이런 걸로 보면 국민들의 지출 여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어려울 때 정부가 가게와 더불어 민간의 또 다른 축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기업들이 내수 활성화에 직접 나서도록 독려하는

정책을 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2022년도에 세법 개정을 통해서 기업을 살리겠다고 법인세를 인하했지만 지금 기업들은 투자 확대 대신에 사내유보금을 쌓는 것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유보금 통계를 보시면 2020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목상권에서 사용하는 기업 업추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비용 인정을 늘려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추경으로 공간을 열어서 민생 지출을 늘리고 지출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돈을 풀면 기업 자금이 시중에 돌게 되기 때문에 이 어려운 골목상권이 보릿고개를 넘는 데 큰 힘이 될 거고 궁극적으로 경제 선순환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업 입장에서 업추비 송금 한도가 상향이 되면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매출 증대와 경영 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작아 보이는 정책이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효과는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이미 한 번 검증이 된 게 있는 게 코로나 때 1년 한시적으로 해서, 그 당시에 기업의 지출이 코로나로 인해서, 회식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5800억 원 정도 지출이 더 늘어났던 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정부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간이과세제라는 소비 부분에 대한 공제 확대 그리고 전년도 소비보다 더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법안을 제출해서 이번에 조세소위에서 논의하기를 희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수영**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성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관련해 갖고 짧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탄핵심판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 중의 하나가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계엄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았다는 쪽지 문제입니다. 내용을 보면 ‘예비비 확보할 것, 국회 관련 현재 운용 중인 자금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편성할 것’. 세 가지 내용, 이것은 보도 보셔서 알고 계신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정성호 위원**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용현 전 장관이 지난 1월 23일 탄핵심판에 나오셔서 가지고 ‘이 문건은 김 전 장관이 작성해 가지고 최 부총리에게 전달한 것이다’ 그다음에 ‘국가비상입법기구도 국회 입법권을 대체하기 위한 기구가 아니

라 대통령의 국가 긴급재정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이다’ 이렇게 답변한 것, 이것도 혹시 보도로 들어서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보도로 봤습니다.

○**정성호 위원** 긴급재정명령의 요건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헌법과 법률에 있는……

○**정성호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헌법 7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최소한으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헌법 76조 제1항의 조건에 해당할 정도로 국가가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라든가 또는 안전보장, 질서 유지에 필요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봅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제 기억에는 정말 제 공무원 생활 이후, 그 이전으로는 저희가 긴급재정명령 한 예가 금융실명제 외에는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런 정도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성호 위원** 예, 없었지요. 이게 민주화 이후에는 김영삼 대통령일 때 그 당시에 국회가 폐회 중이었기 때문에, 국회가 회기 중이 아니었거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폐회 중이기도 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정성호 위원** 그래서 긴급재정명령을 발령한 사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령하면서 별도의 기구를 만들었던 사례도 사실은 우리 헌정사에 없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정성호 위원** 지금 굉장히 어려운 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화 이후에 세 번의 탄핵이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 그렇다고 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2016년 12월 9일 날 의결이 있었고 2017년 3월 10일 날 탄핵이 의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4일 날 탄핵 의결이 됐고 현재 심판 진행 중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만 국가의 상황은 그 당시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2016년도 탄핵 의결할 때는, 저는 그 당시에 의원이었는데 국회의원 234명이 동의했습니다. 그 당시 여당이 과반이 넘는 다수당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탄핵에 대한 국민적 지지율이 80%가 넘었어. 보도를 기억해 보면 그렇게 생각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여야 간에 있어서도 여당 의원들이 탄핵에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국론이 지금처럼 분열되어 있지 않았어. 지금은 굉장히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탄핵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찬반양론 때문에 국가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2016년도 상황에는 그런 여론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일하기도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국회가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기재부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당시는 총리가 권한대행이었지만 지금은 또 부총리가 권한대행 아닙니까? 부총리가 권한대행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1차관께서 업무지

원단의 단장 맡으셔 가지고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정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와중에도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아요. 1차관이 업무지원단장이기 때문에, 부총리 지원하기 위한 업무지원단장이 아니라 대통령권한대행의 업무지원단장이지요. 그렇지요, 그 위치가?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그렇습니다.

○정성호 위원 그거 역할 잘하셔야 돼요. 중심 잘 잡으셔야 됩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알겠습니다.

○정성호 위원 지금 여기서, 국회에서 이런저런 얘기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중심 잡아야 돼요, 해야 될 일은. 민생을 직접 챙기는 게, 우리 기재부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정성호 위원 저는 추경 관련해서도 그래요. 과거 2016년도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면 여야가 합의해 갖고 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정부와 협의하면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국회가, 여야가 합의해라? 사실은 이걸 무책임한 거예요.

예산편성이…… 지금 야당에서 이렇게 저렇게 정부예산안 일방 통과시켜 놓고 추경안 편성했다, 추경안 냈다고 얘기하는데 야당의 추경안은 그냥 야당의 의지의 표현이지 추경안을 만들어 가지고 제출할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정부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민주당이 낸 안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민주당이 그 세부 항목들 정해 가지고 금액 정하고, 그 권한 요만큼도 없습니다. 기재부가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면 거기서 여야가 협의할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한은 총재께서도 어쨌든 최근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내수 진작이라든가 경기 대응을 위해 가지고 15조~20조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면 같이 의논해 가지고서, 어쨌든 F4 회의에서 여러 가지 의견도 교환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정부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국회에 내야지 여야가 합의하라? 어떻게 합의를 하겠어요, 안을 갖다가 기재부가 만들어 내는 건데.

저는 그런 점에서 이걸 국회 여야 합의해 달라 이렇게 던질 게 아니라 정말 이 상황에서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내용을 해 가지고 챙겨 가지고서 협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야당은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렇게 해 주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말 1·2차관이나 뒤에 계신 공직자들이, 지금 너무나 어려운 때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하고 또 다른 게 정말, 밴스가 유럽에 가 가지고서 ‘새로운 보안관이 나타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초강대국 미국의 대통령께서 일방적으로,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국제질서를 재편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국회에다 떠넘기고 합의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1차관이나 2차관이 ‘내 공직생활의 마지막 책임을 다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여야 누구 편드는 게 아니라 오직 국민만 바라보면서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유념하겠습니다.

○정성호 위원 한은 총재님, 요새도 F4 회의는 정기적으로, 가끔 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위원** 저는 한은 총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보내 주셨던데 한은 총재께서 적극적인 발언도 하시고 다양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하는데 그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F4 회의에 부총리가 나오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금요일에 매일 나오시고 계십니다.

○**정성호 위원** 꼭 나와 가지고…… 지금 왜냐하면 대통령이 부재한 상태에서 사실상 권한대행인 부총리가 다 하니까 한은 총재께서 그냥 대충 할 게 아니라 적극적인 의견을 내시고 경제 현안에 대해서 그런 입장들을 발표하고. 또 공직에, 지금 정부 안에 있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총재가 좀 자유롭거든요. 더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세로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호 위원** 일각에서는 또 F4 회의를 법제화해야 된다, 계엄을 합리화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게 비공개로 해야 자유롭게 의견 개진하고 특히 총재께서 밖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 총재가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영** 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동욱 위원님 데뷔 무대입니다.

○**신동욱 위원** 반갑습니다. 서울 서초출의 신동욱입니다.

오늘 대동강 물이 녹는다는 우수입니다. 물이 녹으면 고기들도 활동이 활발해지고 또 경제도 활발해져야 되는데 지금 여의도에도 봄이 오지 않았고 또 우리 경제도 겨울로 되 돌아가는 것 아닌가라고 걱정하는 국민들이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재위에서, 국회에서 좋은 대안들을 좀 많이 내 주시기를 바라면서 첫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용 총재님께 좀 여쭙보겠습니다.

추경이 15조 원 정도면 적절하다, 15조~20조 정도 적절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15조 원 중에는 소위 얘기하는 민생지원금, 직접적 소비진작 이 부분이 포함이 돼 있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저희가 그 구체적인 내역까지는 하지 않았고요. 저는 양으로 말씀드렸고.

다만 큰 원칙적으로는 일반적인 지출보다는 최근에 자영업자라든지 어려운 분들을 생각할 때는 타깃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총재님, 외국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신동욱 위원** 선진국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소비쿠폰이라든지, 우리 자영업자들 어려운 것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에는 물론 경기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들, 특히 내수시장의 구조적 문제 또 온라인 소비가 굉장히 늘어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 소비가 어려울 때 이렇게 직접적으로 쿠폰이라든지 또는

민생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줘서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법 이게 얼마나 일반적인 방법입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그렇게 현금 살포하는 것에 대해서 경제학계에서는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시작된 것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생기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현금을 지급하면서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전 세계에 많이 퍼져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현금을 살포하는, 나눠 주는 것은 전산체제나 이런 것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서 행정적으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 때 하는 방식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타깃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계의 정설입니다.

○**신동욱 위원** 이게 흔히 얘기하는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굳이 우리 현 상황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자영업자 말씀하시는데 존경하는 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영업자가 어려운 것이 경기가 나빠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사실 보시면 식당도 온라인에서 잘 나가는 데는 굉장히 잘 나갑니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소비쿠폰을 줬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잘 나가는 식당에만 계속 쓰고 그렇게 하게 되면 잘 나가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눠 주는 것보다는 타깃해서 주면, 같은 25만 원보다 몇 배에 해당하는 돈을 어려운 자영업자한테 지금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동욱 위원** 그러니까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민생지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총재께서도 분명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많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쭙보겠습니다.

지금 전 국민에 소비쿠폰 25만 원, 13조 그리고 지역화폐 발행지원 2조 이게 포함이 돼서 30조, 35조 원을 민주당이 주장을 하는데, 조금 전에 15조~20조 원을 지금 투입을 하면 우리 성장률을 0.1~0.2% 정도는 받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셨잖아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신동욱 위원** 35조 원을 우리가 추가로 썼을 경우에 우리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과 무게를 달아 봤을 때,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유용한 도구라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사실은 한 해에 하는 지출을 가지고 재정건전성을 얘기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액수가 크게 되면 그다음에 내년도 성장률이…… 재정이라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일시적으로는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올해 35조를 쓰면 내년도에 35조 이상이 되지 않으면 성장률에 음의 효과를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의 성장률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정을 많이 지출했을 때 내년도 성장률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을 다년간에 걸쳐서 보게 되면, 재정을 너무 많이 줘서 급히 성장률을 올리면, 굳이 의학적인 비유를 들면 진통제를 너무 많이 쓰면, 일단은 많이 쓰면 지금은 좋지만 나중에 안 좋은 것처럼 적절한 양의 진통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볼 때는 한 0.2% 정도 경제성장 효과를 보는 것이 좋지 GDP 갭이 좀

크다고 올해 굉장히 많이 쓰게 되면 일단은 좋아 보이지만 내년도는 35조 이상으로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욱 위원** 그 부분을 저희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국가부채가 급증을 했는데, 작년에 우리 윤석열 정부가 부채 수준을 어느 정도 동결하는 재정건전성에 주안점을 둔 경제정책을 펴 왔는데, 피치가 우리 국가신용도를 유지한 이유를 작년의 경우를 보니까 우리 재정건전성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줬고 올해도 그건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총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진통제를 맞으면, 이번에 35조를 쓰면 내년에는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든지 간에 또 40조 원, 50조 원을 계속 써야 되는데 지속가능하지 않은 처방을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존경하는 신 위원님, 제가 이 자리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것은 저는 추경에 관한 발언이나 재정에 관한 발언은 굉장히 경제학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하는 데 지금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으로 해석할 위험이 많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직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1차관님, 짚막하게……

(신문을 들어 보이며)

오늘 아침 조선일보 1면, 혹시 이것 보셨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자세히 못 봤습니다.

○**신동욱 위원** 답시크를 통해서 120만 명의 한국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흘러들어 갔다 이런 얘기인데 혹시 무슨 생각 드시던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답시크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AI위원회도 어제 열긴 열었습니다만 전 세계에 충격을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개인정보 유출 이랄지, 과연 이게 저비용·고효율의 AI냐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개보위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전 세계, AI라든지 이런 첨단기술이 의미하는 바는 단지 첨단기술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내 소비 기반이라든지 우리 국내 산업구조까지 송두리째 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기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리라든지 테무 같은 데 보면 개인정보가 외국으로 빠져나가면서 뭘니까, 온라인쇼핑 같은 데 정보가 대거 나가서 우리 국내 소비 기반이 무너지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AI 투자가 굉장히 빈약하다, 지금 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유럽……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런 많은……

안 줘니까, 여기는? 문제위는 무한대로 줬는데……

○위원장대리 박수영 여기는 마이크 없이 하시는 겁니다.

○신동욱 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투자를 해서 지금 국가 전체를 말하자면 방어하는 총력전인데 작년에 예산이 우리가 1.8……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1.8조 원입니다.

○신동욱 위원 1.8조로 깎였잖아요. 1.2조가 삭감이 됐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추경이라든지 다른 걸로 해서 보완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좀……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저희 AI 예산은 1.8조로 증액이 됐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AI위원회 같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고 아마 양당 공히 AI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셔서 논의를 해 주시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수영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정일영입니다.

요즘 제가 헌법재판소에서 답변하는 걸 보면 참 답답한 그런 장면을 많이 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걸 보면……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온 국민이 다 어렵고. 또 다른 의원이나 저도 그날 저녁에 국회 담 넘어 들어오다가 다쳐 가지고 병원에 다니고 진단서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아무 일도 없었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사실 오늘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 이 자리에 와야 되지요. 와야 되는데 아마 제가 확인한 길로는 또 양해를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두 차관님이 답변하는 것을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께 사전에 좀 협의하셨습니까? 최상목 부총리의 생각이라고 하면 맞습니까, 차관님?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저희가 자주 회의를 하기 때문에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컨펌을 받지는 않지만 뭐……

○정일영 위원 큰 줄거리는 맞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정일영 위원 그리고 오늘 상임위 끝나면 또 보고 좀 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개별적으로 저희가 보고드리는 건 아니고 아마 기조실장이 주요 사항에 대해서 모아서 보고드릴 겁니다.

○정일영 위원 기조실장이?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께서는 요즘 사무실 어디를 쓰십니까? 기재부에 계십니까, 주로?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원래 쓰시던 데 쓰시고 특별히 외빈이나 그런 경우에 한해서……

○정일영 위원 그러면 김범석 1차관이 업무지원단장 하면서 서포트를 더 잘하겠다 그

뜻입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오늘부터 아마 훈령이 발효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수영 간사, 송언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일영 위원** 잘하십시오. 왜냐하면 기대가 컸어요,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 경제도 잘 챙기고 잘하실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내란, 비상계엄 반대한다고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하셨었다고, 문을 박차고 나오셨다고 그랬나 그런 식으로 많이,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권한대행 하고부터는 마은혁 헌법재판관후보 임명 보류, 내란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등 굉장히 비난이 많습니다, 여론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잘하셔야 돼요. 말씀하신 내란, 비상계엄 반대했다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보여 주시는 것하고는 지금 완전히 거꾸로거든요. 경제 그렇게 중요한데 경제 현장이나 회의하는 모습도 안 보여 주고 계세요.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료 요구를 합니다. 작년에, 예를 들어서 1월에서 한 10월까지 경제 관련 내부회의·외부회의 그것하고 12월, 1월, 최근까지 부총리께서 얼마만큼 경제를 챙겼는지 자료 한번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오늘도 저희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계시고요. 다만 횟수로 비교하기가 좀 그런 부분이……

○**정일영 위원** 그래요, 그 자료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추경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을 안 하시는데 어쨌든 PPT는, 여러 위원님들이 하여튼 경제 어려운 건 다 동감을 하는 거고요. 공감하고 있고.

추경에 대해서 아직도 회피하시는데 최상목 부총리께서 재정을 상반기에 67% 정도 집행하시겠다고 그랬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정일영 위원** 그래서 1월 달에, 지금 연간 대비 한 8% 했습니까? 예정대로, 계획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지금 일별 기준으로는 저희가 가고 있는데 1월 달에 아시다시피 설 연휴가 있지 않습니까?

○**정일영 위원** 어쨌든, 짧게…… 45조 원 정도 집행하셨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정일영 위원**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2차관이 답변……

○**정일영 위원** 좋아요. 하여튼 2차관이 좀 챙기셔서 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시고…… 왜냐하면 추경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자꾸 회피하고 계시니까 조기집행으로, 조기집행의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것 자료도 좀 주시고.

예비비 관련해서 아까 김영환 위원이 질의를 많이 하셨고 그런데 김영환 위원이 하나 질문하다가,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이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미안한데……

예산총괄심의관님 나왔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아마 사회예산심의관……

○정일영 위원 아니, 예산총괄심의관이 예비비 심의할 때……

○기획재정부예산실장 김동일 예산실장……

○정일영 위원 예산실장 아니고. 예산총괄심의관이 용산에 근무했었고 예비비 담당 국장이지요, 예산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정일영 위원 예비비 심의할 때 항상 그걸 커버하고 답변하고 필요하다고 했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정일영 위원 그런데 본인이 없어서 확인을 못 하겠는데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한테 확인하십시오. 용산 대통령실하고 분명히 협의가 있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예비비를 엄청 커버했는데, 예비비 2조 4000억 여기 소위에서도 삭감하고 예결위에서 하던 그때, 그러고 나서 기재부에서 요구한 게……

저는 그런 의심이 가는 거예요, 쪽지에도 있지만. 계엄이 성공했으면 비상입법기구 설치해 가지고 지금 계엄 상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비비가 필요하겠지. 그 예비비를 확보하려고 그렇게 난리를 친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산총괄심의관한테 확인하시고,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자료 요구했으니까 자료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알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리고 유튜브의…… 국세청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안 나오나 본데요. 요즘에 극우 유튜버들이 거의 선동, 엄청나게 왜곡된 사실을 가지고 선동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이 벌면서 수입들이 두세 배 급증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과세하고 필요하면 세무조사 해야 됩니다. 국세청에 지시를 하십시오.

그리고 청년 일자리 문제인데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서…… 트럼프 행정부 때문에 외국에 투자를 해야 되겠지, 미국 같은 데. 그렇지만 청년 신규 채용,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보면 일자리의 85% 청년 신규 채용이 전부 해외였어요. 국내는 없어요. 이게 현대차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그러고 있거든. 그렇지요? 맞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국내에 있는 청년들 일자리 좀 챙겨 주십시오.

한국은행 총재님,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총재님이 추경 말씀하셨는데 추경은 정부에서 해야 되고요 총재님은 금리인하를 하셔야 됩니다.

이달 2월 25일 날 하시나요, 금통위가?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은 어렵겠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정일영 위원 그렇지만 1월 달에 금통위 끝나고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셨어요.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정과 통화정책 둘 다 필요한데 총재님은 어쨌든 금리인하를 하셔야 됩니다.

그 F4 회의 계엄 해제 의결 전에 하셨어요. 저는 그게 계엄을 서포트하는 역할을 했다

고 생각합니다. RP 자금 엄청나게, 12월 환매조건부 RP 48조 원 정도 매입했어요. 그렇지요? 이게 다 유동성 확보하고 사실상 계엄 해제 의결 전에 서포트하기 위해서 회의하신 거예요, 물론 경제라는 큰 틀이 있지만.

그리고 이 F4 회의에 아직도 최상목 부총리님이 참석하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투명성·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법제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재부에서 통보합니까, 모이라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정일영 위원** 기재부에서? 그러면 한은 총재님은 거기에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런 겁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공식화하고 다만 행정 업무를 기재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일영 위원** 어쨌든 그걸 좀 잘해 주셔야 되고요.

총재님께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평가를 처음에 엄청 잘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지만 국무회의 석상에서 헌법재판관 임명하고 나서 최상목 부총리가 좀 몰릴 때 총재님께서 부총리를 좀 서포트했어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총재님은 그런 소신 있는 발언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요즘 권한대행 부총리께서 좀 실망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계신데 지금도 똑같은 서포트를 하고 계신 겁니까, 마음속으로?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개개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최 부총리님을 그 당시에 서포트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결정권을 가진 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정일영 위원** 요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지금도 우리 집행 체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일영 위원** 예, 나중에 또 추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위원장님, 기재부차관입니다.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신 예비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조금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언석** 예, 그렇게 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유병서 국장이 기재위 소위에서 방어한 부분은 그동안 예비비 부분은 예산결산소위에서 주로 논의가 됐었기 때문에 기재위 소위에서는 그냥 통과시켜 달라는 그런 의미였고요. 예결위 소위에서는 제가 기재부2차관으로서 방어를 했고 그리고 12월 9일 날, 본회의 바로 전날 제가 예결위 야당 간사님한테 삭감됐던 2.4조 원, 예비비의 일부라도 조금 복원시켜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정일영 위원** 어쨌든 예비비 담당이 유병서 총괄예산심의관이고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편성을 담당합니다.

○정일영 위원 그 유 총괄심의관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다가 왔고 여러 가지 정황상 실무적인 협의를 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국장이다, 총괄 국장이다 그래서 얘기를 한 겁니다.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정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언석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 다년간 예산 경험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경험에서 우러나온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준 위원 진성준 위원입니다.

윤인대 차관보 나와 계신가요?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예.

○진성준 위원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계엄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사법 당국의 조사를 받으셨습니까?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제 기억으로는 한 2~3주 정도 전인 것 같습니다.

○진성준 위원 2~3주 전?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예.

○진성준 위원 그러면 12월, 1월……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정확하게는, 제가 1월……

○진성준 위원 1월 말쯤 되네요?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예, 1월 말이었던 것 같은데요.

○진성준 위원 1월 말?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예.

○진성준 위원 그때 조사를 받으시면서 그 문건도 경찰에 제출하셨습니까?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아닙니다. 경찰에 제출한 것은 12월 17일, 한참 전입니다.

○진성준 위원 12월 17일. 12월 17일에는 어떤 경위로 제출하게 됐습니까?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정확하게는 12월 13일입니다.

○진성준 위원 12월 13일?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그러니까 12월 13일 날 그때 최상목 부총리께서 본회의장에서 그 문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본회의장 나오셔서 가지고는 저한테 그 문건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셨고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경찰에 제출하라고 하셔서 가지고 제가 12월 13일 본회의 직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진성준 위원 경찰의 요청이나 이런 것이 따로 없었는데……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예, 없었습니다.

○진성준 위원 최상목 대행의 지시로 임의로 제출하신 거네요?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그렇습니다. 임의 제출입니다.

○진성준 위원 12월 13일?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12월 13일입니다.

○진성준 위원 그러면 12월 3일부터 12월 13일까지는 줄곧……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제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진성준 위원 보관하고 계셨습니까?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그렇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런데 지난번 내란국조특위에서 말이지요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이 ‘그 문건을 어떻게 보관했느냐’를 물었더니 최상목 대행은 ‘그걸 두 번 접어서 보관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접었다. 실제 시연도 해 보였지요, 이렇게.

(접힌 종이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접힌 채로 받으셨습니까?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저는 일단 접힌 채로 받았는데요. 주머니에 넣기 좋게 접혀 있어서 그것을 받자마자 제 주머니에 들고 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진성준 위원 주머니 오른쪽에 넣으셨어요?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예, 오른쪽입니다.

○진성준 위원 그게 대통령실에서 이른바 국무회의라고 불리는 회의 직후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그러니까 국무회의장에서 나오셔서 가지고 저희 F4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F4 회의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전달을 해, 맡겨 놓으셨습니까.

○진성준 위원 맞아요. 최상목 대행의 진술에 의하면 핸드폰을 꺼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잡혀서 꺼내 가지고 차관보께 건넸다.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예, 그렇습니다.

○진성준 위원 F4 회의 직전에?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그렇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게 접혀 있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예, 접혀 있었습니다.

○진성준 위원 차관보께서는 그걸 받아 가지고 어디에 넣으셨어요?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제 오른쪽 주머니에 넣은 것 같습니다.

○진성준 위원 오른쪽 주머니에 이렇게 넣으셨어요?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예, 그렇게 넣었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런데 이렇게 넣으면 보통은 이게 위로 빠져나오잖아요.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진성준 위원 이렇게 보관하고 있었네요?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진성준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접힌 문건이 공개된 사진에 의하면 주름이 없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주름이 남아야 되는데 왜 주름이 없냐, 그걸 펴서 냈냐 이렇게 국조특위에서 최상목 대행에게 물으니까 최 대행은 뭐라 그랬냐면 ‘저는 펴지 않았습니다. 차관보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답했습니다.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접힌 상태에서 저는 경찰에 그대로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제출 당시에도 경찰에서 내용을 확인해 주려고 그 내용을 펴려고 할 때도 저는 그것 보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냥 저도 안 본 상태, 접힌 상태에서 저는 제출을 했었습니다.

○**진성준 위원** 접힌 상태로?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예.

○**진성준 위원** 주름이 있는 상태로 제출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그렇습니다.

○**진성준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언론에 나온 이 사진의 보도 이것 보신 적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예, 봤습니다.

○**진성준 위원** 여기에는 주름이 하나도 없어요.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진성준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좌우지간 펴서 읽어는 보셨잖아요.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예, 앞에 봤습니다.

○**진성준 위원** 이것 언제 보셨어요, 읽어 본 것은?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F4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건네주셨고 그때 한은 총재님이 들어오셔서 가지고 두 분이 얘기하실 때 저는 회의 준비 때문에 밖에 나가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잠깐 봤습니다.

○**진성준 위원** 잠깐 봤잖아요.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예, 봤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런데 기억에는 별로 생각이 안 난다, 예비비 재정 확보해라라고 하는 것만 기억난다라고 이 자리에 오셔서 한 번 진술하셨어요.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그때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거기 심각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내용이 긴 것도 아니지만 맨 첫 줄에는 예비비를 확보해라, 두 번째로는 국회 운용 자금을 완전 차단해라, 세 번째로는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확보해라, 이 세 가지예요.

그런데 예비비를 확보해라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늘 하는 얘기고 당시에 예산심사철이었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냐 마냐 이런 시기였으니까, 12월 1일 날 국회 예결위에서 단독으로 처리됐었지요, 감액안이.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11월 29일.

○**진성준 위원** 12월 29일 날?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11월 29일.

○**진성준 위원** 예, 11월 29일 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꼭 좀 확보해라라고 하는 얘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계엄과 무관하게라도. 그리고 늘 쓰는 말이니까 머릿속에 그것이 깊이 남지 않을 수 있지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국회 운용 자금을 완전히 차단해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생전 들어 보지도 못했던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확보하라는 거였어요. 이것

읽어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게 제 담당은 그 당시에 F4 회의였고 경제 안정이 가장 급선무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제 소관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보는 순간 다른 분한테 전달해야 되겠다, 그리고 빨리 접고 저는 F4 회의를 통해 가지고 메시지를 내고 그다음 날에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해서 경제 전반을 안정시키는 게 저의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진성준 위원 별로 신경 안 썼다 이런 말씀이세요?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예, 그렇습니다.

○진성준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 칩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최상목 대행에게 그 문건이 있음을 상기시킨 게 언제예요?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그러니까 돌아와 가지고요, 제가 1급 간부회의를 했었고요. 1급 간부회의의 진행이 거의 다 끝날 때쯤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 봐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1시 40분, 50분, 회의 끝날 때쯤에 제가 부총리께 리마인드시켜 드렸습니다.

○진성준 위원 회의가 끝나 가지고 해산되지 않은 상태였네요.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그렇습니다. 해산되기 전이었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러면 여러 간부들, 기재부의 간부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걸 상기시켰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예,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거의 끝날 때쯤이라서 약간 웅성웅성대고, 그때는 저희가 다음 날 있는 F4 회의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진성준 위원 아니 글썄, 짧게.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어떤 메시지를 낼 건지……

○진성준 위원 그러니까 해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그렇습니다. 해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진성준 위원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리 쭉 봐라 그러셨어요, 최상목 대행이?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다른 분도 얘기해 가지고, 저는 사실은 제 옆에 한 분 정도 있고 이렇게 보여 드리고 ‘부총리님, 이것 아까 주신 건데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드렸더니 잠깐 열어 보시더니, 제목 보시더니 그냥 무시하라 그러셔서 제가 그냥 다시 돌려받은 것입니다.

○진성준 위원 그러니까 차관보께서 대행께 문건을 접힌 채로 드렸고?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그때는 약간 펴서 드렸지요.

○진성준 위원 펴서 드렸어요?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예, 펴서 드렸지요.

○진성준 위원 펴서 드리니까 최 대행이 이렇게 보시더니 일별하고서……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잠깐 보시더니, 제목을 좀 보고 앞에 잠깐 보시더니 그냥 우리는 계엄을 반대하기로 했기 때문에 무시해라라고 하셔서 제가 돌려받았습니다.

○진성준 위원 계엄을 반대하자라고 하는 결정은 그 간부회의에서도 또 했나 보지요?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그 앞에 그렇게 이루어졌었지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진성준 위원 F4 회의에서?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F4 회의가 아니고 저희 1급 간부회의 시작할 때 부총리께서 국무회의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서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시면서 본인은 반대했던 상황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본인은 절대 반대로 간부들도 우리는 다 같이 반대한다는 의사를 다시 표시를 했었고, 그런 것들이 앞에 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성준 위원** 그래서 반대하기로 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은 그냥 무시하고 가지고 있어라?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조치를 하라는 게 없이 무시해라라는 결로 끝나 버린 상황이었지요.

○**진성준 위원** 무시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어요?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예, 그렇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래서 그 뒤로 그냥 가지고 있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예, 제가 계속 들고 있었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걸 어디에 가지고 계셨어요?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제가 늘 들고 다니는 가방 앞주머니에 보관했었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러니까 사무실의 책상 서랍 같은 데는 보관하지 않으셨네요?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아닙니다. 그날 앞주머니에 넣고는, 저는 제 일이 계속 바빠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못 쓰고 있었습니다.

○**진성준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언석** 다음은 존경하는 최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석 위원** 한은 총재님 그리고 기재부 두 차관님들 아주 고생 많으십니다.

기재부1차관님께 제가 좀 여쭙보겠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의 법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데 상법 개정 관련해서 정부 입장이 명확하게 어떤 것인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 생각에는 첫 번째, 상법 개정이 작년 한 해 내내 되게 소모적인 정쟁으로 치달았던 금투세 폐지 논란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좀 닮아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의 효과가, 영향이 어떻게 미칠지에 대해서 좀 더, 기업 경영 현실을 도외시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관련해서 좀 여쭙보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 지금 현재 상법 제382조 3항을 보면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민주당에서 조만간에 개정안에 대해서 확정을 할 것 같지만 제가 구체적인 개정안을 아직 못 봐서, 그동안 나온 민주당의 개정안을 보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이사는 회사와 총주주를 위하여’ 또는 ‘이사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위하여’ 이렇게 아마 상법 조문을 수정하는 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법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가 아니고 일반 주주로 확대되게 되면 여러 가지 나타날 부작용이 좀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차관님 그와 관련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법무부하고 금융위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재계에서 우려가 아주 많고 특히 주주가 어디로 특정할 수 있는,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차이 그리고 배임죄 문제 등으로 아주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석 위원 다음 장 보시지요.

방금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특히 상장기업에, 이렇게 대형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주가, 다양한 주주들이 많습니다. 여기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대주주도 있고 또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대주주도 있고 또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도 많고 또 단기 보유하는 소액주주 또 어떤 주주들은 아주 초단기로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소액주주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유 목적은 여러 가지 기업의 장기적 성장이나 기업가치 제고부터 아주 초단기 시세 차익을 얻고자 하는 주주들로 해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 그 목적이 되게 상이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최은석 위원 다음 장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마 상법을 이렇게,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하고 계신 민주당에서 실제로 기업경영에 참여하고 계신, 참여한 어떤 경험이 있으시거나 기업경영의 실상을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기업은 일반적으로는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 기업의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최은석 위원 다음 장 보실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 기업이 처한 환경을 보면 지금 미국의 트럼프 정부 집권 이후에 여러 가지 글로벌 통상과 관련된 또 관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불확실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퍼펙트 스톰이라고도 할 지금 상황에 우리 한국 기업들이 다 직면해 있는 내용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다음 장 보시지요.

그러면 지금 한국 기업한테는 어느 때보다도 기업 경영자들 특히 이사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불확실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속하고 탄력적인 경영 의사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관님 동의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최은석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상법 개정이 이사의 의무를 회사가 아니라 일반주주까지 확대되게 되면, 상법이 만약에 이렇게 개정된다고 할 때는 기업의 의사결정이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는 아주 복잡한 의사결정 매트릭스를 거쳐야 됩니다. 실제로 기업경영의 현실을 정말 도외시한 탁상공론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 상법 개정안이 되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정말 새로이

바뀐 상법에 따라서 기업의 의사결정을 과연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데에 대해서 정말 의문점이 많습니다.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23년도 삼성전자 손익계산서 있습니다. 여기 보면 23년도에 환경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한 6조 60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R&D 비용은 한 28조 정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15조 정도 났는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TSMC나 애플 등과 아주 여러 가지 글로벌 경쟁을 많이 해야 되는데 R&D 투자를 좀 대폭 확대해 보자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할 때 만약에 상법이 개정된다면 R&D 비용을 한 30% 정도만 늘려도 삼성전자가 연간 영업이익에서 영업손실로, 그러니까 이익이 적자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삼성전자의 이사진들이 글로벌 경쟁을 위해서 R&D 비용을 한 20~30% 정도 늘리자라고 하게 되면, 오른쪽의 매트릭스를 보시면 이게 실제로 기업의 장기 성장, 장기 가치 제고에 관심이 많은 대주주와 초단기 보유하는 소액주주 간에 도 대체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사진들이 판단하기 되게 어렵게 됩니다. 한 20~30% 늘리면 영업 적자로 돌아서고 R&D 비용을 정말 글로벌 대형 회사들과의 경쟁을 위해 승부수를 던지자라고 해서 한 100% 늘려 보자 이러면 당기순손실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주식시장에서 갖고 올 반응을 보면 단기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 투자하는 소액주주들은 왜 불확실한 미래에 아무런 확신도 없이 이렇게 R&D 비용을 대폭 늘리냐 이렇게 분명히 문제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최은석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R&D뿐만이 아니고 신규 지역 진출이나 M&A나 대규모 외부자금 조달,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법이 개정되면 실질적으로 기업경영 현실에서 보면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되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기업의 이사들은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소송 리스크 같은 것들을 감안하면 의사결정을 회피하게 됩니다. 회피하고 의사결정을 뒤로 미루게 되겠지요. 그러면 기업 경영자들이 이렇게 의사결정을 회피하고 미루게 되면 기업경영이 크게 위축될 걸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차관님?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재계에 그런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석 위원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 탈락하게 되면 과연 한국 경제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날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저는 여기 계신 정부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민주당 위원님들도 다시 한번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게 우리 한국 경제를 위한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정말 다시 한번 냉정하게 좀 판단해 주시고 상법 개정안을 철회해 주실 것을, 이렇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차관님도 오늘 내용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선 위원 황명선입니다.

1차관님, 2025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KDI가 11월 달에 2%대로 전망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황명선 위원 그런데 올 2월 달에 보면 1.6%대로 하향을 했어요. 맞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황명선 위원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 1월 23일 보고서에서 보면 1.5%대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보통 경기부양을 위해서 20조 원 정도 규모로 추경을 추진할 경우 한 0.2% 정도로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KDI가 지난 11월 달에 2%대에서 2월 초에 1.6%대로 하향 조정을 했어요. 불과 한 3개월 만에 0.4%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부양을 위해서 40조 원 정도의 추경예산이 필요하다고 봐져요, 예측을 할 때.

제가 볼 때 첫 번째, 이렇게 하향 조정을 한 가장 큰 이유가 저는 12월 3일 내란으로 인한 국가의 신인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국가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문제라고 봐지는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아까 한은 총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일부 작용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절대 대부분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황명선 위원 그러면 그 이유가 뭐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저희 기본적으로……

○황명선 위원 많은 전문가들은 12·3 내란 이후의 불확실성을 가장 크게 보더라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내수경기 쪽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작용한 부분 맞고요. 다만 수출 쪽에서도 수출 증가세가 좀 둔화되고 있고 저희가 모든 부분을 다 반영하지는 않았지만 KDI 같은 경우도 트럼프 관세전쟁 그런 부분들은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낮췄기 때문에 전부 다 내란, 계엄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황명선 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해서 내수 지표에서 부진된 내용을 보면 지난 소매판매를 보면 전년 대비 2.2%가 하락됐고 건설 부분은 한 4.9%가 하락했어요. 25년도 1월 달에 소상공인 체감 경가지수도 전월 대비 6.1% 하락된 41.6%입니다. 그러니까 내수 지표가 굉장히 부진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2·3 내란, 아주 직격탄을 맞았다고 봐요.

예를 들면 연말에 굉장히 많은 모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서울이든 전국 어디 지역을 가더라도 골목에 가면 식당가든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정말 아주 그냥 눈물로 호소를 하고 있어요. 모임들이 취소가 되고 이런 상황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기는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다, 민생의 위기, 경제성장의 위기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차관님, 맞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지금 여러 가지 내수나 대외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인 건 정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황명선 위원** 그런 의미에서 경제성장과 민생 회복에 지금 우리 국가가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맞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국정협의회에 적극 참여해서 논의드리겠다는 말씀을 저희 부총리께서 드리고 계십니다.

○**황명선 위원** 맞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황명선 위원** 모든 것을 국정협의회에다가 이야기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생 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해서 저는 바로 추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게 추경입니다.

그런데 추경을 지금 차관님이 이야기, 말씀 주셨다시피 국정협의회에다가 왜 넘겨요? 서로 갈등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 편성 권한을 입법부가 갖고 있지 않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논의……

○**황명선 위원** 그거 기재부, 정부가 갖고 있지 않아요, 행정부가? 편성 권한은 행정부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권한은 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황명선 위원** 그런데 국정협의회에 계속 넘기면 안 되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정부가 그렇다고 마음대로 편성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황명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편성해 드릴까요?

민주당에서도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민생 회복과 관련돼서 농어업 지원과 관련된 무기질비료 지원, 쌀 대체작물 확대, 낙농업, 청년후계농,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양식업 지원 확대, 이게 농업 지원이거든요. 과거 본예산에 부족하거나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필요하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그 부분은……

○**황명선 위원** 취약계층과 관련돼서 서민금융 그다음에 장애인 예산 증액들이 필요해지고 국민의 안전 강화를 위해서 감염병 대응 강화 그다음에 얼마 전에 공항의 안전 또 단기복무장려금, 군 장병들 급식비, 기본급식비, 장병들에 대한 처우개선 다들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황명선 위원** 아니, 뭐 다 아시잖아요.

기재부가…… 아니, 지금 우리가 정치적으로 논쟁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정부예산을 편성하는 가장 책임 있는 부처가 기재부고 저는 기재위 국회의원으로, 기재위 소속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민생 현장에 대한, 경제와 민생 회복에 대한 내용을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치적으로 제가 의사표현을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경제성장을 위해서 공공주택이나 청년 일자리·창업지원 예산, AI, 반도체 투자 확대, 전력망 확충, 전기차 지원 확대, 5세 무상보육 이렇게 등등등등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정말 시급합니다.

이것을 기재부가…… 추경에 대한 예산편성 권한을 행정부가 갖고 있고 그 중심에는 기재부가 중심이 돼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게 다 개별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것이고 본사업에 담아야 될 사업이 있고 추경에 담아야 될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23년도에 자영업자·소상공인들 폐업자 수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24년도는 통계치가 어떻게 되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제가 자세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그런 의미에서 저는 민생회복지원금과 그리고 지방정부의 지역화폐에 대한 이 제도, 굉장히 저는 처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한 분 더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하람 위원** 김범석 차관님, 지금 대통령권한대행 업무지원단장을 맡으셨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천하람 위원** 업무지원단이라는 게 대통령권한대행의 보좌를 담당하는 그런 기구니까 기재부 내에서도 우수한 인재들로 업무지원단을 꾸리셨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기본적으로 기존의 비서실과 기재부에 없는 기능들, 치안 이랄지 안보랄지 외교, 그런 분들을 다른 부처에서 파견을 받아서 소규모로 꾸렸습니다.

○**천하람 위원** 기재부 소속이신 분들도 많이 포함이 됐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대부분 기재부 소속입니다.

○**천하람 위원** 그렇지요? 보니까 기재부 국장님들 그리고 여러 예산 과장님들, 주요 보좌에 있으신 분들도 업무지원단으로 발령이 났던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기재부 본연의 업무가 소홀해지는 문제점 없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저희가 안 그러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런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더라도 어쨌든 대통령권한대행을 보좌하는 업무는 다른 업무보다 최우선적으로 에너지나 인적인 여러 어떤 자원들을 쓸 수밖에 없는 업무 아니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기본적으로는 권한대행께서 부처…… 말씀하신 안보랄지 하는 부분은 대통령기록물법이랄지 여러 가지 법적으로도 또 논란이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지원단이라고 만든 목적 자체도 차관 포함해서 저희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권한대행을 보좌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훈령을 만든 측면이 있고요. 그런 취지에서 직접 부처, 전 부처가 권한대행이라는 그런 인식으로 직접 보고를 드리고 있고 부총리께서도 기존의 저희 기재부 역할에 충실하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천하람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외교안보팀장에 기재부 국장 출신인 분이 임명됐습니다. 이분이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실 정도로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그러니까 컨트롤타워라는 표현보다는 리에중 오피서(liaison officer)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교부장관이 여기 와서 직접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시고요. 다만 모든 사안을 외교부장관이 수시로 와서 직접 보고드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실로 따지면 외교비서관이 없고 안보실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최소한의 중요도하고 시급성을 봐서 간단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중요한 사항은 직접 와서 보고드리고 하는 그런 리에중 오피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하람 위원** 방금 차관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기재부에는 당연히 안보실장도 없고 외교비서관도 없지요. 대통령실에 그런 분들이 엄연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걸 여쭙보면서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은 대통령실에서는 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제대로 된 보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기본적으로 정책실 같은 부분은 저희 기재부하고 기능이 겹치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필요가 없어서 직접적으로 보좌를 안 받고 회의 등을 통해서 정책실장이라든지 오셔서 의견을 개진하고 계시고요. 안보실 같은 경우도 안보실장님이랑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부처에서 안보실을 거쳐서 저희한테 오는 것보다는 부처가 저희한테 직접 소통하는 면이 더 효율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하람 위원** 그런데 효율성 말씀하시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기재부 본연의 중요한 역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차관님들이나 총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경제가 여러 가지 대외 여건이나 또 최근에 있었던 비상계엄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을 놔두고 어떻게 보면 기재부에 미니 대통령실 같은 기관을 만드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낭비고요. 그리고 제가 문제를 지금 좀……

이거 어떻게 보면 기재부보다 대통령실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입니다. 대통령권한대행이 있다면 마땅히 권한대행을 보좌를 해야 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한 개인을 보좌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권한대행에 대한 제대로 된 보좌를 못 하는 것 때문에 기재부의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간부들이 별도의 제2대통령실 같은 것을 꾸리는 거는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낭비고 좋지 않은 선례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컨대 늘공, 소위 말하는 늘공이라고 하는 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대통령실에 각 부처에서 파견된 어공이라고 할 만한 공무원들도 당연히 계시지 않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천하람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것이지만 사실 기재부에 있는 여러 자원들을 쓸 것이 아니고 굳이 엄밀히 따지면 최상목 대행께서 용산에 가서서 집무를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원칙적인 모습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 있는 자원들을 최대한, 예를 들면 이런 별도의 조직을 꾸려서 업무

지원단을 만든다 그러면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써야 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기재부에서 지금 중요한 국·과장 하시는 분들 다 빼다가 권한대행 보좌하는 데, 미니 대통령실 같은 거 꾸리는 데 쓰면 기재부에서 소는 도대체 누가 키우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일단 말씀하신, 부총리께서 권한대행을 맡는 사상 초유의 일이 생겨서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좌 TF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저희가 거기서 구체적으로 정책이나 보고서를 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안보실,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각 부처와 저희가 연락을 하고, 중요도에 따라서 그런 거를 연락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던, 저희가 어떤 권한을 행사한다거나 그런 일은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원칙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 언론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저도 뭐 듣는 얘기들 있지 않겠습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고 나서 대통령실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견제나 비협조가 도를 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저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대통령실이 그냥 아무 기능도, 권한대행을 제대로 보좌하지 않는, 그러니까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남겨둘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권한대행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적절하게 적극적으로 활용해서라도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이분들이 권한대행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지요. 그렇지 않고 지금 기재부에 있는 인원들만 가지고 최소한의 역할만을 해 나가겠다? 저는 그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이나 기재부가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원단 만드셨기는 했지만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을 일을 하게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실도 일부 저희가 필요한 기능을 활용하고 있고요. 예컨대 인사랄지 하는 부분은 실제로도 활용을 하고 있고 직접 와서 보고를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대통령실이랑 협조를 안 한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말씀하신 저희 기재부 안의 인력 같은 경우도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던, 바로 직전에 근무했던 친구를 불러와서 업무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알겠고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영 위원** 부산 남구 출신 박수영입니다.

차관님, 추경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1월 31일 날 말씀을 하셨어요. ‘전 국민 민생지원금 25만 원 포기할 수 있으니까 추경 빨리 편성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한 열흘 지나고 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추경안을 냈는데 35조 원에 달하는 추경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13조 원에 달하는 소비 쿠폰, 즉 전 국민 25만 원은 물론 들어있고 또 지역화폐 발행 할인 지원이라고 2조 원이 들어 있어서 1월 31일 날 말씀은 안 하겠다고 하셨는데 최종 낸 추경안에는 무려 15조 원에 달하는 이런 소비진작 민생지원금이 들어있게 된 것입니다.

추경을 35조 편성하면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차관님? 세금 걷은 걸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국채 발행해야 됩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다 국채로 발행을 해서 충당을 해야 됩니다.

○**박수영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 그거는 얼마나 올라가게 됩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제가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추경을 할지 안 할지 규모가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경상 GDP가 한 2600조 되기 때문에 26조 정도를 한다면 그러면 국가채무가 1%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35조 올라가면 제가 기재부의 자료 받아 봤더니 1.3% 채무비율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올해 기준으로 48%입니다.

○**박수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1.3% 더 올라가게 되면 이게 완전히 50%를 돌파할 수도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즉 이게 쉽지 않다. 이렇게 많은 돈을 전부 국채를 100% 발행해 가지고 한다는 거는 정말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13조 원 플러스 2조 원 이래서 15조 원으로 민생지원금이 나가게 되는 형국인데 그것만 되는 게 아니고 지역화폐 발행을 하게 되면 발행비용이 또 들게 됩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전 국민 25만 원 지원하는 데 13조 1000억, 지역화폐 할인 지원에 2조 원 그다음에 지역화폐 발행에 필요한 발행비용, 국회예산정책처에서 10% 내외 든다고 했으니까 그게 1조 정도, 1조 5000억. 그러면 총예산이 16조~17조 원이 드는 큰 계임을 지금 하게 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거를 25만 원씩 나눠 주는 것보다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만약에 이 정도의 재원이 있다면, 현재 없기 때문에 저는 추경 편성에 반대하고 있습니다라는 하게 되면 효과가 있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의 지금까지의 입장은 뭐냐 하면 핀셋 지원, 즉 어려운 사람들, 한국은행 총재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 정말 힘든 분들 도와주는 데 써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저는 만약에 우리가 이 정도, 16조~17조 정도의 돈이 있다면 SOC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 전공이신 철도 이런 데다가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역구가 부산이다 보니까 자주 기차를 타고 내려가게 되는데 현재 기차표 구하기가 정말 너무 힘듭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병목구간이 5개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문제인 정권 때부터 삼질 예산이다 그래 가지고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철도 병목구간들이 5개가 있고 이 구간들 때문에 열차를 더 배치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지금 최대한 배치해 놓은 상황이 이겁니다.

첫 번째 것 한번 보시면, 평택에서 오송 구간입니다. 평택-오송 구간의 선로혼잡도 94.2%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서역에서 출발한 SRT하고 용산이나 서울역에서 가는 KTX가 평택에서 갈라지기 때문에 이 구간이 항상 병목이 돼 가지고 부산으로 가는 또는 호남으로 가는 선을 더 넣고 싶어도 넣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돼 있다는 것이지요. 혼잡도는 80%만 넘으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94.2%나 되는 상황이고요. 이것 병목구간 해결하는 데 드는 돈이 3조 5000억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병목구간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광명-평택 구간입니다. 혼잡도는 85.6%. 여기도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 전부 지나가기 때문에 혼잡도가 높아서 열차를 더 배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병목구간 보실까요.

서울역에서 금천구청까지 역인데 이거는 빠른 열차, 느린 열차 이런 게 막, 화물차, 전동차 막 다 뒤섞여 가다 보니까 여기도 또 병목구간입니다. 혼잡도는 87.4%.

그다음, 경의선도 문제인데 경의선 수색-서울 구간 혼잡도가 90.2%입니다. 아까 80% 넘으면 문제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이게 일반 열차, 고속열차, 입출고하는 열차, 경의선 열차, 화물 열차 혼용하기 때문에 선로혼잡도가 지금 과도하게 되어 있어서 더 이상 투입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 고치는 데 드는 돈이 2조 5000억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중앙선 하나 있습니다. 청량리-망우 구간입니다. 여기 혼잡도가 제일 높는데 95.7%입니다. 이 병목구간은, 청량리-망우 구간 여기도 마찬가지로 속도 다른 열차들이 막 뒤섞이다 보니까 투입을 못 하는 것이지요. 이거 고치는 데 2조 7000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병목구간 총 사업비가 14조 정도 드는데 기투자한 금액을 빼고 나면 13조 8000억, 약 14조 원 정도면 병목구간을 모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예산이 없으니까 못 하지만 한다면 이재명 대표님 말씀하시는 25만 원 나눠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SOC에 투자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차관님, SOC에 이렇게 투자하면, 재정 투입을 하면 승수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박수영 위원 이게 어느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시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아까 오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대략적으로 이전지출 같은 경우는 한 0.2 정도, 정부 소비는 0.8이 나왔고요, 정부 투자는 0.64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25만 원 다 나눠 주면?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이전지출로 보게 되면 0.2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렇지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SOC에 1조를 투자하면 생산유발효과 2조 1900억, 부가가치유발효과 7500억 해서 승수효과가 2조 9451억이 당장 나온다 이렇게 지금 자료가 돼 있더라고요.

따라서 앞으로 진행하시면 이게 좀 더, 혹시 예산이 남게 되면 SOC 쪽으로 직접투자를 좀 해 주시는 것이 승수효과도 높고 부가가치유발효과도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있으면 이쪽으로 좀 신경 써 주시기를 차관님께 부탁드립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정태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위원 정태호 위원입니다.

한국은행 총재님, 계엄 후 경제 상황에 대해 대처하는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정치적 불확실성의 조기 해소, 두 번째로는 정치와 경제의 분리 그리고 정치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통일된 입장. 맞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정태호 위원 정치적 불확실성의 해소는, 비상계엄 탄핵 국면을 조기 종결하는 게 경제에는 제일 좋은 것이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통일된 입장은 국정협의체에서 추경에 대해서 합의하는 게 제일 좋은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 기초에 맞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당연히 합의 보면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적정한 규모를 20조 가까이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GDP 갭을 전제로 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다양한 면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모든 걸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태호 위원 여하튼 한국은행 총재님의 입장에서 보면 탄핵 국면이 빨리 종결되는 것과 그다음에 국정협의체를 통해서 여야 간에 추경에 대한 조기 합의를 하는 게 경제에 대해서는 최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경제정책 전반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했잖아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정태호 위원 정부가 2.2%에서 1.8%로 하향 조정을 했고 KDI가 2.0%에서 1.6%로 조정했는데 차관님, 비상계엄의 영향이 있다고 보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아까 한은 총재께서 말씀하셨지만 일정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렇지요. 비상계엄으로 지금 경제성장률이 0.4% 가까이 떨어졌어요, 정

부 입장으로 보더라도,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1.9%에서 1.6~1.7로 하향 조정을 했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렇습니다. 1월 달에 했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 영향이 어느 정도로 봅니까, 비상계엄이 경제성장률 하락에 미치는 영향이?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저희가 그 분석은 12월 자료를 가지고는 있는데요 1월 뒤부터는 계엄의 효과만을 분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진행 중이고……

○정태호 위원 12월 달에 판단했을 때는 어땠어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4/4분기 성장률의 0.4 떨어진 것의 반 정도가 그 효과라고 봤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렇지요. 1.9%에서 1.6%로 떨어질 때 한은 금통위……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아니요, 1.9가 아니라 4/4분기 0.5% 성장하던 거가……

○정태호 위원 1월 금통위 결정할 때 한국은행의 경기 평가에 의하면 GDP 성장률에 약 0.2%p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정치적 불확실성의 영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렇지요, 그게 비상계엄의 여파니까. 그렇잖아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게 어려운데요. 그래서 저희가……

○정태호 위원 여하튼 비상계엄의 영향으로 이렇게 성장률이 떨어졌다는 말이지요. 환율상승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나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환율은 저희가 처음에 얘기할 때 1400원에서 1470원으로 올랐을 때 70원 정도에서 한 30원 정도가 정치적 불확실성의 영향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현재는 지금 1450선 정도에 와 있는데 그 뒤로는 너무나 많은 다양한 효과가 있어서 같은 분석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태호 위원 1400원에서 1470원이 됐을 때 총재께서는 그중에서, 70원 정도의 상승 중에서 30원 정도가 비상계엄 여파다, 정치적 불확실성 영향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렇지요? 이거는 객관적인 분석이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여러 방법론이 있지만 저희 방법론에 의해서는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24년 10월 달에 1.3%였다가 1월 달에 2.2%로 올라갔어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환율상승에 영향이 있는 건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환율상승에 영향이 1월 달에는 좀 있었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정태호 위원 지난번 2월 5일 물가 상황 점검회의 자료에 의하면 물가상승률의 0.1%p 정도를 올린 것으로……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만일에 환율이 1450원 이상으로 올라가 있으면 물가상승률이 연간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렇지요. 여하튼 간에 환율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물가상승률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렇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해 가지고 성장률이 떨어지고 환율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물가가 안정적으로 가다가 다시 상승하는 쪽으로 영향을 미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물론 그게 유가상승 부분, 여러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런데 유가상승은 환율상승의 영향을 받아서 국내 물가에 반영이 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물가 점검회의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정치적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친 거는 사실이지만 다른 요인도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태호 위원** 아니, 물가 상황 점검회의 때, 그대로 제가 옮기면 ‘환율상승은 석유류 가격 등을 통해서 1월 CPI 상승률을 0.1%p 정도 높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환율상승이 국내 유류가에 영향을 미친 것이지요. 그래서 물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한국은행의 분석입니다.

지금 제가 이 통계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통령께서 계엄 선포하고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마치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그래서 탄핵해서는 안 된다 또 심지어 내란죄 몰아가는 거는 공작이다. 그리고 또 여당 의원님들은 심지어 헌법재판소까지 가 가지고 헌법재판관에 압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조기에 해소되는 것, 다시 말하면 탄핵 국면이 빨리 종결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경제를 위기에서 구하는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통계를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립니다.

차관님, 최상목 권한대행도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 경제에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얘기를 하셨거든요. 차관도 동의하시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그런 우려 때문에 계엄에 반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이 대한민국에 치명타를 남겼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정치권이 탄핵 국면을 조기에 종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언석** 1차 주질의를 마쳤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를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희망하시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손 든 사람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황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선 위원** 아까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경제성장과 민생 회복이 지금 아주 절실하게 요구되는 이 시기에 추경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정부나 국가의 역할은, 정말 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때 대출을 받았던 그러한 분들까지 포함해서 지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가 되고 아주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국가가 해야 될 역할들은 힘이 되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국가의 공동체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정부나 국가의 역할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민생 회복과 관련된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더불어서 경제 성장할 수 있도록 반드시 추경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논의했던 지역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저는 지역화폐는, 제가 국회에 오기 전에 논산시장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전국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대표 회장도 했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시장·군수·구청장들의 요구들이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요구들 또 법과 제도에 대한 요구들을 담아서 제안하고 요청도 하고 또 법안 요구도 합니다. 과거에 했었습니다.

지역화폐는 실질적으로 진보나 보수의 개념이 아닙니다. 특히 이게 몇 가지 측면이 있는데 큰 장점은 뭐냐 하면 해당 지역 내 선순환…… 복지의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복지의 개념이 아니라 골목경제에 대한 선순환 구조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어려울 때 빚을 변제할 수 있도록 연체했을 때 도와주는 이 핀셋의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장사가 잘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나 국가가 책임 있게 나서서 해 주는 데 지역화폐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것을 현장에서 직접 체감을 했고 그렇게 정부에다가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유독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도외시합니다. 항상 정부예산안 확정되기 전에 여야 간에 최대한 밀고 당기고 이런 입장에서 마지막에 일부 예산이 반영되는 이런 형태예요. 이것은 보수나 진보의 개념이 아닙니다.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가 담아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민생회복지원금도 코로나 때 우리가 지원했던 게 있어요. 총재님 말씀 중에서 조금 제가 부담스러웠던 내용이 살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살포가 아니거든요. 코로나 때 우리가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뭐냐 하면 현금뿐만 아니라, 현금이 아니라 거기다 지역화폐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현금 살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해 그들을 위한 핀셋의 복지정책의 개념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분들이 근본적으로는 장사가 잘될 수 있도록, 골목경제가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바로 지역화폐입니다. 그리고 매번 할 수는 없지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하는 겁니다.

이런 입장으로 기재부의 차관님들 그다음에 간부님들, 한국은행 총재님께서도 그렇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차관님?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법석** 사실 제가 예산 업무는 평소에 별로 안 해서 2차관이 답변하시는 게 적절한데……

○**황명선 위원** 그러면 2차관님께서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요일 국정협의회를 앞두고 개별

사업 항목에 대해서 제가 뭐, 차관이 지금 현재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황명선 위원** 이번 명절 전예요, 구정 전에 한 46~47개의 지방정부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원포인트로 예산을 만들고 그리고 지역화폐로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구정, 설 명절 때 그 지역에 있는 해당 지역의 자영업자들이 아주 활력이 있는 그런 역할들을 현장에서 봤습니다.

한번 우리 기재부에서도 직접 현장에, 그렇게 민생회복지원금을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아니면 지방정부의 여력에 맞게끔 5만 원이든 지역화폐를 통해서 골목상권을 활성화시켰던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직접 현장 보시고……

이것은 진보의 보수의 개념, 여야의 이런 개념들이 아닙니다. 제가 시장 하면서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우리한테 돈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사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만들어 주는 게 정말 우리한테 힘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각별하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버티는 두 가지의 기둥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2개의 기둥을 무너뜨린 정말 그런 폭거였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 민주주의와 시장의 복원을 위해서 계엄을 해제하고 위헌적인 불법계엄을 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충분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계엄해제에 찬성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 것은 저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었다. 그리고 이 자체를 거부하는 것 자체는 저는 민주공화정,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인하는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란을 옹호하거나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것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워서 전자에 질의했듯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망하게 했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1차관님, 아까는 제가 피치 관련한 얘기를 했는데요, 신용평가사. 우리 정부가 신용등급 유지를 가장 강력하게 사수해야 될 지수로 보고 있는 이유가 뭘니까, 간략하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기본적으로 차입이랄지 외국인 투자랄지 차입 비용, 차입 가능 정도 등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지요. 차입 및 신용 그리고 통상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장 주목했던 것이지요. 아까 피치도 얘기했지만 무디스에서 ‘다른 경제적 요인도 존재하지만 현재 한국에는 정치적 불안정이 가장 큰 요소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불안정이 장기화할 경우 대한민국의 신용 리스크가 증가할 것이다’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적 절차인 헌법적 관례에 따른 질서 있는 사법적 귀결을 기대한다. 이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상황이 전개되면 정치적 불안정성이 장기화하고 그에 따라 우려를 표명한다’. 명확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했냐면 1차관님, 프랑스에서 무디스가 신용 등급을 1단계 하향을 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왜 하향을 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아마 마크롱 대통령이 했던 조치에 대해서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생겼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지요. 합법적으로 구성된 의회에 내각 불신임을 하면서 정치적 불안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신용평가사가 프랑스조차도 1단계 바로 하향을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민주주의적인 헌법적 질서와 법률적인 질서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도 동일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저희가 계엄 이후 신평사들 접촉하면서 했던 부분들이 한국의 경제와 시장경제질서는 법과 헌법에 따라서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했었고 그 입장은 현재도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법계엄 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명확한 예측을 국내뿐만이 아니라, 상식적인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가 그 시기에 최상목 부총리의 헌재재판관 임명에 관한 입장을 표명했던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계의 두 기둥을 제대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질서 안정을 하기 위한 저는 최소한의 코멘트였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공격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되지 않더라고요.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그 이후의 고용지수를 보면—아까는 경제성장률을 봤는데요—전체 전월 대비 취업자 수를 보면 보이는 것처럼 1월에 가장 최악의 결과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전년 동월 대비 13만 명 늘었다고 좋아했지만 실제로 전년 동월 대비지만 전월 대비로 보면 16만 명 감소를 했고 현재 상황은 역대급으로 가장 안 좋은 고용지수를 현재 보여 주고 있습니다.

2025년 1월에도 고용지수는 아주 나빠졌고 그중에 청년 취업자의 수는 우하향으로 더 적은 상태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면 60대 고용이 40대 고용을 추월해서 고착화될 양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즉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는 걸 이 고용지수로도 볼 수 있습니다.

1차관이 보시기에 이 문제에 대한 분석과 해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일단 고용 상황이 좋지 않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 시각하고 동일하고요. 다만 통계적으로 봤었을 때 저희 인구 감소 효과가 본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자 증가 숫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특히 고용 같은 경우에는 계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이 주신 숫자, 전월 대비 감소 숫자는 저도 처음 봐 가지고 그 부분도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 김범석 차관님, 추경에 따른 국가신용등급 문제하고 피치 평가 보고서에 대해서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때문에 최근에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대외신인도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앞서 김영진 위원님께서도 피치사 보고서를 언급하셨는데 제가 아는 거랑 조금 달랐어요.

신용등급 유지 결정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조기에 해소되고 2/4분기 조기 대선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도 보고서를 봤습니다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오히려 신용평가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부 부채 비율, 상환 능력 이런 게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로 다른 나라 사례를 한번 보시면 무디스가 프랑스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하면서, 실제 이유는 공공부채 축소 방안이 의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그 조치를 했고요. 피치사가 미국을 한 단계 강등한 것도 국가채무가 향후 3년간 증가한다는 그 수치를 보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경고성 지적은 나올 수가 있지만 실제 강등 조치가 일어나는 것은 구체적인 재정 악화 조치나 숫자로 연결되거나 재정건전성 회복 노력이 신뢰받지 못한 경우에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 피치사 보고서도 보시면 한국 신용등급 평가보고서에서 ‘추경 가능성이 높다. 2029년까지 52%로 완만한 상승이 예상된다. 특히 야당이 방만한 확장 재정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부채가 지속 증가할 경우에 신용등급 하향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신용등급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국채를 대량 발행해야 되는데요, 소화 능력이 있는지 시장에 다른 부작용은 없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추경 할 경우에 국고채가, 사실은 추경 안 하더라도 금년도 국고채 발행이 순증 보시면 50조에서 80조 됩니다. 30조가 추가 발생되면서 지난 8월 달에 충격이 굉장했고요. 금리가 많이 올랐지요. 추경을 하게 되면 순증 기준으로 보면 거의 두 배입니다.

시장에서 아무런 금리인상 없이 무리 없이 물량이 소화 가능한지 한은 총재님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물론 시장에…… 국채 이자율을 올리는 쪽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종욱 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금리를 보겠습니다.

이게 지난 1년 금리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에 한 번 출렁했습니다. 그다음에 금리 올라간 게 10월 달에 한은이 한 번 기준금리 내린 효과를 거의 상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12월 달에 추경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금리가 올라갔고 전문가들은 상당 부분 시장금리에 일정 부분 반영이 돼 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 물량을 얼마나 할 건지가 금리인상에 상당히 중요하고 추경의 효과를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어떤 다른 분도 질의하셨습니다 총재님께서 15조, 20조 추정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KDI를 보면 ‘추경 대신에 두세 차례 금리인하를 하는 게 지금은 더 시급하다. 가계와 기업 심리 회복이 시급하다’ 이런 말씀도 했고 현대경제연구원에서도 ‘당장 필요한 거는 금리인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총재님 답변으로 통화정책만으로는 경기 하락을 막기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래서 결국 금리정책도 쓰시겠다. 재정정책하고 같이 쓰시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15조~20조 정도는 사실은 장기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하셨는데요. 맞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아닙니다. 15조~20조가 올라가면 재정적자하고 국가부채에 대해서는 0.8% 올리기 때문에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얘기하는 건 KDI도 얘기했지만 지금 저희들이 금리를 내리는 것을 가정하더라도 1월 달 전망에 의하면 1.6%고, 저는 KDI 전망 1.6%도 금리인하를 이미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6%보다 올리려면 재정이 같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욱 위원** 그래서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재부2차관도 추경 규모를 얼마나 할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정치적으로 신중한 이슈인데 다른 일반 민간 연구소도 아니고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구체적인 규모를 말씀하신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되면 관리재정수지가 -3.5 내지 초과하게 되는데 재정계획을 초과하는 지출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은 총재님께서 추경을 주장하는 것만큼 금리정책에 대해서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이종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총재님, 아까 팩트만 다시 좀 사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4/4분기에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한 0.2%p 정도 하락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김영환 위원** 또 한국은행 보고서는 25년 경제전망 할 때도, 그때도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0.2%p, 하락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구별해 드리면 12월 달에는 저희가 계엄으로 인해서 인정한 부분을 0.2%라고 12월 4/4분기에 말씀드렸고요. 1/4분기, 1월 초에 한 발표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왜냐하면 계엄만 가지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서요. 그 2개가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게 복합적으로, 계엄이 없었으면 다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래서 계산한 게 6조 8000억입니다, 분기별로는 계절조정, 원계열 다 해서 6조 8000억. 그러니까 어디 초점으로 했냐면 소비 등 내수예요. 그게 직접적으로 6조 8000억이에요. 한 7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7조 복원시켜 줘야지요, 내수·소비. 안 그렇습니까? 없었으면, 있지도 않았으면 손해 볼 일이 없었는데 소비·내수 쪽에 7조 원가량의 손해를 봤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요.

환율이 한 60원 정도…… 제가 한국은행에서 어느 정도 정치적 불확실성……

지금 국제투자 금융기관들이 비상계엄 선포 후에 환율 전망치들 다 올렸어요. 한국은행 얼마 정도 예상했었어요, 이 정치적 불확실성 전 과정을 통해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일단 이게 PPI로 전이가 되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1월 소비자물가가 2.2%입니다. 이게 최종 상품은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한 3~6개월 사이에 CPI로 또 연결이 되지요. 이 간접적인 책임 누가 져야 돼요? 물가상승에 대한 소비자들의 손해를 누가 구제해 줘야 돼요? 국제, PPI도 구매력이 떨어진 것 맞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면 환율 때문에 통화정책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가계부채 문제도 얘기했고 그래서 한국은행이 주택 문제도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통화정책에 한계가 있고 이건 온전히 정부가 저지른 이런 사태 때문에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다라는 것 하고요.

기재부1차관님, 12월 달 일자리 전년 동월 대비 얼마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12월에 13만 명 감소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5.2만 명입니다, -5.2만 명. 그거 누가 책임져요? 일자리 잃은 것들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정부가 책임져 줘야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민생경제와 일자리 부분에서 정부가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의 방향들이 정해진 것 아닙니까? 아니, 정부가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 곳곳 다 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외평채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20조 발행 계획 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 작년에 18조 발행하려다가 못 발행했어요.

외평채 발행하면 국가채무 안 늘니다. 그렇지요? 이해하고 계시지요? 그냥 금융성 채

무가 적자성 채무로만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국가채무 손 안 대고 외평채 지금 계속……

올해 원화 표시 외평채가 23년, 24년 만에 발행이 되는 거잖아요, 2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위원님, 원화 외평채를 발행하게 되면 국가채무로 그대로 잡히게 됩니다. 국고채와 원화 외평채, 주택채……

○**김영환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채권으로 발행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전에 사용했던 19.9조, 그다음에 24년도 외평기금 얼마 사용했어요? 지금 4조~6조인데 제 예상치가 맞았지요? 조금 더 됐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4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아니요, 4조……

○**김영환 위원** 4조? 19.9조에 4조, 그러면 그동안 최종적으로는 24조 정도를 외평기금에서 갖다 썼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공자기금에서 조기상환을 받은 겁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조기상환이든 어쨌든 외평기금을 총합적으로 사용을 했잖아요. 그거 다 기회비용 아닙니까?

19.9조에 4조예요. 그러면 그것은 적자성 채무가 금융성 채무로 바뀌는 최종적인 거예요. 아니, 금융성 채무가 적자성 채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최종으로 쓴 내용들을 계산을 좀 해 봐야 돼요. 그것은 정확히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20조 발행을 하는데 이것을 원화 채권을 발행해요? 왜 원화 채권을 발행……

제가 고민이 계속 안 풀어져요. 이자 때문에? 공자기금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자 깎아서 줄 수 있잖아요, 가산금리. 이전에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국고채에서 발행해서 공자기금에서 외평기금으로 줄 수도 있는데 이자 때문에 그렇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자세한 내용은 필요하면 국제차관보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국고채는 3년……

○**김영환 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설명을 못 들어서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외평기금 총액을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원화 자산을 확대한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기금이 270조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산별로는 어떻게 구분돼 있는지 자료를 안 주니까 내가 모르겠지만 지금 원화 표시 외평기금을 늘린다는 이 상황에서, 지금 오히려 달러 자산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왜 원화 자산이에요?

그건 제가 보기에 이제까지 외평기금 갖다가 썼어요. 돌려놓기 위한 수순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추가질의 때 제가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그 부분은 의원실에 저희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차관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경제정책 총괄하는 부처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김태년 위원** 그리고 재정 투입이나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과 관련해서는 기재부가 의견을 내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통제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관여를 하고 있잖아요, 통제에 가까운 관여.

저번에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서 초기 기재부 의견을 보니까 전부 다 안 된다고 빨간 줄 그어 놔더라고요, 처음에.

지금 우리가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문제는 아주 시급하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경제안보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금 트럼프 스톱이 있는 건데 경제통상 이슈와 관련해서도 잘 대응을 해야 되지만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건 시급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반도체 특별법에 시급한 지원 대책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엉뚱하게 52시간 제에 발목이 잡혀 가지고 지금 산자위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가 중헌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법률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반도체 산업을 인·수·전·편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인’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반도체 특별법에 인력 양성과 관련한 지원 대책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물이나 또는 전기 그다음에 폐수처리시설과 관련한, 즉 핵심 인프라 시설과 관련한 국가 책임을 얼마만큼 더 강화할 것이냐, 전부로 할 것이냐 또는 일부로 할 것이냐, 일부로 한다면 하한을 어디까지 설정할 것이냐 이런 논의가 지금 급한 것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편’,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을 어느 규모로 시급히 확보할 것이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반도체 특별법 그다음에 법정자금을 확충하는 산업은행법, 그리고 얼마 전에 조세특례법 5%씩 상향 조정하는 안은 기재위 통과가 됐는데 이것도 원안들은 다 10%예요. 10%인데 정부가 반대해 가지고 어찌 됐든 간에 5%로 합의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특별법에 있는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주변지역을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 전기나 용수 공급에 있어서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지금 이게 속도 싸움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22대 국회 들어서서 1호 법안으로 CHIPS 3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을 만들 때 기업이나 협회나 지방정부 의견을 다 들었어요. 다 청취했고 다 받았고 그중에 정 못 들어 줄 것만 빼고는 어지간한 건 다 수용을 해서 법안에 담았던 말입니다. 다 반영을 했던 말입니다. 그때 52시간과 관련해서는 요청이 전혀 없었어요. 이게 시급하다는 요청이 일체 없었다고, 협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어느 날 갑자기, 정확하게는 11월 들어서서 이 52시간이 이슈로 등장을 합니다.

배경은 잘 알아요. 이게 왜, 어떤 기업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 이슈를 제기했는지 잘 아는데 제가 공개적으로는 말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이게 쟁점으로 부상을 해 가지고 지금 발목이 잡혀 있는데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법 통과의 발목을 잡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합의된 것, 시급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합의된 내용들을 우선 통과시켜 놓고 지금 합의가 덜 된 것들은 추후에 논의를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52시간이 아니고 더 시급한 이슈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고.

그리고 52시간과 관련해서는 특별근로연장과 관련해서 좀 유연성을 가져 달라 이런 건데요. 우리가 실적을 놓고 보면 특별연장근로 사용한 기업과 사용하지 않은 기업들 중에 사용하지 않은 기업 실적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요, 얼마만큼 혁신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걸 정쟁화해 가지고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아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당이나 정부가 이렇게 일을 해도 되는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쉬운 정도가 아니고 이걸 되게 분노스러워요.

정부의 입장은 뭐예요? 이거 급하지 않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시급한 상황이고요.

말씀 좀 드리면, 김태년 의원님이 발의해 주셔서 사실 조세소위에서 많은 격론이 있었습니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5% 상향한다든지 특례기한을 연장한다든지 하는 저희 세제 쪽에서는 상당히 과격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인프라랄지 하는 부분에서 과격적인 지원을 했고 업계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근로시간도 중요한 문제라고 제기를 해서 산자위에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산자위에서 실무적으로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꺼번에 다 하자라고 하는 게, 지금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랄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부는 이 기회에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오늘 부총리께서도 소통하면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정확하게 된 뜻이에요? 할 수 있는, 뭐라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소통을 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태년 위원**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차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규근 위원** 아까 주질의에서 제가 가구 중위소득 관련해서 단위를 좀 착각을 해서 그거 먼저 정정을 하겠습니다. 가구 중위소득 2022년 3454만 원을 제가 아까 5억으로 잘못 언급을 했습니다.

OECD 기준에 의할 때는 75~200%까지가 중위소득계층인데 OECD 기준에 의하면 2418만~6908만 원, 또 50~150% 사이로 중위소득계층을 규정하는 통계청 기준에 의하면 1727만~5191만 원이 중위소득계층에 해당이 되고 작년 통계청장은 중위소득계층이 흔히 말하는 중산층에 해당한다라고 국감에서 답변한 바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상속세 관련해서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차관님!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차규근 위원 상속세는 소득세의 기능을 보완 또는 강화시키는 사회정책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차관님, 동의하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그렇게 보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

○차규근 위원 차관님, 이게 어디 나오는 것이냐 하니까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자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상속세 최고세율만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우리나라 소득세와 상속세 부담을 더해 보면 GDP의 7.3% 수준으로 OECD 평균인 8.3%에 못 미칩니다. 미국 얼마인지 아십니까? 12.1%입니다. 그리고 독일 10.7%, 영국 10.1%에 달합니다. 이렇게 소득세 수준을 외면하고 상속세 수준만 가지고 국제적으로 가장 높다, 상속세 낮춰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저는 참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상속세 논의가 상식에 맞게 합리적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여당, 유산취득세로 전환을 하자고 주장하면서 아직도 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데요. 연구용역 한 사실 있으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지난해 했고……

○차규근 위원 그런데 연구용역 해 놓고 왜 유산취득 도입을 적극 주장하지 않고 지금 현행 상속세에 자꾸 구멍을 내려고 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공제에 손대고 최고세율 낮추고 해서 제도를 엉망진창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차라리 세수 중립적인 결과를 전제로 유산취득세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되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지금 유산취득세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용역을 했고요. 저희가 빠르면 3월, 4월 중에는 조문 작업해서 상반기 중에 법안 제출할 예정입니다.

○차규근 위원 알겠습니다.

2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차규근 위원 지금 공공기관인 기업은행이 노사분규 상태인 것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들었습니다.

○차규근 위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그쪽에서, 은행 쪽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보상휴가로 지급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차규근 위원 그러면 제가 시간관계상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행은 시중은행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코로나 같은 국가위기 시에 국책은행으로서 더 많은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매년 2조 6000억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는데, 직원당 생산성이 405만 원인데 이게 시중은행 평균 생산성 333만 원보다 거의 한 70만 원 높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업은행 노동자들은 성과급은커녕 시중은행보다 30% 낮은 임금을 받고 있거든요. 또 시간외 보상도 제대로 지급되지 못해 임금 체불 상태입니다. 이것이 지금 노사분규의 원인입니다.

차관님, 기업은행이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보상휴가가 전체 며칠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제가 알기로는 임금 체불과 관련해서는 노와 사 간에 지급 의견 차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규근 위원 제가 묻는 질문은 전체 지급하지 못한 보상휴가 누적 날짜가 며칠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보상휴가는 퇴직까지만, 퇴직 시까지 쓸 수 있고 퇴직 시까지 못 쓴 보상휴가는 현금으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규근 위원 제가 지금 객관적으로 파악되고 있는 지급받지 못한 보상휴가는 무려 47만 5498일입니다, 47만 5498일. 명백한 임금 체불입니다, 차관님. 기업은행이 적자가 나는 은행도 아니고 수익성이 낮은 것도 아닌데 직원들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차관님 알고 계시지요? 총액인건비 때문인 건 알고는 계시지요?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차규근 위원 총액인건비 제도 때문인 건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총액인건비의 취지가 공공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차규근 위원 취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총액인건비 제도가 캡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짜여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같은 현실은 기관 운영 자율성에 심각한 침해이자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총액인건비 제도 자체를 개선할 수 없다면 밀린 임금이라도 지급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차관님, 이번 주 내로 노사분규 상태에 있는 기업은행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대책을 마련해서 담당자를 저희 의원실로 보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금 체불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은 노와 사이에 극명한 의견 대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업은행도 정부출자 지분이 60% 가까이 되고 손실이 났을 경우에 정부가 손실을 보전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중은행과 일대일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은행의 일반 정규직 임금이 1억 1000만 원이고요 일반 공공기관은 7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공공기관하고 비교해서는 이미 50% 이상의 인건비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일반 시중은행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하여튼 금주 내로 실무자 보내서 관련 대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위원장 송언석 박성훈 위원님 하시겠어요, 질의?

다음,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 차관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0조 원 추경을 발표한 지 3일 만에 5조 원이 늘어난 35조 원의 추경안을 민주당이 들고 왔습니다. 이게 좀 우습지요? 경제가 장난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특히 접했었던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은 소비쿠폰이라고 하는 라벨같이 형태를 통해서 13조 원을 담아 왔고요. 지역화폐 이 부분은 저희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마는 효과도 없고 또 사중손실이 발생하는 지역화폐 할인 지원 2조 원까지 담았습니다.

차관님, 세수결손 상황에서 추경이라든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적자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신평사가 걱정하고 있는 대외신인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부채, 재정건전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비진작 효과도 미흡하고 예산 낭비 등 부작용 우려가 심한 이러한 일에 대해서 민주당이 강행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저는 현금 살포 추경이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뜻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우려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사실 사상 초유의 민주당 단독 예산 삭감이 아니었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논의하기 전에 진정한 대국민사과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사실 모든 국민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소득주도성장 시즌2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세금으로 지역화폐를 나눠 주자, 이것은 소상공인 지원하겠다는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그런 분석이 많습니다.

행정연구원이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실상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효과는

주로 10억 이상 50억 미만의 중대형 사업자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심지어는 동네에서 그동안 이러한 대책이 없어도 손님이 많은 그런 동네 맛집에만 효과가 집중되어 오고 있다는 그런 지적도 많았습니다. 특히 지역화폐를 발행하거나 운용하는 데 비용이 들지요.

차관님, 13조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때 관리운용 비용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지역화폐 발행업무 자체가 지자체 사무라 저희가 추정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한 10% 내외의 수수료나 각종 발급 비용이 드는 걸로 그렇게 제가 본 것 같습니다.

○**박성훈 위원** 가장 적게 산정해서, 예를 들어 2%만 잡아도 2600억이라고 하는 비용이 들게 됩니다. 저는 이래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소상공인 전체 매출 증가 효과 없다, 사중손실 등 경제적 손실만 발생한다 이런 지적이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부분, 부정적인 효과들을 감안할 경우에 차라리 저희가 지금 추경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보다……

차관님, 혹시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저희가 상반기 중에 전년 대비해서 10조 원 플러스알파를 지금 신속집행을 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거기에는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투자까지 다 합쳐서 최대한 신속하게, 조금 더 많이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PPT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조달청 올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1월 발주계획 물량의 45.9%만 실발주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공공건설 의존도가 높은 중소 건설사에게 미집행이 늘어나고 있다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기재부에서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셔서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제가 온누리상품권, 지역상품권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온누리상품권이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해서 효과를 발생하기에는 오히려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사용처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또 인접 지역에 대한 소비 감소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진정 지역을 위한 그리고 지역 상공인들을 위한 경제효과에 방점이 있다라고 하면 무분별한 지역화폐를 발행하기보다는 오히려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차관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 정부에서도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25년 기준으로 작년도의 5조 원보다 10% 확대된 5.5조 원을 저희가 발행을 하고요. 그리고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제한업종 40개를 저희가 29곳으로 되게 축소를 해서 조금 더 편하게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차관님, 지역화폐라는 게 뭐니까? 정식 이름이 뭐지요? 우리 대한민국 예산체계 내에서 지역화폐라는 사업이 있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한국은행을 제외한 다른 데에서 만들어진 화폐라는 게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

○위원장 송언석 총재님, 지역화폐라는 게 뭐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저는 지역상품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정확한 명칭이 뭐니까,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지역사랑상품권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여기 위원님들이 정치적으로 발언을 툭 그냥 이렇게 하는 것하고 관계없이 정부에서는 정확한 명칭을 좀 사용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화폐라고 하니까 진짜 화폐인 줄 알잖아요. 대한민국에는 한국은행 총재가 발행한 법정화폐 외에 그 어떤 화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온누리상품권은 온누리화폐라고 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차관님?

앞으로 용어에 유의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걸 위원 저는 외환보유고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총재님, 금년 1월 들어 가지고 보니까 우리 외환보유고가 44억 불이 줄었다, 그래서 4000억 달러가 무너질 수 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4000억이 우리 마지노선이다, 이게 무너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있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안도걸 위원 그런데 4000억이 우리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시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렇습니다. 이유는 어떻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외환보유고 하면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4100억 있지만 그것 말고 민간들이 가지고 있는 대외자산 이게 저는 우리 2차 외환보유고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게 1조입니다. 우리 정부 보유고보다 지금 훨씬 더 크지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우리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한 9000억 불 되더라고요. 순자산 규모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서학개미라고 그러지요? 우리 개인투자자들이 해외에 투자한 게 지금 한 1000억 불 가까이 되는 겁니다, 1000억 불 가까이. 지금 그 규모는 계속 늘어나요. 특히 개인투자자들의 해외투자가 늘어나면서 대외자산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면 작년 말부터 해 가지고 환율이 급등을 하니까 또 외화자산에 투자하신 분들이 차익 실현의 동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달러를 팔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국내에 달러가 공급이 되면서 또 환 안정시키는 이런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또 국민연금이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이 자산 포트폴리오를 연말에 조정을 했고 또 환헤지를 하면서 안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관투자자들의 환율안정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효과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하시는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저는 외환시장이 주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국민연금 공단과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자신의 미실현이익을 지금 환율로 인해서 굉장히 수익률이 높아졌을 때 실현수익률로 만들기 위해서 환해지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투자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도걸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간의 대외자산 운용 능력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된다 이게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1차관님!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안도걸 위원** 우리 외환관리 시스템을 좀 개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외환 시스템은 우리가 자본이 부족했던 시절에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외환 유출하지 말자라는 굉장히 소극적인 입장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본수출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전 글로벌시장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나가 가지고 안정적으로 수익성 높은 투자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투자 흐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좀 뒷받침을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외환시장을 통제할 것이 아니라 외환시장의 규모 자체를 늘려서 웬만한 충격을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 생각이 같으실 텐데 간단히 입장 발표만 좀 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외환시장이 좀 흔들릴 때 지난 연말에 차입 한도랄지 과거의 규제 같은 것도 좀 회복한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새로운 위험요인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즘……

○**안도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다음, 두 번째로 외환보유고 포트폴리오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을 전략자산화하는 경향이 좀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라든가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 대신 금을 보유하고 있는 건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가운데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최근 5년간 글로벌 외환보유고 중에서 금 비중이 10%에서 15%로 늘어났습니다. 대신 미국채 보유 비중은 55에서 45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세계적인 추세라 이겁니다.

그리고 최근 금 가격을 보시지요. 최근 10년간 위험을 감안한, 조정한 수익률을 보니까 금이 국채의 2.5배 정도 됩니다. 우리 한국은행에서 지금 금 보유를 13년 이후 동결시키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금값 변동성이 너무 좀 심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0년 통계를 보면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지금 우측 상단 보시면 각 국가들의, 주요 국가들의 외환보유액 중에서 금 보유 비중을 보면 우리가 너무 낮습니다. 세계 최하위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저는 일본이나 중국 정도의 수준, 한 5% 정도 되겠지요. 이 정도 수준 정도는 우리가 상향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총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이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외환 보유고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있고 환율 변동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안정된 시기가 됐을 때 저희 전략자산 배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도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신동욱입니다.

1차관님, 저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 요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정말 단연코 우리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존속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정말 여야를 떠나서 이것 이대로 되도 되는 겁니까? 지금 정부 법안 내놓은 것도 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신동욱 위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의 말에 동의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우리 경제의 큰 틀을 책임지고 있으신 분이 이 문제만큼은 좀 굉장히 절박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쭙보는 말씀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그러니까 작년 기재위에서 박수영 간사님께서도 발표하셨지만 실제로 지금 정상적인 자본의 해외 이전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 가상자산을 통해서 해외로 좀 새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를 저희 정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상속 부분에 대해서도 대주주랄지 가업상속에 대해서도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지금 고액 자산가들이 해외로 자산을 이전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지요. 혹시 파악하고 있는 수치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저희 정부에서 파악한 숫자는 싱가포르의 투자이민 케이스를 보고 있고요. 작년도에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왔던 것을 보면 저희가 백만장자의 해외 이동으로 했던 통계가 정부 공식적 통계는 아닙니다만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저희가 나왔던 통계를 봤습니다.

○신동욱 위원 대한민국이 참 살기 좋은 나라인데 왜 이렇게 해외로 나가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분에 역시 상속세의 부분, 물론 저희가 돈 벌어서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상속세를 약탈적 상속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님이 얼마 전에 낸 자료 보니까 주식으로 상속세 내신 분 40%가 회사가 문을 닫았다 이런 자료도 있는데……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18억 원의 일반 중산층 상속세를 면제해 줌으로써 살고 있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굉장히 저는 좋은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초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것이 아니더라는 말씀을 덧붙이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상속의 문제가 초고액 자산가들의 탈세로 인식하는 게 맞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지난해 기재위에서 윤호중 위원님께서도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 등등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가지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포함해서 다 같이 좀 건설적인 논의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지금 40%로 최고세율을, 지금 현재는 할증세율까지 포함하면 60%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그렇습니다.

○신동욱 위원 또 증여하고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어떤 경우는 제가 기사로 보기에 거의 100%에 가까운 상속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회사를 아예 팔아넘기거나 문을 닫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긴다고 하는데 이 40%도 너무 정치적으로 눈치 보고 하신 것 아닌가요? 이 상속세 문제를 나중에 이룰테면 자본을 완전히 이전했을 때, 소위 말해서 팔았을 때 세금을 걷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우리도 좀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저희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했었고 OECD 평균세율 26%랄지 그리고 자본이득세로 완전 전환한 국가 사례를 봤지만 세제를 운용하고 어느 정도 세입 기반을 유지해야 되는 입장에서 저희가 그것을 고려해서 40%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상속세 문제가 지금 우리 세입에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지금 전체 세입 중에서 좀 급격히 늘었습니다.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년도에 한 2.2%에서 4.4%로 거의 단기간에 2배 늘었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급격히 늘었다는 부분을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늘어서 좋다고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아닙니다.

○신동욱 위원 우리 국가경제의 생산에 활용되어야 될 우리 돈이 전부 국고로 들어가면 그게 결국은 고용도 떨어지고, 생산으로 선순환되는 이런 고리가 끊어지는 부분인데 세수 때문에 상속세 문제를 손을 못 대겠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딱 어느 시점이 적정하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래도 한 19년 수준에 근접하도록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40%로 낮추고, 공제 비율을 낮추는 부분을 지난번에 정부 법안으로 제출했던 겁니다.

○신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보겠습니다.

지금 추경의 상당 부분이 소비쿠폰, 그러니까 이전지출로 추경을 민주당 쪽이 제안을 해 봤는데 지금 우리 사회 소득 불균형 문제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이렇게 이전지출의 비중이 늘어나면 소득 불균형이 좀 해소가 됩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과거 코로나 시기를 보면 이전지출이 증가하면 아무래도 저소득층의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불균형 자체는 일부 해소되는 면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동욱 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장기적인 효과까지는 저희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걸 살펴보셔야지, 장기적인 효과를 안 살펴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

회가 알고 있는 자료로는 장기적으로는 소득 불균형이 전혀 해소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효과만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형 위원 1차관님께 하나 여쭙보고 그다음 부동산 PF를 두 분께 좀 여쭙보겠습니다.

최근에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이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으로 간다는 기사가 났어요. 어떻게 보세요? 들어 보셨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형 위원 오늘 나온 기사가 이런 겁니다, ‘기재부 OB를 모시는 삼성, 곳곳 요직 꿰찼다’ 그리고 삼성전자 얘기 나오는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하도 논쟁이 되기 때문에, TSMC랑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 나온 여론의 흐름을 보면 경쟁사 TSMC 이사회 같으면 이 회사는 주요 반도체 전문가들이 이사회를 구성하는데 오히려 삼성전자는 관료나 금융인들을 너무 많이 데리고 간다. 이유가 뭐냐 이래 가지고 경쟁력이 있냐 이런 질문이 하나 있어서 이걸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특히 기재부 출신들에 관련된.

두 번째는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시기를 재계에서 반대한다, 상법 개정 반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가지고, 서로 이해관계가 얹히게 되면 오해를 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 안 사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 관련해서는 계속 사회적 논쟁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왜냐하면 작년에 금융위원장이 상법 개정하겠다고 하고 밸류업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안 된다 이야기하면서 이유가 재계가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정부의 입장에 대한 오해가 계속 누적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부동산 PF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질의는 지난번 국감 때 했던 이야기고 최근에도 계속 부동산·건설업 이야기하고 아까 위원님 중에서 한 분 이런 말씀 하셔서, 저도 같은 문제의식이 있어서……

(영상자료를 보며)

부동산 관련해서는 레고랜드 사태 때부터 그때 관리 잘못해 가지고 한번 큰일이 났었고 그해 말쯤에 강동구에서 부동산 PF, 둔촌 PF가 큰일이 있었습니다. 그것 수습하느라 계속 고생했었고, 롯데 관련해서. 그리고 나서 2023년도에 1년 내내 이때 부동산 PF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논쟁이 있었는데 실제 사실상 방치했던 것 아닌가 저희들이 비판했었고, 그해 연말에 민주당 차원에서 부동산 PF 대응방안을 제시했는데, 이거라도 하시면 어떻겠냐라고 제안했었고, 그리고 나서 그때 태영건설 논쟁 있었고, 그다음에 5월 달에 총선 끝나고 나니까 비로소 금융 당국이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실제 저희가 발표한 내용과 똑같았어요.

그리고 나서 작년 국감 때 이창용 총재님께도—논쟁을 이거 갖고 했었는데—부동산 PF에 적시 대응 실패한 것 아니냐 그런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그동안 대응 과정은 어쨌든 연착륙해야 된다, 부동산 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50년 만기 주담대, 특례보금자리, 신생아 대출 또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하는 것 등등으로 해서 사실상 이걸로 버티기 해 온 것 같은데 결국은 적시에 그런 걸 놓치고 나니까 지금 전체 부동산시장이 힘들어지고 건설업이 위기에 처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건설업 투자 자체가 지금—다 아시는 내용입니다—2분기 연속 -5% 성장대, 하락하고 있다. 취업자 급감 이야기도 나오고.

다음 페이지.

건설업 폐업이 많이 늘고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23년, 24년 크게 늘고 있구나.

다음 페이지.

미분양 중에서 준공 후 미분양이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도 좀 나오고 있고요, 최근의 추세입니다.

다음 페이지.

제2금융권 관련해서 부동산 관련된 연체율이 상당히 크게 올라가네요. 물론 제1금융권의 시스템 위기는 없는 것 같은데, 제2금융권 관련해서 지금 저축은행이 있고, 지금 새마을금고 빠졌습니다. 계속 새마을금고 이야기하지만 자료를 안 주고, 확보하고 있는 걸 계속 저희가 국감 때도 질의한 건데. 금융업권의 부동산업이든 건설업이든 연체율이 너무 높다, 이것 위험한 것 아닌가?

다음 페이지 보시면, 결국 주담대를 갖고 지금 버티기 했던 것 아닌가, 부동산 PF 망치고 주담대로 해서 돈 푸는 걸로 했던 것 아닌가. 그런데 이게 계속 버틸 수 있는가, 지금 상황이? 작년 상황에서 계속 늘었습니다. 이게 4분기까지 자료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논쟁하는 것 중에서, 작년에도 계속 제기하면서 온 건데 제2금융권 부실 현황 제대로 좀 파악하고 계신가, 지금 어떻게 보실까, 총재님하고 제1차관님 함께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박수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SOC 투자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경할 때도 이런 것들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또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닌가, 지금 지하철도 있고 철도도 있고 한데 건설업과 관련해서 한번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다음에 DSR 완화할 거냐 말 거냐는 계속 논쟁이 되고 있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빚내서 집 사라는 방식으로 부동산 버터지는가, 그건 안 되는 건데. 오히려 가계부채 때문에, 가계부채가 많아서 소비가 위축되고 그로 인해서 더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독립되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괜히 부동산가격에 쫓겨 버리면 더 힘든 것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입니다.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차관님, 총재님 순차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F4 회의에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논의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은 총재님이랑 저희 정부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세 번째 DSR 규제 강화는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계부채 관리를 저희 경제팀의 최우선 순위의 하나로 두고 계속 관리해 왔었고 말씀하신 대로 일관되게 유지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건설업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투자 확대할지 지방 미분양 해소할지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저희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현재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 중입니다.

다만 첫 번째,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모니터링을 정부 F4 내에서 하고는 있지만 그 부분을 공개하는 부분이 적절한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해 보고 필요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기형 위원 그게 3년째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법석 저희가 계속 금감원이나 금융위 중심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기형 위원 총재님도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김 차관님이 말씀하셔서 몇 개만 드리면, 저는 지금 존경하는 오 위원님이 보여 주신 여러 그래프가, 그 이전부터 죽 쌓였던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고 소프트랜딩을 위해서 한꺼번에 정리 안 하고 천천히 가는 과정에서 지금 연체율도 오르고 있고 부동산 PF 사업장을 백몇 개로 나눠 가지고 순차적으로 구조조정 하고 있는 가운데 파업하는 건설업체도 늘어나고 연체율도 늘어나는 중이라 저는 그 자료를 긍정적으로 연착륙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 중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위원님 말씀대로 DSR이나 이런 단기적인 도움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PF 구조조정을 위해서 그중에 필요한 어떤 지원을, 아마 추경 같은 것에 넣으면 훨씬 더, 소비쿠폰 이렇게 쓰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선 위원 오전 질의에 이어서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25만 원에 의해서 지금 전체 35조에 대한 게 나오게 되고 대표님께서 연설을 할 때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하셔서 놓고는 다시 사흘 후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13조, 지역사랑상품권 2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문제는 정말 빈익빈 부익부가 될 수 있고 지역의, 지자체의 건전성이 낮은 데는 블랙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지자체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13조를 이렇게 민생회복 쿠폰으로 푼다는 거는 물가상승에 대한 압박이 있을 수가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아마 이창용 총재님이 말하는 15조 전후 해서

타깃 지원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보면 김부겸 전 총리께서도 이러한 민생지원 가지고 하지 말고 고집을 버려라, 그다음에 김동연 지사는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을 하는 걸 또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일상적인 데서 조금 벗어나서 경제적인 손실만을 볼 게 아니고 정말 가장 가능한 어느 정도의 범위로 가면 좋을지를 잘 판단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는 폭동이나 폭력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부분인데 그걸 우리 경제적으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좀 다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우리가 겁을 내는 게 관세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출범이 한 달 됐는데 ‘관세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 이러면서 본인이 관세맨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물기 시작하면서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는 달려가서 어쨌든 원하는 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을 보면 최상목 대행도 아직 통화를 못 한다, 통상차관보가 가서 뭔가 얘기를 할 거다, 상공회의소도 나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관님, 어떻게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기본적으로 대행체제가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제 경제사절단하고 면담도 있었고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 여러 경로를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과 접촉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각각의 관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이인선 위원 알 수가 없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우리나라에 어떤 요구를 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미국과 우리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그 안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쨌든 19일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두고 미국에서는 ‘과도적 역할을 지지한다’ 이러면서, 특히나 한덕수 총리는 경제부총리, 주미대사, 통상본부장을 거치면서 적절하게 대행을 할 수 있는 분인데 지금 어쨌든 현재는 장수의 목을 찼어요. 그래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대행이 되지 않는 경제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전략적인 협력을 꼭 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이인선 위원 그다음에 A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국가전략기술 포함이 된 것은 환영을 하고요. 여기 안의 데이터센터 부분은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논의는 안 됐는데 반드시 AI가 가자면 데이터센터 문제…… 오늘 산자소위에서 통과했습니다마는 국가전력망 사업이 제가 발의해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AI 산업이 인프라가 되면 이런 전력 문제를 잘 면밀하게 보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창용 총재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국감 때도 제가 염려를 했었고요. 금리가 인하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도 있고 해서 어쨌든 DSR에 대한 관계가 시작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제가 걱정한 것은 지역의 그런 부동산 내지는 건설 경기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지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동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하기 전에 물으니까 담당자들은 ‘별도의 검토가 없다’ 이러는데 사실은 지역에서 국감을 할 때, 대구본부장님 뒤에 계십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대구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질의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담당자의 오늘 답변은 ‘별도의 검토가 없었다’ 이렇게 답을 하던데 총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한은에서 지난번 의사결정을 할 때 저희가 이자율을 동결하면서 금중대를 5조 원 늘린 것, 그 금중대 5조 원 늘린 것을 지역으로 배정했고 그 가운데 일부를 지방 중소기업, 특히 건설 관계된 중소기업에 배정하도록 한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컨션을 저희 한국은행 차원에서는 반영을 한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방 부동산 대책을 지금 기재부에서 아마 조만간 발표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인선 위원** 준비하고 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이인선 위원** 그래서 하여튼 대구지역이 가장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많은 문의가 옵니다. 그래서 별도로 유동적으로 꼭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하람 위원** 김윤상 2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천하람 위원** 총액인건비제 관련해서 존경하는 차규근 위원님께서 기업은행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기업은행뿐만 아니라 한국투자공사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급여성 경비 기재부 사전 승인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총액인건비제 관련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다음에 추경 관련해서 오늘 차관님 말씀 들어보니까 최상목 대행께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셨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나 안이 준비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방향성을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추경이, 지금 우리가 재정 여력이 그렇게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회성 소비보다는 지출을 하더라도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 동의하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25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저희가 중점을 뒀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래서 지금 25만 원 전 국민 지급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 말씀 주셨고 총재님도 그렇고 많이 답변하셨을 거라서 반복하지는 않겠고요.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 보면 지역화폐 지급에 대해서 맞불을 놓는다고 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께서 신용카드 캐시백을 또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차관님, 추경을 통해서 신용카드 캐시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계속 말씀드렸다고 추경과 관련한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찬성, 반대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천하람 위원** 총재님은 혹시 추경으로 신용카드 캐시백 하는 것 의견 어떠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저는 같은 뜻으로 좀 더 타깃해서 어려운 쪽에다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저도 이거 살펴보니 지금 대통령실에 정책실장 하고 계시는 성태윤 실장이 과거에도 ‘신용카드 캐시백은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만 의미가 있다, 캐시백 해 주면 돈을 더 쓰지 않겠냐고 하지만 그만큼 다른 소비를 안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비판하신 적이 있네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야당안이나, 여당안이나를 가리지 않고 일관성 있는 태도를 좀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

○**천하람 위원** 답변하시기 어려운 것도 이해합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를 위한 투자와 관련해서 당연히 일정 부분은 타깃팅 해서 어려운 자영업자, 취약계층 돕는 부분 포함이 당연히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나 이런 부분 봤을 때, 특히 잠재성장률 떨어지는 부분 봤을 때는 핵심적으로 AI 반도체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하는 추경을 하는 것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님께서 10조 원가량을 AI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액수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도 그 취지에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AI에 적극 투자를 해서 잠재성장률 올리고 미래먹거리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 최근에 한국은행 보고서를 봐도 AI 산업 활성화에 성공을 하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최대 12.6% 늘어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AI 산업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가 어마어마한 정부 투자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보다 더 파격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 차관님도 좀 공감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공감합니다.

안 그래도 AI 특별위원회 그리고 오늘 AI위원회를 통해서…… 지난번에는 저희가 AI 컴퓨팅센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했고요, 오늘 또 AI위원회를 통해서, 정부의 투자는 계속 확대될 것입니다. 올해 예산도 1.8조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5% 이상 증액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전년 대비해서는 물론 많이 늘리고 기재부도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미국이나 중국의 투자 수준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 것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AI가 단순히 AI 문제

뿐만 아니라 전력망의 문제 또 ESS 같은 여러 인프라 부분도 굉장히 잘 따져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실 GPU를, 우리가 H100인가요? 굉장히 고가인데 외국의 빅테크에 비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수량이 턱없이 미미한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획기적인 투자를 해서 이번에 추경을 하더라도 일회성으로 소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미래먹거리를 발굴하는 그런 형태의 추경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도체, 스타트업 애기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차관님, 이런 식으로 이번에 추경이 포퓰리즘적인, 심지어는 대표적인 일회성 소비가 아니라 정말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미래를 위한 투자가 돼야 된다는 것,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꼭 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저희가 추경 아니더라도 민자 유치를 통해서 AI 컴퓨팅센터 한 2조 원 정도 지금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산업은행하고 함께 AI, 반도체 같은 첨단전략산업 분야 투자를 위한 기금을 30조 원 이상 저희가 조성을 하기로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현 위원** 한은 총재님 그리고 1·2차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한국 경제에 트럼프 리스크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한 달이 다 돼 가는데요. 최상목 대행께서 과연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한 외교활동 중 가장 성과가 뭐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일단 성과라고까지 표현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기업이나 여러 사태 이후로 주요 국제기구나 신평사 그리고 상대국 재무부 장관들에게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 신용평가 유지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광현 위원** 저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와외의 외교 성과를 여쭙보고 있는데 특별한 게 없는 겁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좀 보실까요?

지금 보면 1월 23일부터 거의 매일 정상외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각국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그래서 전화회담을 하고 또 직접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고 어느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화회담에 정상회담까지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현재까지도 정상 간 통화 일정조차 지금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교부를 통해서 오퍼를 넣어 놓은 상태라고 밝혔지만 미국 측으로부터 아무런 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뭐 일정 잡힌 게 있습니까, 통화 일정?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임광현 위원** 지난 15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미국 국무부 장관의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최 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 일정은 물론 관세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도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에서는 최 대행을 신뢰한다는 미국 측 메시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외교적인 수사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관세 폭탄에 대해서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나간다고 뉴스에 나왔는데요. 나간다고 하면서 거기 보니까 ‘미국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 이해관계자 등을 두루 만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외교 대상이 되게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아서 불안합니다.

도대체 어느 급 정도의 고위직을 만나러 가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법석** 이번에 통상차관보가 가는 이유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미국 상무부장관하고 USTR 대표가 아직 인준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인준이 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산업부장관이 가서서 만나시고 협의를 하셔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 사람을 두루 만난다고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당장 저희 기재부의 카운터파트인 재무부만 하더라도 장관 말고는 아무도 임명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임광현 위원** 지금 보니까 대한상에서, 민간에서 경제사절단이 나가고 오히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만찬을 하면서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걸 보면 지금 정부가 할 역할을 못 하고 마치 의병들이 옛날에 나라를 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민간에 의존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법석**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래도 저희 권한대행이 한시적으로 국가원수를 맡고 있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영향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임광현 위원** 그렇습니다.

미 공화당 사정에 정통한 미국 경제인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이기 때문에 2년 후에 레임덕이 올 수도 있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6개월에 마스터플랜 다 나오고 세팅을 끝낸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의사결정권자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든타임 6개월 동안 한국은 포가튼 컨트리(forgotten country)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 들으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물론 빨리 신속한 조기 대선으로 국가를 정상화해야 되겠지만 그때까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권한대행이 방어를 좀 해 줘야 되거든요. 향후 어떤 대책 같은 걸 가지고 있으면 좀 밝혀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법석** 실제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대응을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저희랑 직접 통화는 안 했지만 현대제철의 미국 투자랄지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고 조선산업 협력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랑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광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준 위원** 제1차관께 좀 묻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에 국민의힘과 정부 간의 당정협의를 있었다고 해요. 알고 계십니까?

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저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진성준 위원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라고 하는데 거기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 추경을 적극 편성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들은 바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저는 들은 바 없습니다.

○진성준 위원 국민의힘이 추경에 굉장히 부정적인 듯했는데 이제 좀 돌아선 것 같아요. 여야 합의가 이제 되어 가는 판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우리 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내수 부진, 소비 부진이기 때문에 이런 내수를 진작하고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예산지출, 재정지출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이 지금 소비 여력이 너무 떨어져 있는 국민에게 소비쿠폰을 지원해서 마중물로 사용하게 하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태여 보편적으로 지원할 이유는 없다, 정부가 더 나은 소비 진작책, 내수 진작책을 가지고 온다면 고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유연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선별 지원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예 그 항목을 들어내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경제 또 민생에 아주 시급한 것이 그 골목경제의 소비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추경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시행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당장의 민생 추경은 아니고 미래산업을 위한 추경인 것 같은데 추경의 큰 틀에 동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준비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아까 저희 2차관님이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당정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아 주신다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지금 기획재정부 내부적으로 추경 편성에 합의가 되는 상황을 가정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국정협의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가 있어야 저희가 움직일 수가 있을 걸로 보고 지금 따로 검토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진성준 위원 전혀 없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진성준 위원 그런데 어떻게 당정협의회에서 AI 추경을 발표합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그 부분은 저희 재정 당국이 참석한 회의가 아니어서 그 경위는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성준 위원 재정 당국의 의지가 실린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인가요?
좋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최상목 대행께서 오늘 ‘이제는 통상 총력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국의 관세 압력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정부도 범정부적으로 좌우지간 전방위적 외교 또 통상 협의의 노력들을 해야 될 것이지만 이런 범정부적인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회에도 통상 관련 기구를 설치해서 초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기본적으로는 저희 동의합니다.

○진성준 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진성준 위원 이 문제가 국정협의회에서 아마도 논의될 것 같은데 정부가 저는 그런 의지를 또는 그런 건의를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경제 상황이 비관적이고 불투명한 상황인데 이런 때에 통화정책 또 재정정책을 통해서 뭔가 경기를 방어할 만한, 방어해야 된다고 하는 동의가 있다고 한다면 정부가 무슨 정당들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미국의 통상 압력이 거세질 것이라 하고 하는 것이 당면한 경제에 발목으로, 장벽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가 총력전을 선언하는 마당인데 초당적으로 정치권도 협력해 달라, 노력해 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당연히 저희 필요한 부분 요청을 드릴 거고 앞으로 할 텐데 현재 고민스러운 부분은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트럼프 정부에서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그런 부분들이 아직 제시가 되지 않았습시다.

○진성준 위원 그건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진성준 위원 내란국조특위에서, 12월 3일 날 국가정보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예비비를 타 갔다고 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타 간 게 아니고 지출 결정을 한 겁니다.

○진성준 위원 지출 결정이 된 거예요,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그렇습니다.

○진성준 위원 아, 12월 3일 날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겁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진성준 위원 12월 3일이, 그날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인데 언제 국무회의가 있었던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12월 3일 오전 9시인가 10시였던 것 같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밤에 또 국무회의가 소집된 것이네요. 국무회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12월 3일 날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지출 의결이, 승인이 있었군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결정이……

○진성준 위원 그렇다면 그 예비비 사용계획 명세서를 기획재정부가 작성했어야 됐었던 것 아니겠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의장님, 국정원에서 쓰고 있는 안보예비비는 국가정보원법과 예산회계특례법에 따라서 세부 내용에 대해서 국회 정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요 그다음에 저희 쪽에는 총액으로 넘어오게 되고…… 어떤 식으로 해서 심의 의결을 받고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그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모든 내용들을 다 심의하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 아니, 그런 건데 기획재정부는 그 사용계획서, 사용계획 명세서를 작성했을 것 아니에요, 국정원하고 협의해서?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안보예비비는 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총액으로 담겨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러면 그냥 곧바로 국무회의에 국정원이 직접 상정합니까? 그 절차를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그건 회의 끝나고 나서 비공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 절차가 뭐 비밀은 아니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산회계특별법상 그쪽에 필요한 경비 중의 일부를 기획재정부 소관 예비비에 담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요청이 있으면……

○위원장 송언석 정리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기획재정부 예산으로 올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성준 위원 그것 따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위원장 송언석 정부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님께 그 과정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영 위원 부산 남구 출신 박수영 위원입니다.

우선 상속세 관련해서 1차관님, 이게 뭐 정치적인 판단을 하라는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상속세 관련해서 집 한 채는 18억까지 그냥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공제를 인상했거든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박수영 위원 배우자공제 10억, 일괄공제 8억 그래서 18억이 됐는데, 존경하는 임광현 의원님 안입니다.

만약에 그 목표가 맞다면 집 한 채 물려주는 것까지는 하자, 그렇다면 배우자가 돌아가서 가지고 안 계시고 자녀만 있는 경우, 그 경우에는 자녀공제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자녀공제 현재 5000만 원 묶여 있는 상태인데 이건 논리적으로, 만약에 집 한 채가 목표라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도 공감을 하고요. 나머지 유산취득세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지어서는 자녀공제도 늘리고, 일괄공제는 지금보다 더 늘리는 게 과연 적절한지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ETRI라고 아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박수영 위원 ETRI는 2차관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건가요, 출연연구기관인데?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공공기관에서는 제외……

○박수영 위원 제외됐지요, 올해부터. 그렇지요?

그런데 ETRI의 운영을 보면, 이것도 나라 예산이 들어가는데, 내가 읽어 볼 테니까 판단을 한번 해 봅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하이브레인넷에 올라온 글들인데 ‘ETRI의 연봉이 지금 많다고 알려져 있지만 평균의 오류가 있고 주니어들 연봉은 처참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 전 직원 연봉 상승률의 0.33%를 줄여서 임피, 임금피크제 직원의 연봉은 5% 올려 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니어들 월급을 빼 가지고 나이 많은 분들의 연봉을 올려 주는 일을 하고 있어서 이걸 자기들은, ETRI 직원들은 0.33 사태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기들 넷에 나온 겁니다.

그다음 장도 한번 보시면, 이 ETRI 연구원들의 평균 나이는 50대인데 인원은 조금씩 충원해 왔고 신입으로 들어온 주니어들은 착취당하고 있다. 대부분 2000년 전후에 입사한 세대의 의견이 반영돼 가지고 20년이 지나도 선배들 명목임금을 못 따라잡는다. 주니어들 월급을 까서 고참들 월급을 더 주는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데 이게 제가 지금 봐서 그렇습니다만……

그다음 장에 보시면, 어느 정도까지 나오냐 하면 ‘차라리 미국 진출을 노려 보시라, 아니면 사기업으로 가시라’ 이런 글까지 자기들 사이트에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박수영 간사님 지적하는 사항에 어떤 말씀을 하실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이 임피제라는 것 자체가 연공서열제의 어떤 잔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하는 만큼, 직무가 어려운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직무급제를 저희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현재 확대를 하고 있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현재 100곳 이상, 약간 천차만별은 있지만 자기가 일하는 어떤 수준에 따라서 성과를, 봉급을 지급받는 직무급 도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직무급 도입, 제가 공무원 생활하던 한 10여 년, 20년 전부터 다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잘되지 않는다는 게 이런 데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철도 얘기 아까 제가 하다가 시간 끊어졌는데, 제가 철도의 병목을 풀자는 얘기도 했지만 기차 자체도 문제입니다, 열차 자체도. 이게 20년 이상 되면 노후차량으로 분류하는데 코레일이 가지고 있는 열차의 55%가 20년 이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고장이 많아 가지고 지금 수리비가 오히려 더 많이 드는 상황으로 돼 있다 그리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속열차인가 하기 어려운 정도로 때가 끼고 오염돼 있고 짐칸은 아예 좁아 가지고 짐은 저 복도에 놔두고. 이 의자 한번 보십시오. 의자 탈색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외국 친구들 와서 KTX 타면 제가 정말 창피합니다. 스위스나 일본 좋은 기차를 타다가 이거 타면 과연 대한민국이 이렇게밖에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시는 것처럼 코레일 적자가 20조가 넘거든요.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정부가 50% 지원을 해 주게 돼 있는데 이것도 저는 투자를 한다면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해야지 25만 원 나눠 주는 식의

투자는 안 맞다.

아까 말씀드렸던 철도의 병목을 뚫어서 우리 한반도의 대동맥이 움직이게 만들든지 낡은 열차를 좀 바꾸어서 우리 국민들이 편하게 다니든지 하는 이런 쪽이 좀, 투자승수효과가 있는 쪽으로 투자가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지적 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태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위원 추경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데 저는 지금 한국 경제에는 보약이 필요한 시기라고 봐요. 그 보약이 추경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추경을 과하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추경을 안 하면 비상계엄에 의한 여파 그리고 보호무역주의 확산 이 시기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가질 것이라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특히 지역에 가면, 제가 최근에 저희 지역의 어떤 음식점을 들어가 봤더니 일 70만 원을 팔아야 된대요. 그런데 자기 하루의 매출 실적을 저희한테 보여 주면서 이삼십만 원밖에 못 판대요. 그래 가지고 지금 임대료를 못 내 가지고 문을 닫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매출이 늘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손님, 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구매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고 이런 상황에서 뭔가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야말로 우리 경제에 보약을 줘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계속 이 얘기만 해요. 국정협의회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하겠다, 우리는 오픈 마인드다 이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경제 당국으로서 정말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오히려 정부가 입장을 명확하게 정해서 여야 정치권을 설득해야 할 주체인데 지금 정치권에 맡겨 놓으면서 나몰라라 하는 식이거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옛날 경제관료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보면 정치권하고 싸우면서 자기들의 전문적 입장들을 늘 관철시켜 왔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경제관료 믿지 말라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그냥 정치권에 다 맡겨 놓고 무책임하게 관망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기재부가, 정책을 해야 될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책을 하십시오. 입장을 정해 가지고 추경이 필요하다면 필요하다 그렇게 딱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창용 총재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야 이 경제적 위기를 이겨낼 수가 있는 건데 여야는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어 가지고 서로 기선 잡기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국민들이 보면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정치적으로 해결이 잘 안 되는 국면에서는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보여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건데 하여튼 그런 점에서 보면, 정책을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내수가 지금 당장 회복될 가능성이 있어요, 차관님?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소비심리와 건설 경기 쪽인

데요. 건설 경기는 사실은 수주 부진에 따른 영향 때문에 그냥 두면 내년이나 돼야지 회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투자도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투자는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래 봤자 그야말로 잠재성장률조차도 못 쫓아가는 그런 상황이고, 수출은 더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수출은 하방 요인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성장률을 얘기할 때 내수와 투자와 수출과 정부인데, 정부밖에 없잖아요. 현재 그래도 잠재성장률까지는 못 가더라도 지금 1.6%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 가면 더 떨어질 가능성도 높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뻔하잖아요. 재정을 투자하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 가지고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줬는데, 아까 다 인정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부가 일을 저질러 놓고 유일하게 쓸 수 있는 수단이라는 거는 재정밖에 없는데 그 재정을 쓰는 것에 대해서 정치권에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되게 무책임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부가 입장을 확실하게 정해서, 다음 주라고 그랬나요, 국정협의체가?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정태호 위원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입장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추경을 하도록 그렇게 정치권을 설득하십시오.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말씀하신 부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정책 전문가 집단으로서 기재부 관료들의 기개에 대해서 칭찬해 주신 정태호 간사님께선배로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태호 위원 아니, 칭찬이 아니라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으니깐 그런 거지요.

○위원장 송언석 한 두어 번의 정치적인 파고를 넘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기재부에 근무했던 선배의 한 사람으로서 현직에 있는 기재부 관료들의 고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2차 보충질의는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3분으로 하겠습니다.

다섯 분 하겠습니다. 다섯 분 순서대로, 그러면 이쪽에서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3년도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나왔습니다. 제 예상은 24년도는 국세수입이 더 적어졌지요, 23년 대비. 그러면 조세부담률 더 떨어졌을 거라고 저는 봐요. 국세, 지방세 플러스 GDP 대비니까요. 차이도 벌어졌지요, OECD 평균보다? 국민부담률은 지금 7%p 벌어졌

어요, OECD 평균보다. 그러면 한 170조 정도 되거든요. OECD 평균, G7도 아닙니다. OECD 평균이에요. 그래서 중앙정부 총지출 이거는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한 5월 정도에 일반 정부 총지출 그다음에 통합재정지출 국제 비교가 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얼마나 떨어졌는지.

총재님, 우리가 시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환경 문제도 그렇고요, 인구위기, 저출생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불평등 문제도 되게 심각합니다. 이걸 시장 조절 매커니즘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특히 한국 같은 노동구조 상황 속에서는 대기업 정규직 대기업 비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 중소기업 비정규직 임금 차이가 시간당 2.5배 차이 나거든요.

이런 구조 속에서는, 예를 들면 총재님이 숨페터 얘기도 하셨던데 진짜 자본주의의 진정한 성장을 위해서 혁신적인 어떤 파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창조적 파괴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대기업 중심으로 반도체, 자동차 이게 웨이트가 너무나 심하잖아요. 수출은 성장기여도에서 점점 떨어지고 GDP 대비 내수 비중이 우리가 OECD 평균보다 한 14%p 정도 낮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문제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3년 연속 세수 핑크예요. 25년도도 세수 핑크 납니다. 3년 연속 거의 1%대 성장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네 번 있었잖아요. 석유파동, IMF, 금융위기 그다음에 코로나. 2% 미만 성장했던 게 네 번이잖아요. 23년 24년 25년, 지금 저성장 기조로 가고 잠재성장률 밑으로 왔어요.

여기서 저는 재정의 역할 이 부분 되게 고민이 커요. 지금 추정도 손해본 사람들 안 해 주려고 하잖아요. 본인이 일으킨 책임도 지금 안 지려고 그래요. 7조 원 제가 아까 계산해 드렸잖아요. 한국은행도 정확히 짚으셨잖아요. 소비, 내수 이게 직접적인 여파다. 그러면 그쪽으로 보상을 해 줘야 돼요. 재정승수 0.2요, 그러면 35조 딱 필요하네요. 그렇지요? 7조 메꾸려면 35조잖아요. 재정승수 0.15 계산했잖아요, 박수영 간사님이. 35조 아닌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총재님, 저는 앞으로 총재님이, 여러 가지 발언들을 많이 하시는데 통화정책이기는 하지만 통화정책과 다 관련된 발언들을 하신 거예요, 이제까지. 한국은행이 발언하실 걸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끄러운 한국은행’ 얘기를 하던데 저는 총재님께서 기재위든 어디든 한국은행 보고서도 많이 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통화정책과 다 관련된 부분들이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들 한번 발언을 해 주세요. 좀 ‘시끄러운 한은’ 비판도 많이 받기는 하는데……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저희들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할 거고 최근의 상황이 매우 정치적이라 여러 오해가 있을 소지가 있는 데 대해서는 좀 더 조심을 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좀 비관적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2% 밑으로 가는 것은 이제 구조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지금 2% 성장이면 평균적인 성장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2% 성장이

낮다고 생각하면 여러 무리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영환 위원** 잠재성장률 밑으로 들어오니까 문제입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밑으로 들어온 거를 재정을 통해서 100%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으로 커버하게 되면 1년은 커버할 수 있지만 그다음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35조 말씀하실 때 저는 왜 35조로 생각하지 않느냐면 지금 성장률이 그 밑으로 떨어졌지만 그거를 100% 커버하려다 보면 그다음에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의 반 정도 커버하는 수준으로 하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잠재성장을 올리는 것이 올바른 경제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걸 위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우리도 이제 점차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지요. 철강·알루미늄에 대해서 부과를 하겠다, 3월 달에 발효 예정이 돼 있고. 또 미 상무부에서 각 국가별로 현재 관세·비관세 현황을 다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예를 들어서 상호관세 차등을 부과하겠다. 그리고 가장 우리의 아킬레스건이 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까지도 지금 제시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거냐, 각자 시나리오가 여럿 있지요. 여하튼 전체적으로 보니까 수출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을 경우에는 2.5%까지 그리고 실질 GDP는 약 0.6%p까지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대응을 잘해야 되겠지요. 특히 무역조사가 일어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의 현 실상을 정확히 잘 파악을 하고 우리 입장을 정립하고 그런 정확한 실상에 대해서 미국 측하고 같이 서로 교섭하고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미 무역흑자가 작년에 557억 불이지요? 차관님, 맞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8위 국가입니다.

○**안도걸 위원** 그렇지요. 9위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트럼프 마지막, 21년도 대비해 가지고 2.5배가 지금 늘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무역흑자가 많이 늘긴 늘었는데 우리 무역흑자만큼, 무역흑자 상당 부분을 대미 직접투자로 했지요, 자발적이든지 비자발적이든지 간에.

그래서 트럼프 1기 때 보니까 우리가 벌어들인 무역흑자가 물경 96%, 대부분을 다 대미 직접투자로 환원을 줌 시킨 거지요. 바이든 때 71%고. 그래서 두 정부 기간 동안에 한 79%의 무역흑자를 다 현지 투자로 환원을 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총수출에서 중간재 수출의 비중이 50% 훨씬 넘어가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현지 투자에 뒤따른, 연계된 아마 그러한 수출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소비 완제품을 팔았다 이런 것보다는 미국이 원하는 현지 투자 그리고 미국과의 글로벌 공급망의 어떤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불가피 발생을 했더라는 점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논리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통상 패키지 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개별적인 관세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이것 관련해 가지고 지금 패키지 딜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상응한 딜, 서로 교섭할 상대 창구가 누구인지 그리고 만일의 경우 미국이 다소 무리한 협상을 요구한다면 우리가 이에 대해서 좀 공격적으로, 우리도 대응 카드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안 위원님 말씀하신 FDI 같은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 포함해서 행정부에 설명할 때 중요한 팩트 시트(fact sheet)로 포함시켜서 저희가 설명할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트럼프 정부의 구체적인 요구나 그런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준비 중인데 적절한 계기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안도걸 위원님 꼼꼼한 자료 준비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형 위원** 아까 두 분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그냥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면, PF 문제에 대해서 현재 구조조정 중이니까 불가피하다면, 상황은 그런데 지난 2~3년 동안은 적시 대응했나 이런 거는 계속 논쟁 중인 거라고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압류비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2차관님께 이거는 좀 한번 챙겨 달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오기형 위원** 민사집행법이 통과돼 가지고,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185만 원 최저생계비 보호 기준이 있는데, 여러 가지 질의들이 왔어요. 국세 징수나 지방세 관련한 과정에 법률상 채납자와 관련돼서 보호되는 기준이 250만 원으로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통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한번 기준을 좀 봐 주십사 하고.

그다음에 계좌에, 압류방지통장에 똑같이 이게 적용되느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하면 법안 발의를 좀 하려고 그러니까. 이것 점검만 하시면 되는 주제기 때문에 한번 챙겨 봐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말씀하신 취지대로, 국세징수법이 아직 시행 시기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떤 방안이 더 적절한지 검토해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예, 아직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리다 만 게,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관련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

던 것은 22년도 4분기에 전혀 집행된 게 없었고 23년도에는 일부 있고 작년에는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과 기재부 사이에서는 기조적 부족 자금에 대한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면 안 된다 이런 건데, 그런 의혹들이 있어서 한국은행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하고 있는지 의문이 좀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작년엔 제도를 개선한 이후에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대출 사항을 협의할 때 좀 더 타이트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기형 위원** 앞에 화면 잠깐 봐 주시면, 이걸 보니까 되게 이례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고국장님이 따로 설명해 주신다고 그래서 나중에 한번 설명 듣고, 한국은행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말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저도 이걸 봤는데 2024년 하반기에 저렇게 많이 늘어난 거는 제 생각에는 하반기에 저희 4/4분기 성장률이 굉장히 나빠져, 생각보다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수가 그때 훨씬 덜 걷혔고……

○**오기형 위원** 미스매치가 있어서 조달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미스매치가 있어서 이렇게 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기형 위원** 따로 자료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지금 세수결손이 45.9조, 지금 올해 예산안 대비해서 작년 결과치 비교해 보면 한 46조 가까이를 더 걷어야 되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할 것 같고 올해 또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것 아니냐…… 이 상황 속에서 조세 정책은 뭐냐, 도대체 대안이 뭐냐 이걸 좀 묻고 싶습니다.

아까 상속세 논쟁 많이 하시는데 이걸 논쟁의 영역이기 때문에 누가 옳다, 그르다 절대적으로 그렇게 비판할 수는 없지만 세수결손이 이렇게 쌓이고 있는 형국에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감세 경쟁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다고 봅니다. 상당 기간을 그것도 고민해야 된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각 항목별로 그러면 어떻게 풀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그런 대안을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가 설명해 주고 안 되면 같이 논쟁을 해야 된다. 이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뭐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1월 세수가 2월 말에 나오면 오기형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하방 위험이…… 저희도 좀 구체적 분석을 해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만약에 3년 연속 세수결손이 나온다면 저희 기재부의 추계 능력이랄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도 말씀드렸던 관세 부분이랄지 하방 힘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의를, 앞으로 계속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은 유류세랄지 아까 말씀하신 반도체 부분 지원이랄지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하고, 아까 오기형 위원님 말씀하신, 연중 조세소위가 열린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정부가 소급해서 하는 부분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기형 위원 작년엔 최상목 장관이 1월 초부터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도 책임 안 지셨어요. 그래서 올해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좀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오기형 위원 그렇지 않으면 너무 무책임한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차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규근 위원 1차관님, 상속세 감세 움직임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계속 기재위에서도 그 기사가 인용이 되고 일부 위원님들께서 그 기사를 인용해서도 질의를 하시고 또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 안 하고 답변하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모습이 보여서 저는 너무 자괴감을 느낍니다. 정부가 이렇게까지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답변해도 되는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저는 법무부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했는데요. 아까 고액의 상속세 때문에 우리나라 자산가들이 해외로 이주할 가능성이 네 번째로 높다라는 그런 기사가 인용이 되었고 차관님께서 파이낸셜 타임즈, 그런 기사 본 적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차규근 위원 차관님, 그 조사 어디서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민간……

○차규근 위원 민간 기업인데 그 업체 어딘 줄 아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잘 모르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영국의 헨리앤파트너스라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 뭐 하는 회사인 줄 아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모르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그 회사 자산운용, 자산평가 회사도 아니고요 해외 시민권 자문업체입니다, 해외 시민권 자문업체. 자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그리고 해당되는 그 기사 내용 실체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정부가 고액의 상속세 때문에 우리나라 자산가들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해외로 이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근거로, 그것이 이 국회에서 인용된다는 사실 자체 저는 너무 참담하고요.

그 조사, 헨리앤파트너스가 링크트인이라는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링크트인에 1년에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연봉을 조사한 겁니다. 해외 이주한 것도 아니에요. 상사 주재원, 한국 사람이 미국 상사 주재원 가 가지고 1년에 6개월 이상 있으면 여기에 다 이주한 걸로, 그게 해외 자산 이동으로 그렇게 도깨비로 완전히 둔갑이 돼 가지고 활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상속세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 개선의 전제조건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헨리앤파트너스 관련되는 그 기사…… 이게 처음에 발단이 된 것은 모 매체가 1면에 이걸 보도했어요, 1면에. 그 의도가 무엇인지 저는 참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그 언론도 이러한 내용을 알고 보도를 했는지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정부에서, 기재부에서 한번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다음에 조세소위에서 상속세 관련 논의가 될 때 다시는 그 부분이 부정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 1차관·2차관님, 질문은 아니고 그냥 들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이종욱 위원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건 대한민국 미래를 지키는 겁니다. 지금 추경 하게 되면 민주당의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결국 조기대선을 염두에 둔 포퓰리즘 정치 추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재인 정부 방만 재정 후에 이렇게 허투루 재정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국면 전환용 수십조 대규모 추경 그리고 선심용 현금살포 추경은 무책임한 추경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더 신중하게 꼭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추경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추경을 하더라도 하반기 이후에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상반기까지는 세입 상황이나 기존 예산집행 현황 등을 점검하고 추경 규모도 총량으로 관리재정수지 마이너스 3%를 넘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하려면 기존 사업 구조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기재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권한대행 역할까지 하려고 하니깐 여러모로 힘들 겁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기재부가 중심을 잡고 재정 파수꾼으로서 기본 임무에 더욱 충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추경에 대해서 기재부가 추경 없다는 입장에서 국정협의회를 통한 조속한 추경 논의를 오히려 정치권에 촉구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 저는 상당히 의외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성과의 큰 축 하나가 건전재정 전환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추경은 대통령 취임 시에 한 번 하고 그 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사실 재작년 성장률이 1.4%대였습니다. 그 어려운 국내외 복합위기 상황에서도 그리고 대규모 세수결손 상황에서도 숭한 유혹, 비난을 받으면서도 추경 없이 버텨 왔습니다. 이처럼 재정총량을 준칙 범위 내로 관리하고 R&D 예산 삭감 등 단행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기재부가 돈을 풀지 않아서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졌다는 말도 나왔지만 국가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건전재정을 유지해야 된다는 기재부 주장에 대통령이 동의해 준 겁니다. 힘을 실어 준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탄핵심사 중에 있다고 해서 정책 기조에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고 생각합니다. 비상계엄이 탄핵심사 중이지 기재부나 건전재정 정책이 탄핵심사 중인 건 아닙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 하는 호통을 들었지요. 이번 윤석열 정권에서도 기재부는 끝까지 곳간지기로서의 노력으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정치권의 추경 요구에 대해서 누군가는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기재부가 그런 악역을 하고 버텨 줘야 됩니다. 대통령의 탄핵심사 중에도 건전재정의 고삐를 더욱 바짝 쥘 것이 국민이 기대하는 기재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론 지금까지 잘해 왔고 앞으로 국정협의회에서도 잘해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너무 과민한 기우이기를 바라고요. 위에서 지켜 주고 막아 줄 대통령이 없어서 여러 모로 힘들겠지만 기재부 본연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잡아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진성준 위원님, 황명선 위원님, 박수영 위원님, 이인선 위원님 등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소관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두 분 간사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속세법 개정안과 담배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서 소위 개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개최해서 필요한 부분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진성준 위원 위원장님, 담배사업법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언석 간사님께 일정 부탁을 드리는 상황이었습시다.

같이 일정을 두 분께서……

○정태호 위원 아니, 그거는 합의했어요. 25일 날 하는 거로 합의를 했는데 위원장님이 안 잡아 주니까 못 하고 있는……

○위원장 송언석 아니, 그러니까 오늘 처리해야 될 부분이 아직 처리가 안 돼서 한 번 상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부1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창용 총재님을 비롯한 한은 직원 여러분도 수고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산회)

○출석 위원(26인)

구자근 김영진 김영환 김태년 박대출 박성훈 박수영 박홍근 송언석 신동욱
 신영대 안도걸 오기형 윤호중 이인선 이종욱 임광현 정성호 정일영 정태호
 진성준 차규근 천하람 최기상 최은석 황명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전문위원 정지은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범석
 제2차관 김윤상
 차관보 윤인대
 국제경제관리관 최지영
 재정관리관 안상열
 기획조정실장 김진명
 예산실장 김동일
 세제실장 정정훈
 경제정책국장 김재훈
 정책조정국장 강기룡
 국고국장 황순관
 재정정책국장 장문선
 재정관리국장 박봉용
 국제금융국장 김재환
 대외경제국장 민경설
 사회예산심의관 조용범
 경제예산심의관 강윤진
 조세총괄정책관 박금철
 소득법인세정책관 조만희
 재산소비세정책관 김병철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부총재 유상대
 부총재보 이종렬
 부총재보 김웅
 부총재보 채병득
 부총재보 권민수
 부총재보 박종우
 기획협력국장 권태용

금융결제국장 이병목

발권국장 김기원

【보고사항】**○위원 개선**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박수민	신동욱	국민의힘	2025. 2. 14.

○의안 회부**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6. 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6)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6. 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4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6. 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4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6. 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6. 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6.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66)

이상 6건 12월 27일 회부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7.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9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7.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7. 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7.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7.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2)

이상 5건 12월 30일 회부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0.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0. 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75)

이상 2건 12월 31일 회부됨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1.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2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1. 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1. 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1. 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34)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1. 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1.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1. 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1.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1.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1.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6)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1. 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1.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71)

이상 12건 2025년 1월 2일 회부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0)

이상 2건 1월 3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3.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7)

1월 6일 회부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6. 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6.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4)

이상 2건 1월 7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7. 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9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7. 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0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7. 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09)

이상 3건 1월 8일 회부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8.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2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8.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8. 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39)

이상 3건 1월 9일 회부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9.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6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9.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9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9. 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05)

이상 3건 1월 10일 회부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4.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4.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5)

이상 2건 1월 15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5.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5.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34)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5. 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5. 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1)

이상 4건 1월 16일 회부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6.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8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6.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8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6.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84)

이상 3건 1월 17일 회부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7. 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9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7.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0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7.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03)

이상 3건 1월 20일 회부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0.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9)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0.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0.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2)

이상 3건 1월 21일 회부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1.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1. 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7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1.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84)

이상 3건 1월 22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2. 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9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2.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9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2.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2.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2. 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0)

이상 5건 1월 23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7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7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9)

이상 11건 1월 24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4.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4.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4.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4.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7)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4.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4. 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4.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8)

이상 7건 1월 31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31.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31.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0)

이상 2건 2월 3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3.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3.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3. 임피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6)

이상 3건 2월 4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4. 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4.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2)

이상 2건 2월 5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5.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5.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5. 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9)

이상 3건 2월 6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6. 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6. 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6.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6.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7)

이상 4건 2월 7일 회부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7.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7.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7.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7. 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5)

이상 4건 2월 10일 회부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0.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0.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0. 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0. 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3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0. 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3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0. 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37)

이상 6건 2월 11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1.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1. 이진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72)

이상 2건 2월 12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2.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80)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2. 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9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2. 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0)

이상 3건 2월 13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3.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3.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23)

이상 2건 2월 14일 회부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4. 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7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4.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76)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4.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4.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78)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4.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8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4.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87)

이상 6건 2월 17일 회부됨

○청원 회부**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세 특별법 도입에 관한 청원**

(2025. 1. 20. 정지인으로부터 김정호·서왕진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87)

1월 21일 회부됨

청소년 건강 보호 등을 위한 불법 전자담배 퇴출, 탈루 세액 징수 및 담배 동일규제 등을 위한 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등에 관한 입법 청원

(2025. 2. 6. 맹희석으로부터 김준혁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102)

2월 7일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분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개정형태	소관부처
대통령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5066호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5087호	일부개정	통계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5120호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제35124호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제35125호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	제35126호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	제35127호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제35128호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5129호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5130호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5228호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제35229호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구분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개정형태	소관부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부령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089호	일부개정	통계청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1090호	제정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093호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094호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095호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097호	일부개정	국세청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1100호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1101호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102호	일부개정	기획재정부